

民主統一論

(北韓實態)

통일연수원

차 례

I.北韓의 政治

1. 序 言5
2. 北韓政權의 形成過程7
3.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15
4.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21
5. 國家機關 體系28
6. 權力承繼의 性格과 變化展望34
7. 結 言41

II.北韓의 經濟

1. 序 言45
2. 經濟體制와 政策46
3. 主要 部門別 現況55
4. 南北經濟統合의 可能性77
5. 結 言82

III.北韓의 社會

1. 序 言87
2. 社會政策과 社會體制의 構造的 特性88
3. 住民生活91
4. 冠婚喪祭와 歲時風習110
5. 保健·醫療115

| | |
|----------------------|-----|
| 6. 言論實態 | 121 |
| 7. 結 言 | 124 |
| IV. 北韓의 教育 | |
| 1. 序 言 | 129 |
| 2. 教育理念과 目標 | 130 |
| 3. 教育政策 | 132 |
| 4. 教育行政과 學制 | 143 |
| 5. 教育內容과 方法 | 149 |
| 6. 結 言 | 157 |
| V. 北韓의 對外政策 | |
| 1. 序 言 | 161 |
| 2. 對外政策 基調 | 162 |
| 3. 地域別 對外政策 | 170 |
| 4. 政策變化의 展望 | 180 |
| 5. 結 言 | 184 |
| VI. 北韓의 軍事 | |
| 1. 序 言 | 191 |
| 2. 北韓軍의 形成과 性格 | 192 |
| 3. 軍事思想・政策・戰略 | 197 |
| 4. 軍事組織・制度 | 210 |
| 5. 軍事能力 | 216 |
| 6. 結 言 | 228 |

I (北韓의 政治

李 禎 秀 (統一研修院 教授, 政博)

| | |
|----------------------------|----|
| 1. 序 言 | 5 |
| 2. 北韓政權의 形成過程 | 7 |
| 가. 蘇聯軍政 政策과 北韓政權의 成立 | 7 |
| 나. 金日成 獨裁體制 形成 | 10 |
| 3.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 | 15 |
| 가. 形成背景 | 15 |
| 나. 主體思想의 內容 | 17 |
| 다. 主體思想의 限界點 | 19 |
| 4.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 | 21 |
| 가. 黨의 成立背景과 理念 | 22 |
| 나. 理念 및 目標 | 23 |
| 다. 黨의 組織과 役割 | 24 |

| | |
|-------------------------|----|
| 라. 友黨과 外廓團體 | 26 |
| 마. 黨·軍 關係 | 27 |
| 5. 國家機關 體系 | 28 |
| 가. 主權機關 | 28 |
| 나. 行政機關 | 33 |
| 다. 裁判機關 및 檢察機關 | 33 |
| 6. 權力承繼의 性格과 變化展望 | 34 |
| 가. 權力世襲의 正當化 | 35 |
| 나. 金正日의 權力基盤 | 36 |
| 다. 金正日의 偶像化 實態 | 38 |
| 라. 世襲體制의 變化展望 | 39 |
| 7. 結 言 | 41 |

1. 序 言

1990년대에 진입하여 世界史는 幻想的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동·서독 統一이며 소련에서의 공산당 解體와 연방의 崩壞 등이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47년간의 지루한 分斷의 역사를 하루빨리 終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對外的으로는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으며 가장 민감했던 核問題마저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동의함으로써, 일응 불가항력적인 국제환경의 변화와 내부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金日成은 1992年 新年辭에서 “1991년은 준엄한 시련의 한해”라고 솔직히 시인한 것을 보면 저들의 정책변화는 어쩔 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외적인 壓力과 挑戰에 쫓기면서도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느니,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선전·선동하며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애국적 인민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경의를 표현한다.”는 등 선동을 포기치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民族의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져 平和와 統一로 귀결되도록 꾸준히 설득하며 적극, 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단순히 증오와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을 함

계 수행해야 할 民族共同體의 일원이며 統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實體를 정확히 아는 것은 더더욱 先決的 課題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한정치체제는 김일성 1인의 전체주의 지배체제에서 金日成을 신격화 하는등 점차 신정체제로 개편해가는 인상을 준다.

1980년대에는 김일성 수령이 왜 지배해야 하는가를 문제시하였으나, 1990년대에 와서는 모든 人民大衆이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효성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首領을 떠받드는 것은 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유하자면 基督教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북한체제는 東洋的 전제군주제와도 닮은 면이 적지 않다. 즉, 孝道의 政治化로 북한주민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지배체제는 근대적 전체주의 專制體制라기 보다는, 지배자의 神性에서 지배의 正統性을 찾는 神政體制¹⁾라고 할 수 있다.

本 教材는 이러한 관점에서 北韓政治體制的 特徵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2章에서 北韓政權의 形成過程, 3章에서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 4章에서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 5章에서 國家機關體系, 6章에서 權力承繼의 性格과 變化展望을 정리하되 民族統一을 위한 北韓政治體制的 變化可能性 診斷을 中心으로 하였다.

1) 李相禹, '김일성체제의 특질', 『북한40년』, 을유문화사, 1988.

2. 北韓政權의 形成過程

가. 蘇聯軍政 政策과 北韓政權의 成立

북한의 共産化는 소련의 점령지역 共産化政策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소련에서 入北한 김일성집단에 인계되어 肅清과 社會改革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토대를 만들었고, 현재는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해 치닫고 있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이끄는 붉은 군대가 북녘땅에 상륙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평양에 소련 점령군사령부를 설치하고 8월말까지 北韓全域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한편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위로는 연해주 군관구 軍事會議委員이며 훗날 美·蘇共同委員會 소련측 수석대표와 북한주재 초대 대사(1948~1951년)를 역임한 스티코프 대장의 지휘를 받았으며, 아래로는 점령정책을 직접 보좌한 민정사령관 로마넵코 소장과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의 보좌를 받았다. 이들 3인이 향후 北韓共産化政策을 -金日成을 앞세워- 추진하여 갔다.

김일성은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을 통해서 入北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평양에는 古堂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평남지부」와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이하 조공) 평남지구위원회」가 이미 결성되어 있었다.

우선 소련군의 점령정책은 各道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日帝로부터 접수한 行政權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었다.

평안남도의 경우 8월 27일 조만식 이하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이

하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소속 공산주의자를 각각 16명씩으로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구성케 했다.

인민정치위원회의 명칭은 「건준」측이 정치위원회를, 「조공」측이 인민위원회를 각각 주장하였는데 이를 합친 것이며 이 과정에서 ‘統一戰線戰術’이 구사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9월 13일에는 황해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5도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 갔으며, 이후 10월 8일 북조선 5道人民委員會가 구성되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道 行政局으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신탁통치안」을 놓고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間에 의견 분열을 가져 오면서 붕괴되고 이어서 탄생한 것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이다.²⁾

우선, 蘇聯 軍政當局의 당면과제는 스탈린에 의해 선정된 金日成을 앞세워 북한의 소비에트化를 추진할 共產黨을 발족시키는 것이었다.

소련 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장군환영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김일성을 처음으로 大衆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한 다음,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시켰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일~13일 사이에 평양시 군중대회 직전 극비리에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새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략에 대하여”란 이른바 강령적 연설을 하였는데, 이는 스탈린이 金日成을 북한통치자로 확정하였음을 반증한 것이다.

이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 이어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졌다. 이것은 서울의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을 ‘中央’으로 한 것이다.

2) 서대숙, 『김일성』, 청계연구소, 1989. pp. 60-61.

1945년 12월 17일에 「分局」 3차대회에서 分局을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金日成은 마침내 북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이 책임비서가 된지 2개월이 안된 1946년 2월 8일, 소련 군정당국은 극비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급조하고 그를 위원장에 선출케 했으며, 金日成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중앙주권기관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이 곧 북한의 단독정권의 모체가 된다.

金日成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民主改革’이라 부르는 土地改革을 비롯한 일련의 소비에트化的 정지작업을 강행해 왔던 것이다.

민주개혁을 단행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제 보다 높은 단계의 정권형태로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選舉라는 절차를 통하여 수립되었다고 하여, ‘임시’라는 글자를 떼어 버린 것이다.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 3일에 道·市·郡 인민위원회선거를 하였는바, 첫 민주선거라고 하면서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形式的 虛構的인 민주주의 선거에 불과한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憲法草案은 1947년 11월 18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조선임시 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 조선임시 헌법제정위원회는 헌법초안을 확정하였으며, 1948년 4월 29일 소집된 북조선 인민위원회 특별회의는 이를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헌법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그리고 1948년 2월 8일 「朝鮮人民軍」이 창설됨으로써³⁾ 單獨政府 樹立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었다. 북한이 단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시기를 늦춘 것은 그들이 분단

3) 북한은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창건일」로 기념해 오다가 1978년부터는 1932년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4월 25일로 변경하였음.

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한낱 허울좋은 政治宣傳 目的때문이었다.

나. 金日成 獨裁體制 形成

김일성은 자신의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잔인한 肅清作業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사회영역에서는 소위 ‘반봉건적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소비에트化 예비단계 정책을 단행하였다.

우선, 政治的 숙청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은 숙청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켰는데, 제1단계에서는 南朝鮮勞動黨派(1952년), 제2단계에서는 蘇聯派(1953~1956년)와 延安派(1956~1958년), 제3단계에서는 國內派(1958~1970년) 그리고 제4단계에서는 自派인 빨치산派(1969년~)를 각각 숙청하였다. 이 4단계 숙청과정에서 김일성의 빨치산파는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와 동맹하여 남로당파를 제거하고, 다음에는 국내파와 제휴하여 소련파와 연안파를 소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파를 숙청하는 데는 누구와도 손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모든 政敵을 소탕한 다음 自派인 빨치산파의 批判勢力에 화살을 돌렸다.

김일성은 숙청을 실제로는 權力鬭爭이면서도 권력투쟁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이데올로기투쟁으로 분장시켰다.

1929년 코민테른의 「12월테제」에서 ‘조선의 당면한 혁명로선’을 “반제·반봉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후에는 소련군사령부의 직접 지휘하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조직되었으므로 路線上의 혼란이 크게 일어날 까닭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은 항상 이데올로기투쟁으로 분장되어 권력투쟁에서 패배당한 宗派는 ‘右翼的 偏向’, ‘左翼的 機會主義’, ‘宗派分子’로 낙인이 찍히고,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名分을 내세웠다.

김일성은 우선, 반대파를 제거하는 肅黨鬭爭을 벌였다.

처음 대상으로 떠오른 사람이 현준혁이다. 현준혁은 북한을 남한과 분리하여 소련의 衛星國으로 만들려는 김일성의 ‘民主基地路線’에 同意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그의 잠재적 政敵이기도 한 현준혁을 1945년 9월하순 연안과의 장시우로 하여금 암살케 했다.

또한 民族主義者로 북한주민의 全幅的인 지지를 받았던 古堂 曹晚植 先生을,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에서 결정된 反民族主義的 「信託統治案」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46년 2월에 연금하는 등으로 그 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숙청은 6·25남침전쟁 시기부터 시작된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위시한 남로당파를 숙청하게 된다.

사실 박헌영은 서울에 「조선공산당」을 再建하여 ‘黨中央’의 권위로 행세하며 북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다. 그래서 북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한 것도 바로 그러한 영향과 관련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에게는 위협적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김일성은 1948년 정권 수립과정에서 박헌영을 副首相 겸 外相으로 옹립하였으나, 6·25남침전쟁의 발발원인이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權力鬭爭의 產物이라는 이른바 ‘전쟁발발의 북한내부기원설’⁴⁾이 나올 정도로 두사람의 권력암투가 지속되었다.

결국 김일성은 6·25남침전쟁의 패전책임을 엉뚱하게 박헌영 등 남로당파에 전가시켜 전면 숙청을 단행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一次 공격시 박헌영은 우리를 속였다. 박헌영은 남조선에 20만 당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남조선에 당원이 20萬은 고사하고 1,000명만이라도 있어서 부산쯤에서 과업을 하였더라면 정세는 달라졌을 것”⁵⁾이라고 하면서 박헌영에게 6·25

4) 김하준,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박영사, 1984. p.86.

5) 김일성,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대하여』, 평양, 1969. p. 117.

의 南侵戰爭 失敗責任을 轉嫁하였다.

김일성은 토착공산주의자들의 중심이었던 박헌영의 권위를 말살하고 어디까지나 김일성 1人支配下에서 통일된 공산당을 구축하려는 속셈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숙청대상은 소련파의 巨頭이며 6·25남침전쟁 당시 黨부위원장 겸 조직담당서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허가이었다.

김일성은 1951년 11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허가이의 당조직사업에서의 과오를 신랄히 비판했다.

예컨대 전쟁시 당증을 버리고 달아난 당원들에 대한 ‘責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당의 성장을 저해한 점에 대해 비판이 가해졌다. 결국 그는 김일성의 압력에 의하여 自殺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연안파와 소련파의 숙청이다. 당시 소련에서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格下運動과 平和共存政策이 제기되었다.

김일성은 노동당 3차대회에서 평화공존정책 등을 전적으로 찬양하면서도 북한에서 개인숭배를 펴뜨린 것은 오히려 ‘종파분자’들이라고 역습, 개인숭배 반대운동을 자기의 獨裁權力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였다. 이에 최창익(연안파)과 박창옥(소련파) 등은 김일성이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과 동구 공산권국가를 방문(1956년 7~8월)하는 틈을 타 김일성의 除去를 모의, 1956년 8월 30일 김일성의 歸國報告를 위한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反김일성파를 중심으로 그의 개인숭배 및 전후복구 경제정책의 실패를 들어 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8월종파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일성파의 소동으로 회의가 流産됨으로써 영성한 김일성 제거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김일성은 1958년 5월 30일 「당중앙 집중지도사업」을 단행, 反黨反革命分子 색출운동을 일으켜 全北韓社會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이 와중에서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를 막론하고 반 김일성세력은 모조리 숙청되었는바, 김두봉·최창익·한빈 등 연안

과는 모조리 숙청되고 駐蘇大使였던 이상조와 김일성편에 가담했던 허정숙 정도가 살아 남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의 提携勢力이었던 다른 파벌의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모두 거세되었으며,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80명과 후보위원 50명은 모두 金日成의 빨치산파와 그의 盲從派들이었다.

그후 숙청의 표적은 金日成 自派가 되었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5차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로선’이 제기되어 국방력 강화문제가 當面課業으로 등장하자, 김일성은 자신의 對南軍事路線에 반기를 든 빨치산파 중에서 甲山派의 박금철(당부위원장 및 비서국비서)과 이효순(당부위원장 및 중앙연락국장) 및 그들의 부하들을 1967년 5월 모조리 숙청하였다.

그리고 숙청의 칼날을 계속해서 軍部로 돌렸다. 1969년 허봉학(군정치총국장, 대남공작비서), 김창봉(민족보위상), 최광⁶⁾(군총참모장) 등을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문란시켰다고 하면서 숙청하였다. 이어서 1970년 일찍이 민족보위상(1960~1962년)을 역임한 부수상 김광협을 國防政策을 반대하였다는 罪目으로 숙청하였고 197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며 군정치총국장이었던 이용무를 反김일성계로 몰아 숙청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정치세력은 완전히 김일성·김정일세력으로 一色化되었으며, 오늘날 북한의 ‘神政體制’는 이같은 피의 숙청사에 의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金日成은 경제·사회영역에서도 소위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행하였다. 즉, 1946년 3월 5일 「土地改革法」을 비롯하여 「重要産業 國有化法」(1946. 8. 10), 「農業現物稅法令」(1946. 6. 27), 「勞動

6) 최광은 현재 인민군총참모장으로 복권되었으나, 소련 88특별여단시절 최광의 처가 김정숙 사후의 어린 김정일을 보살피 준 인연이 있다고 함.

法令」(1946. 6. 24) 등을 제정, 이른바 ‘반제반봉건 민주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이행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으며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원래 土地改革은 共產主義者들의 共產化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소련은 점령지역에서는 반드시 土地改革을 단행하여 공산화를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는 토지소유법에 따라 5정보 이상 소유한地主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貧農과 雇農에게 무상 분배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토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고용자·소작인들로 「農村委員會」⁷⁾를 구성케 하여 지주들을 처리케 하였다. 결국 토지개혁을 통해서 동족간에 참혹한 계급투쟁을 하도록 하여 놓고 그 와중에서 김일성은 그의 세력을 침투·확장시켰으며 공산당의 革命性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토지개혁 3개월 후에 공포된 「농업현물세법령」(1946. 6. 27)과 휴전 직후부터 강행된 農業集團化政策(1953.8)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기쁨은 새로운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北半部를 民主基地로 강화하려면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촌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현시기에서 농촌진지를 강화하려면 우리나라 농촌을 점차 사회주의 협동화의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1956년 말에 협동조합들을 里單位로 통합하고 里인민위원장이 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을 겸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종 조합을 창설하여 개인상공업 및 수공업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상공업의 협동화를 강행하였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社會主義的 基礎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의 ‘全體主義的 獨裁體制’가 구축된 것이다.

7) 『김일성 선집』, 제1권, p. 61.

3. 主體思想의 本質과 問題點

가. 形成背景

主體思想은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당 선전선동일꾼들에게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그 시발점을 1930년대라고 造作하여 遡及하고 있다.

1950년대 북한의 내외사정과 관련해 보면 對外的으로는 스탈린의 사망(1954년)에 따른 宗主國으로서의 위성국가에 대한 지배간섭이 약화된 가운데, 흐루시초프의 등장(1954년)과 더불어 ‘社會主義에로의 多樣한 路(many way to socialism)’을 인정하여 공산권내부에 독자노선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바, 김일성은 이 시기를 틈타서 ‘主體’를 표방하게 되었다.

또한 對內的으로는 김일성의 후원자인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권력유지에 불안을 갖게 되었다. 소련에서의 흐루시초프 등장과 스탈린 격하운동은 당내의 各 政派(연안파, 소련파)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小스탈린格인 金日成은 자기의 권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 시기를 역이용하여 반대파들을 中·蘇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非主體로 몰아 肅清을 단행하였다.

金日成은 당창건 20주년(1965년) 기념연설에서 1950년대 상황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은 1950~1957년 무렵에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때에는 당안에 숨어있던 反黨 宗派分子들과 완고한 教條主義者들이 修正主義의 기초 위에서 서

로 결탁하여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당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당의 路線과 政策을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지도부를 뒤집어엮기 위한 음모활동을 감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기한 인용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主體思想의 형성배경은 표면상 사대주의와 관련된 듯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소위 宗派主義者들을 제거하기 위한 造作된 명분에서 비롯되었다.

김일성파는 스스로 항일투쟁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쟁취하였다는 근거로 ‘항일 혁명전통’을 내세워, 이를 기초로 주체를 표방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김일성 1人獨裁體制를 확립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군 점령사령부의 정치사령관인 레베데프는 김일성의 抗日戰爭 참전에 관해서, “김일성의 抗日戰爭 참전은 허위이며 그들이 歷史를 왜곡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당시 김일성이 찾아와 “해방전쟁에 참전케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⁸⁾고 한다.

또한 소련에서 입북한 김일성이 ‘조선혁명의 주체’임을 자부하는 박헌영 일파를 모두 숙청하고 나서 그 레테르(letter)만을 차용하여 스스로를 유일한 주체로서 날조하고 있는 점을 봐도 主體思想의 배경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기원에 대해서 1975년에는 1926년에 창시되었다고 하더니, 1982년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선포가 1930년 6월 김일성이 카룬(장춘)에서 열린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의 간부 회의에서였다고 주장하는 등⁹⁾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8) 중앙일보, 「秘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1991. 8. 26. 字.)

9) 김일성, 당창건 30주년 연설, 참조.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p. 7.

나. 主體思想의 內容

주체사상은 하나의 哲學으로서 체계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처해 있던 내외정세의 여건아래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제시된 戰略戰術이다.

즉, 1967년 12월 「제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체사상을 당 및 국가활동과 혁명 및 建設의 지도원칙으로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시하였다.

1972년에 와서 주체사상의 내용을 인민대중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人民大衆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¹⁰⁾ 라고 규정한다. 즉, 그들은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偶像化論理와 결합되어 首領의 統治名分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즉,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혁명운동에서 지도의 문제는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이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되는가의 문제와 어떻게 력사적 사명을 다하는가의 문제는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¹¹⁾ 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은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人民大衆이 革命的

10) 김일성과 요미우리 신문기자 대담(1972. 1)

11) 김정일, 앞의 책, p. 18.

임무·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바로 首領의 唯一的 統治體制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수령·당·인민대중의 관계를 ‘社會政治的 生命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인민대중이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조건으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社會政治的 集團論을 바탕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지배논리를 다음과 같이 유도해 낸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 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인민대중과 수령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主從關係였으나, 1986년의 논문에서는 혁명의 주체를 수령·당·인민대중에 두고, ‘하나의 통일체’로서 상호 유기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전술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바 일방적 지배보다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忠誠을 誘導하는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에서는, 주체사상은 당·수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심단결은 忠誠과 孝誠이라고 설명하면서 인민대중은 수령에게 ‘충신과 효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金日成을 神格으로 떠받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령과 인민대중의 결속을 동양적 가치관과 연결하는 것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이후에 더욱 강조되어졌다.

다. 主體思想의 限界點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또는 神政體制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唯一思想으로 형성·수립되었으며 마침내 住民의 行動規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주체사상은 1958년 당내 반대세력에 대해 外國思潮를 기계적으로 따른다는 구실을 붙여 非主體로 몰아 肅清하여 김일성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으며,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라”는 「로동신문」사설을 계기로 대외적인 자주노선의 선포에 이르고, 이어서 1967년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同格으로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문에 指導原則으로 되면서 唯一思想體系라는 용어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는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하였고,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조는 “인민공화국은 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사실 주체사상은 對內的으로는 수령의 통치명분을 제시함으로써 독재체제를 확립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이념을 여기면서까지 김정일로 하여금 권력세습체제를 구축하게 했다. 그리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하는 것도 인민대중”이

라고 하면서 이른바 정치·도덕적 자극방식으로 인민의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동원함으로써 자력갱생식 경제건설을 하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主體思想을 앞세워 비동맹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中·蘇의 對北韓 영향력을 견제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主體思想은 대남전략전술과 관련,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는데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美國의 식민지로 규정,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이론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北韓의 對內外 모든 부문에서 金日成의 神政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萬病通治藥’이며 ‘傳家の 寶刀’이기도 하다.

그러나 主體思想은 명분과 현실에서 괴리가 있으며, 북한이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는데 점차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말로는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면서 반드시 수령의 옳은 지도,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한다면, 수령만이 진정한 주체일 것이며 인민대중은 더이상의 주체가 아니라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객체이며, 예속화된 존재로 전락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非主體的인 人民이 되었다.

또한 主體思想은 인간의 사회·역사적 속성에서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주민을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가장 非創造的인 인간로보트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야말로 인민대중이 지닌 무한한 잠재역량을 無力化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主體思想은 선진기술정보의 수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우리식으로 사는 낙후된 사회를 만들었다. 이상의 모든 요인들이 北韓經濟의 후진화를 가속화시켰다.¹²⁾

또한 主體思想은 사회경제발전의 지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12) 李佑淵, 『가난의 공화국』, 『어둠의 공화국』 (통일일보 출판국, 1990)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현실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모순을 느끼게 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革命과 建設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열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헌신적 노력과 자기희생을 다했으나 주민들의 생활개선 등 물질적 조건은 변화가 없었다는데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체사상탑을 보고는 “좋으면 뭐하나 거기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¹³⁾ 라고 冷笑의인 不平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主體思想이 만들어 낸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은 남북한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아 통일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됨으로써 統一에 대한 惡의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主體思想 선전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인민대중이 주체라는 개념은 계급개념이며 민족성원의 총체적 개념이 아니다.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라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主體思想은 외형적 인상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계급개념이며,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는 시점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시대역행적 사상에 불과할 뿐이다.

4. 勞動黨의 成立背景과 權力構造

북한에서 黨에 대한 規定을 보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朝鮮勞動黨은 權力의 源泉이고 中核이며 모든 국가적 및 사회적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 된

13) 北京의 <中央民族語彙譯局>에 근무하는 조선인학자의 평양방문시 들었던 것임.

다.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로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路線과 政策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당의 성격에 관해서도 “黨을 영구히 김일성의 당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정일에 의하면 “우리당을 金日成의 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金日成을 영구히 우리 黨의 首位에 받들고, 김일성이 가리킨 理念과 路線을 견지하며 대를 이어 관철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우 黨이 북한의 권력체제의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黨위에 金日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黨의 成立背景과 理念

오늘날 북한은 「로동당」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공식화하고 있으나, 실제 「조선로동당」의 명칭은 1946년 8월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勞動黨의 역사는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평양에서 개최된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는 박헌영파가 주도하는 조선공산당(서울 소재)을 ‘黨中央’으로 인정하고, 1國1黨原則에 따라 평양에는 分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분국이란 명칭은 1946년 1월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1946년 4월부터는 아예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하였으며, 그해 8월 북조선공산당은 김두봉의 朝鮮新民黨(1946.3.30)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1946.8.28)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때의 합당대회를 第1次 黨大會라고 칭한다.

제2차 당대회는 1948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고, 同年 8월 인민공화국 정권수립을 앞두고 「남북로동당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과도적인 남북노동당의 합당을 통해 「남조선로동당」을 흡수하였으며, 1949년 6월 30일에는 「朝鮮勞動黨」으로

명칭을 바꾸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理念 및 目標

勞動黨은 창립대회로부터 제4차 당대회(1961. 9)까지만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당의 지도사상이라고 규정했는데, 제5차 당대회(1970. 11)에 이르러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제6차 당대회(1980. 10)에 와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함으로써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指導理念下에서 다음과 같은 당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규약(1980.10.10)에 의하면 勞動黨의 당면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또한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시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의 內外狀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화와 소련에서의 공산당 해체 및 연방이 붕괴되는 등의 상황 변화는 북한 노동당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천명한 데에 동조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과 공산주의의 종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된 체제”라고 하였는가 하면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우리민족은 단결을 이룩하자”라는 글속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하는 등으로 변신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바,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 黨의 組織과 役割

「로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하에 모든 지역별, 부문별로 階序的 조직을 가지며, 그 組織原理는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을 선거하고,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한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합해진 용어이다. 여기서 民主主義는 최고국가권력 및 지방국가권력이 인민의 選舉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中央集權制란 국가권력은 종국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상급기관의 결정은 하급기관을 구속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노동당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首領의 唯一的 領導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北韓의 主張에 의하면

“당조직들의 활동에서 조직성과 통일성을 떠난 혁명적 조직규범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당조직들의 활동의 통일성은 오직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서만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 조직규율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이루어지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 규율로 된다.

黨內民主主義는 어디까지나 수령의 유일적 령도가 실현되는 조건에서만 진정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중앙집권제와 결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黨活動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며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를 조장시켜 당을 구락부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로 되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당조직의 특징은 공산당의 일반적 조직규범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首領의 영도가 추가된 것이다. 黨의 절대성보다도 金日成의 절대성이 우선시되는 조직이며, 지금은 金日成의 神格을 떠받드는 조직으로 되어 가고 있다.

현 노동당의 조직체계는 당규약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黨大會이며,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黨中央委員會가 最高指導機關이다.

당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全員會議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政治局과 정치국 常務委員會가 당의 모든 사업을 組織・指導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중요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국 안에서의 최고실력자로 구성된 政治局常務委員會에서 결정된다. 상무위원회는 제6차 당대회(1980년) 당시에 5인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3인만 남아 있다.

그리고 注目하여야 할 기구는 中央軍事委員會이다. 과거의 당규약에 의하면 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6차 당규약에서는 祕書局과 함께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군사위원회가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을 토의・결정한다.

이외에 당중앙위원회내에는 反黨, 反革命 宗派行爲 및 당의 唯一思想을 지적하는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檢閱委員會」와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中央檢査委員會」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당조직으로 전국을 거미줄처럼 묶어 놓았다.

道(직할시), 市(구역) 및 郡 수준에 중앙당의 당대회와 당중앙 위원회에 상응하는 각급 「당대표회」와 「당위원회」가 있고 1급, 2급 공장기업소에는 공장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시·군당위원회 밑에는 초급당조직이 있으며 초급당 밑에는 分初級黨委員會와 部門黨委員會, 黨細胞가 있다.

黨의 最下 基層組織은 당세포이다.

초급당조직은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 둔다고 하며,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友黨과 外廓團體

북한에는 야당과 유사한 友黨이 있다. 즉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이다. 북한에서는 友黨이란 공산당을 지지하며 공산당과 統一戰線을 이룬 관계에 있는 정당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집권여당과 반대야당이 있지만 북한에는 노동당을 지지하도록 지도·통제된 友黨만이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로동당」의 우당인 조선민주당의 당수였던 최용건을 당시 노동당의 부위원장직을 겸하게 함으로써 조선민주당을 노동당의 시녀로 만들었고, 그후 강양육은 「조민당」(현재 사회민주당)당수를 하면서 국가부주석을 겸임하였다. 강양육 사망이후는 현재 이계백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이 友黨들은 실제적인 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비난성명 발표 및 南北韓 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개최 주장때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뿐인 당이다.

그리고 당과 대중 사이의 ‘引傳帶’이며 대중의 思想教養組織으로서의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 이른바 당의 外廓團體들이 있다.

이 밖에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등 偽裝平和團體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와 反帝·反植民主義 투쟁을 하는 인민들과의 연대성” 표방의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및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등이 있고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偽裝宗教團體들이 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 선전과 反韓·反美를 위한 선전·선동을 하는 조선노동당의 하급조직일 뿐이다.

마. 黨·軍關係

북한 「로동당규약」 제7장 46조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조선인민군總政治局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北韓의 軍은 黨의 軍隊이다. 이러한 黨과 軍의 관계는 공산주의국가에서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以黨領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5. 國家機關 體系

북한에서는 국가의 권력기구를 국가기관체계라고 하며 이것은 1972년에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제시되고 있다. 1948년의 「인민민주주의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주석제도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內閣을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으로 개편하여 主席中心의 單一統治體制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분리·격상시키고 제1부위원장제를 신설하여 김정일을 앉힘으로써, 김정일이 처음 주권기관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軍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입각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체계는 機能에 따라 主權機關, 行政機關, 裁判 및 檢察機關으로 나누어진다.

국가 운영체계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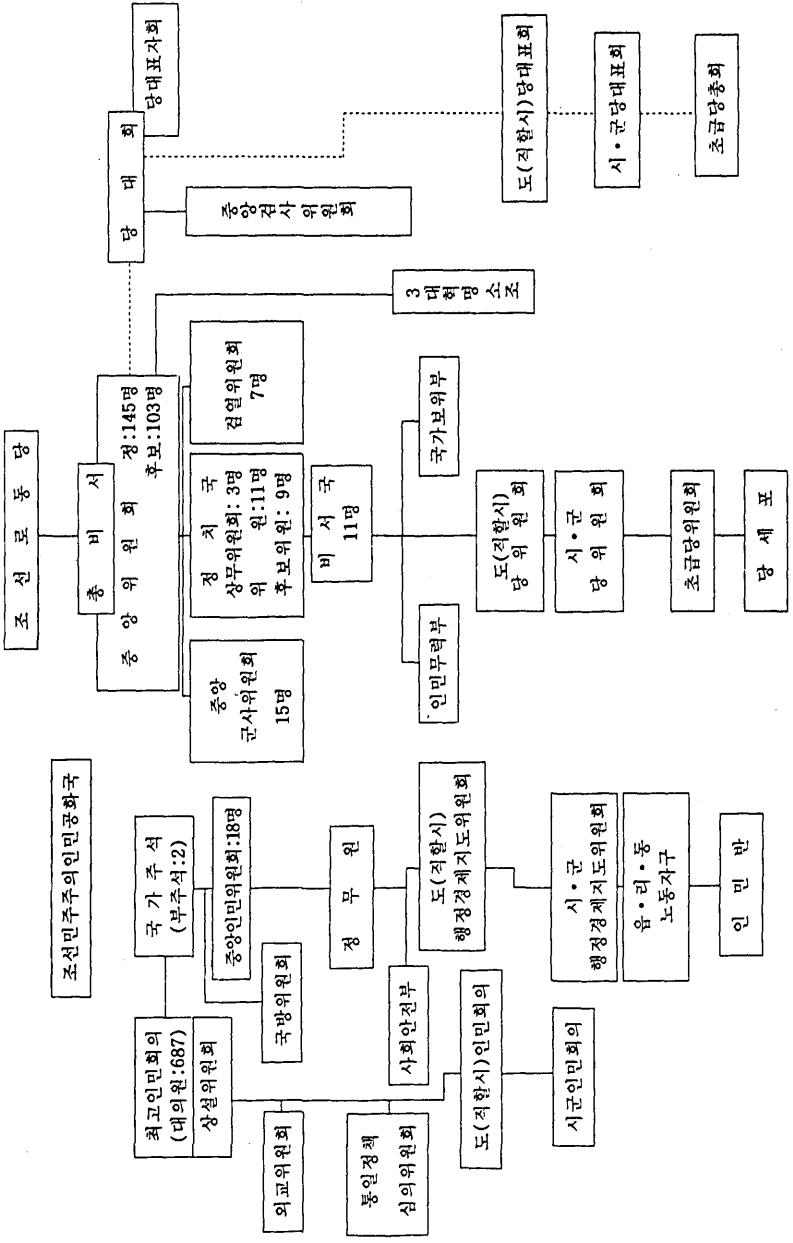
- ① 主席을 구심점으로 하는 중앙집권화체계이며,
- ② 행정에 대한 黨的 統制,
- ③ 地方에 대한 철저한 中央統制 등이다.

가. 主權機關

(1) 最高人民會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은 形式的이며 주로 黨政策決定을 追認하는 기관에 불과하며, 전체 북한주민의 의사로서 대표성 및 정당성

북한정치체제



을 필요로 할 때 활용되는 기구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4월 22일 실시된 제9기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수는 687명이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을 단위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단일후보에 대해 100% 찬성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金正日을 국방위원회 第1副委員長으로 선출한 외에, 특이사항으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統一政策審議委員會」를 신설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기능을 확대·강화하였다. 더욱이 1989년 11월에 外交委員會를 설치한 것은 의원의외교와 대남 통일전선차원의 역할을 증대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최고인민회의가 갖고 있던 권한이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상당히 축소·조정되었으며, 많은 중요권한이 主席의 지도·통제하에 있는 中央人民委員會에 이양되었다.

즉, 인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독재의 상징인 主席의 權限은 강화시켰다.

그러나 동구사회주의국가의 民主化·開放化以後 북한도 변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예컨대 제9기 대의원선거시에 友黨인 사민당 및 무소속 등을 참여시켰는바, 內容的으로는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후보를 무조건 당선시키는 기계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形式的으로 민주적 선거를 과시하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국회와 비교할 때 立法權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대의원의 지위가 다르다. 대의원은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 후보들이며 職能人으로 대의원을 겸직하고, 1년에 한두번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하여 대의원 역할을 할 뿐이다.

둘째,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최고인민회의 산하 여러위원회

는 당비서국 비서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예컨대 통일정책심의 위원회위원장 윤기복, 외교위원회위원장 김용순 등 산하기구 위원장들이 모두 비서국 비서이다.

셋째,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중요권한을 지도하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종속적·상징적 기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입법기관인 국회와는 다르다.

(2) 主席

主席制는 김일성 唯一支配體制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설한 제도이며, 主席은 4년 임기이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헌법상 주석의 지위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對外的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며, 對內的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 首位, 인민군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主席은 잘못이 있어도 파면된다는 헌법조항이 없다. 그러나 副主席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석의 제의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한 연구논문에서 主席制의 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수령을 직접 국가의 수반으로 모시고 수령께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령도를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국가기구적 제도인 주석제를 새로 제정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국가활동의 고유한 특성에 가장 정확히 부합되는 국가기구 건설방침이다.”¹⁴⁾

이 인용문은 主席制의 설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실현에 부합되

14) 방계문, 『...우월한 사회주의국가기구체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82.

는 제도로 정당화하고 있으나, 김일성의 1인독재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점은 중국의 ‘국가주석제’와 비교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북한은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조항이 없다.

또 중국에서는 主席이 사고가 생기면 부주석이 그 직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계승조항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主席制는 독재적 성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하게 한다.

(3) 中央人民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는 主席의 보좌기관으로서 首領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조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니, 명실상부한 최고권력기관이다. 김일성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 首位의 자리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권력을 국가주석에게 집중시키려는 데 그 설치목적이 있다.

그 구성원은 國家主席, 副主席(3人), 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들로 되어 있는바, 이들은 주로 勞動黨政治局委員 또는 祕書局祕書들이 겸직하였다. 그러나 1990年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제1차회의에서는 정치국위원 또는 비서국비서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 道黨責任祕書 겸 人民委員長들이 모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앙인민위원회는 평양시·직할시·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중앙과 지방과의 거리를 없애는 한편, 지방대표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中央의 主席이 각지역을 직접 지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金日成 1인의 獨裁가 더욱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정책의결기관으로서 政令, 決定, 指示 등 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판 및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3權分立이 아닌 3權獨占이 되고 있다.

나. 行政機關

(1) 政務院

정무원은 행정집행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指導와 統制를 받는다. 政務院 總理는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소환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무원은 총리 1인, 부총리 11인이 있으며 정무원조직은 14委員會, 25部, 1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연형묵 총리는 1988년 11월에 임명되었으며 1990년 5월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제1차회의에서 유임되었다. 또 정무원 총리는 제6기 최고인민회의(1977. 12)부터 經濟專門家들로 교체되어 왔음이 특징이다. 즉 이종욱, 강성산, 이근모 그리고 연형묵 등은 경제 전문가들이었다.

다. 裁判機關 및 檢察機關

(1) 裁判機關

북한의 裁判機關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으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사회주의헌법 제133조) 중앙재판소의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하며 도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사회주의헌법 제134조)

재판소의 임무는 사건의 분쟁에 대한 심판보다는 기존의 社會主義體制를 보호하고, 社會秩序를 지키는 일이 우선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헌법 제136조에서 “모든 국가기관, 企業所, 社會協同團體 및 公民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2) 檢察機關

검찰기관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있다.(사회주의헌법 제143조) 검찰소의 역할은 社會主義的 준법성의 監視人으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사회주의 민법전」이 공식으로 공포되었으므로 앞으로 검찰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헌법에 “검찰소의 임무는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사회주의헌법 제144조)고 하였으므로 쉽게 짐작될 수 있다.

6. 權力承繼의 性格과 變化展望

사회주의국가에서 권력세습은 전례가 없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한 속성으로 되고 있다. 더욱이 권력세습이 단순히 제도적인 黨의 總祕書職이나 國家主席職만을 인계받는 것이 아니라, 神格화된 수령과 革命路線을 인계받는다는데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그것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그의 革命的 課業을 대를 이어가야 하도록 인계받는 것이므로 이것이 실제 김일성 이후

시대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며, 金正日體制가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가. 權力世襲의 正當化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혁명계승론’, ‘혈연계승론’, ‘김일성화신론’ 등으로 정당화하고 있다.¹⁵⁾

- 革命繼承論：수령이 개척한 革命偉業은 대를 이어 계승해 완수한다.
- 血緣繼承論：수령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
- 金日成化身論：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體得한 지도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 동서고금의 어느 정치이론에도 없는 용어들을 만들어 권력세습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총련의 「幹部學習提綱」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후계자는 후계자가 아니다. 일부 나라의 후계자는 수령의 생존시에 領導權奪取를 음모하는 실례까지 있었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이 후계자를 잘못 선정하여 임표와 강칭 등 4인 무리들의 반당적이고 독자적 행동이 나타났으며, 소련의 경우는 스탈린 사후에 후계자가 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에 충실하지 못하여 반감을 가지고 모독하였으며, 심지어 묘까지 파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기한 인용문에서 보면 金日成死後의 정치적 혼란을 막고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權力世襲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1985년 초에 “주체의 혈통의 빛나는 계승”이라는

15) 『北韓 및 共産圏動向』, (국통조 87-7-44), p. 37.

글을 통해서 權力承繼의 개념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즉, “주체의 혈통을 이루고 있는 것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수령님식 사업방법이다. 수령의 사상과 이론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며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혁명과 건설을 높은 단계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토대이다.”

이와 같이 ‘주체의 혈통’까지 거론할 정도로 김일성의 영원한 집권은 저들에게 절대적인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고 그것은 金正日에게 새습되어야만 “결정적 보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86년 5월 金日成高級黨學校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에서는 “우리 당에서 혁명위업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하였으며, 1991년 5월 5일 金正日是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한 담화에서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나. 金正日의 權力基盤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조선로동당」이지만 具體的으로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조선인민군」이다.

김정일이 제6차 黨大會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人物變動에서 뚜렷한 현상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의 序列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당시 軍총참모장이었던 오극렬이 서열 109위에서 16위로, 부총리 강성산은 65위에서 18위로 변동되었으며, 同學院 출신 연형묵도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두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1988년에 총리가 된 이후 연임하고 있다.

또 군부쪽에서도 제6차 당대회시 16명으로 구성된 당군사위원회

는 5명의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로 충원되었다.

1982년 당시 총참모장 오극렬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조선로동당의 핵심 및 인민군대의 골간으로 키우는 혁명가 유자녀교육기관으로서…졸업생들은 백두산 영봉에서 시작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혁명전사”라고 하였던바, 김정일의 권력기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大革命小組」는 1973년에 經濟部門에서 생산성제고 및 사상개조를 위해 발기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金正日의 親衛隊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은 1975년 3월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그 임무를 당중앙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여 이후 김정일의 지도하에 統一的으로 指導하는 새로운 지도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소조원을 때로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에 참가시키는 등 혁명소조의 역량강화에 힘썼다.

특히, 1984년 9월 24일 약 11년만에 3대 혁명소조원 2차대회를 개최하면서 3대혁명소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大革命小組는 당중앙의 지도가 하부말단에 제때에 정확히 구현되도록 아래를 도와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3大革命遂行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이다.”

또 1988년 2월에 3大革命小組結成 15주년 기념식에서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신념화하고 그 관철에서 무조건성, 절대성의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 것을 보면 3大革命小組가 김정일의 지도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대혁명소조원의 수는 발족이후 오늘날까지 약 17만여명이고 이중 2만명이 노동당에 입당¹⁶⁾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제9

16) 평양방송, (1990. 2. 13), 『북한개요』(統一院, '91), p. 52.

기대의원선거시에 대의원으로서 상당수 진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실질적인 권력기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금은 黨中央委에 3대혁명소조사업부가 있으며, 道黨委員會에 3대혁명소조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조직은 김정일의 친매부이자 오른팔격인 장성택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¹⁷⁾

「조선인민군」은 권력세습 구축과정에서 주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적 집단이다.¹⁸⁾ 김정일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黨軍事委員會에 서열 제3위로 등장하였으며, 1985년 4월에는 만경대혁명학원출신 오극렬(당시 총참모장)이외 7人의 上將을 大將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大將을 次帥로 승진시키는 등으로 김정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實勢로 내세워 당·군관계를 밀착시켜 나갔다.

1990년 5월에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제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김정일이 군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확립한데 이어,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黨中央委 제6기제19차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

다. 金正日의 偶像化 實態

북한은 金正日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조작하기 위해 김일성을 우상화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양한 근거를 날조하여 우상화놀음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에는 “黨中央”으로 표현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호칭을 썼으며, 이때 약자로 “친지동”으로 통칭하였다. 1985년 4월에는 “당·국가수위”,

17) 북한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서울신문, 91. 9. 26.

18) 고병철, 「북한의 정치변화」, 『전환기의 북한』(유세희, 이정식편), p. 13.

1985년 7월에는 “金正日時代” 등의 용어들이 나타났으며 1991년에 들어와서 인민경제대학 총장인 김국훈은 김정일을 말할 때 “미래의 위대한 수령”으로 말한바 있으며, 10월 10일 당창건기념일에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는 “또 한분의 수령”이라고 호칭하면서 승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내 용 | 김 일 성 | 김 정 일 |
|-----------|-------------------|------------------|
| 이름에 ‘日’字 | 金成柱→金日成 : 민족의 태양 | 金正一→金正日 : 미래의 태양 |
| ‘별’과 연결 | 백두산의 장수별 | 향도의 별 또는 백두별 |
| 혁명사적지·전적지 | 보천보, 삼지연전적지 | 장자산, 어은혁명사적지 |
| 꽃 | 김일성화(인도네시아로부터 입수) | 김정일화(조총련으로부터 입수) |
| 백두산과 연결 | 장군봉 | 정일봉 |
| 출생지 | 만경대(평양) | 백두산밀영 조각 |

김정일우상화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백두산의 한 봉우리를 「正日峰」이라 명칭을 붙이고 기념식을 벌이며, 1987년에는 「구호나무」(나무에 김일성·김정일 찬양문을 새긴 것)를 造作하여 선전하는가 하면, 1991년에 들어와서는 「金正日傳説集」 발간에 이어 또다시 「金正日歌謠集」 및 「光纖維 金正日花」를 제작하는 등 김정일우상화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라. 世襲體制의 變化展望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한 후 새로운 지도체제의 형태를 다음 세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¹⁹⁾

첫째, 金正日의 승계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의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경우.

둘째, 金正日이 권력을 장악하기는 하지만 여러 반대세력들이

19) 廉弘喆, 「最近北韓의 權力構造變動에 따른 政策方向研究」, 『北韓權力構造와 金正日世襲體制研究』, (국통조 87-7-47), 참조.

부상하여 이들이 김정일과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경우.

셋째, 권력투쟁에서 金正日이 패배하고 다른 인물 또는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 경우는, 이제까지 說明되었으므로 더 이상 說明이 必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최근 金正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어 군 통수권을 장악한 사실과 金正日의 전설집 날조 등으로 우상화놀음이 극대화되고, 주체사상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가미하여 미래의 金正日 首領에게도 무조건 충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金正日도 승계문제는 만족하게 해결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권력세습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한다. 金日成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金正日의 권력기반은 공고화될 것이며, 김정일체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集團指導體制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기본지도체제이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가 개혁·개방으로 민주화·자유화 됨으로써 黨內集團指導體制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

아직 북한은 首領唯一體制와 唯一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집단지도체제로의 변화문제는 주목된다. 만일 북한에서 김정일의 唯一體制가 불분명할 경우 집단지도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의 경우 혁명 1세대 이후 권력구조가 집단지도체제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 또 현재 북한의 권력상층부도 군부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1990년에 들어와서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사조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면,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集團指導體制로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金正日이 權力承繼에 失敗할 경우이다.

1989년 「평양청년학생축전」시 다른나라의 문물이 유입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기의 처지를 알게 되면서 현재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체제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측면에 불평·불만을 많이 갖게 됨으로써 김일성 사후에는 급속한 붕괴를 우려하는 예측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루마니아, 동독 등의 공산권붕괴, 그리고 최근 소련의 연방붕괴와 경제적 위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 가능성은 한층 높다고 하겠다.

7. 結 言

이제까지 북한공산체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金日成 神政體制構築과 金正日權力世襲體制 구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즉, 북한의 공산체제는 원래 스탈린의 膨脹政策의 산물로서 非主體인 金日成集團에 인계되고, 여기에 날조된 抗日革命傳統을 바탕으로 金日成 首領體制의 정당성을 구축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對內的으로는 피의 肅清과 族閥政治 그리고 偶像化政策과 主體思想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했으며, 對外的으로는 중·소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국제사회내에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對外的으로 의존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으로 어제의 동지가 아니라 오히려 배신감마저 느껴야 할 냉혹한 시련을 맛보게 되었으며, 國際社會에서 孤立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對內的으로도 심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3大革命中 경제혁명(기술혁명)의 실패로 인해, 오로지 思想革命에 호소하면서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북한은 主體思想이라는 思想武器를 수단으로 김일성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도록 북한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김일성지배의 정

당성을 항일투쟁이란 명분과 밀착시켜 주장하여 왔으나, 물질적 빈곤 앞에서 설득력을 잃게 됨으로써 지금은 金日成의 權威를 신격화시켜 떠받들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민대중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金日成 神政體制가 표방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체제의 정당성 획득의 수단이 될 수 없을진대, 현재 북한주민은 물질적 욕구의 불만과 자유의 충동으로 점차 現體制를 불신하고 離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改革·開放의 國際環境 속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만 들고 “우리식대로 살자”는 폐쇄적 태도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체사상과 로동당」을 해체하여 개혁·개방으로 선회할 것인지 擇一을 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金日成의 상징적 불멸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권력승계문제의 한계성이다.

권력승계의 조건이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黨의 領導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즉, 수령의 “항일혁명전통 옹호고수이며,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의 일관성 견지”를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수령의 유일적 영도, 로동당의 유일적 향도, 주체사상의 유일적 지배” 등으로 唯一的 規範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의 本質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모두가 김일성의 불멸성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남북관계개선을 통해서 統一에 이르는 길을 그만큼 지연시키는 것 이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령·당·주체사상 그리고 이것을 인계받는 권력세습이, 어느것도 民族自尊과 繁榮을 위한 統一에 도움이 아닌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을 改革·開放으로 誘導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課題이다.

Ⅱ (北韓의 經濟

李 浩(統一院 分析官)

| | |
|------------------------|----|
| 1. 序 言 | 45 |
| 2. 經濟體制와 政策 | 46 |
| 가. 經濟體制 | 46 |
| 나. 經濟政策 및 開發戰略 | 51 |
| 다. 構造的 問題點 | 54 |
| 3. 主要 部門別 現況 | 55 |
| 가. 國民總生產과 成長 | 55 |
| 나. 財政規模와 歲出內譯 | 57 |
| 다. 農·水產業 | 59 |
| 라. 鑛·工業 | 62 |
| 마. 輸送·通信 | 70 |
| 바. 對外經濟關係 | 72 |
| 4. 南北經濟統合의 可能性 | 77 |
| 가. 民族共同體 回復의 必要性 | 77 |
| 나. 南北交易 現況 | 78 |
| 다. 經濟統合의 可能性 | 80 |
| 5. 結 言 | 82 |

1. 序 言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불만을 품은 소련 공산당내 일부 보수·강경집단이 주축이 된 군사쿠데타의 실패를 계기로 사회주의 宗主國인 소련에서도 이제 共産黨의 붉은 깃발은 내려지고 사회주의체제는 사실상 終焉을 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었던 東歐諸國에서는 소련이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1989년 말부터 共産政權들이 차례로 붕괴되는 소위 ‘逆도미노’현상이 초래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러한 변화는 역사발전의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편, 우리와 같은 처지의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서독이 사회주의진영 국가들의 급속한 情勢變化를 통일의 기회로 포착하여 현명하게 이용한 결과, 1990년 7월 2일에는 兩獨間에 경제통합을 이룩하고 그 여세를 몰아 同年 10월 3일에는 대망의 정치통합을 달성함으로써, 독일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昨今の 국제정세 변화와 西獨에 의한 東獨의 흡수통일 실현은 우리 국민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한층 더 부풀게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통일이 막연한 기대감이나 감상적인 통일열망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으며,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통일을 주도적으로 맞을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이 축적됨과 동시에 국제적 여건도 성숙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對外的 統一與件은 성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에서 주로 기인한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가 경제문제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 변화는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미국과 함께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蘇聯의 경제는, 이제 전날의 적대국가였던 서방제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지난 10월 국제적십자자연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련의 3억 인구 가운데 2천만명 가량이 빈곤의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150만명 가량이 식량 등 극심한 물자부족으로 1991년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主體經濟’와 ‘自立經濟’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의 50% 이상을 소련에 의존해 왔던 北韓이 소련의 급격한 변화이후 대소무역 및 경제협력 감소로 직면하게 된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민족적 숙원인 통일을 主導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경제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經濟體制와 政策

가. 經濟體制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나 세가지의 근본적 경제문제인 ① 무슨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② 누가 어떤 자원과 기술로써 생산할 것인가? ③ 생산된 재화는 어떻게 개인 또는 가계에 분배할 것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經濟問題가 제기되

는 것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위의 세가지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질서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경제체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는 각 나라가 추구하는 理念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각 나라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또한 역사적 배경이 相異하므로 엄밀하게 구분할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제체제의 종류는 현존한 經濟社會의 수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하나의 경제체제는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再形成되고 變容되어 가는 것이다.¹⁾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소련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추구해 온 경제체제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대분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방대한 양의 자본<정교한 기계, 대규모 공장, 원자재, 항만,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의존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수단)을 주로 개인이 소유하면 資本主義라고 부르고, 국가가 소유(사회가 집단적으로 소유)하면 社會主義라고 부른다. 자본 또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사유재산제도)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경제문제가 가격과 시장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므로 市場經濟體制라고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자본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와는 달리 가격과 시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

北韓은 남북분단과 동시에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소련으로부터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지

1) 金榮奉, 「經濟體制論」, 博英社, 1987. p. 29. 및 조용범, 「經濟體制論」, 한울, pp. 19-20.

령경제 혹은 명령경제)를 이식하였다.

1991년 현재 소련에서는 社會主義理念 자체를 완전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대전환작업이 추진중이며, 중국 또한 1970년대 말 이후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심도있는 개혁·개방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를 내세워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1) 社會主義的 所有制度

북한은 생산수단의 私的所有를 철저히 배제하고 전형적인 社會主義的 소유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72년 12월에 개정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²⁾

1977년 4월 29일에 공포한 「토지법」에서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 한편 同法 제13조에서는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고 협동농장을 비롯한 機關, 企業所, 團體 및 公民들은 다만 이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동단체의 토지소유권도 실제로는 그 사용권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단체에 해당되는 협동농장은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판매나 양도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同法」 제9조에서도 “토지는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원들은 가구당 20~30평 정도의 텃밭(채전)을 개인적으로 경작할 수 있으나 그것은 협동농장 規約에 의하여 주어지는 사용권이며 개인소유는 아니다. 또한 협동단체가 소유할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장 18-22조 참조.

3) 북한 「토지법」 제9조 참조.

수 있는 대상은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토지, 役畜, 농기구, 어선, 건물 등과 中小工場, 企業所로 한정하고 있다.

북한의 소유제도에 대한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198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1차회의」에서 행한 金日成 시정연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현재 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생산수단은 장차 ‘전인민적 소유’(국유)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⁴⁾ 이 단계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단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농지의 장기임대 및 경작권의 상속 등 농업의 私營化를 인정하려는 중국의 경우와는 정반대이다.

북한주민들이 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자기를 위한 노동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협동농장원들이 결산분배에 의해 자기 몫으로 받는 현물이나 화폐, 또는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재에 불과하다.⁶⁾ 다만, 협동농장원들에게 주어진 텃밭에서 생산한 생산물이나 부업으로 얻는 생산물은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2) 計劃的 資源配分과 中央集權的 管理

모든 사회는 세가지의 근본적인 경제문제 즉 ① 무엇을(생산물의 構成), ② 어떻게(생산의 方法), ③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생산물의 配分)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앞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市場과 價格機構의 媒介와 調整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市場經濟原理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資源의 配分이 인위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

4) 이 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2장 제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5) 사회주의경제에서는 노동의 성격을 자기를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 등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은 자기를 위한 노동의 대가이다.
6) 북한헌법 제2장 제22조에서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며, 이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시장경제체제는 ‘生産의 無政府性’으로 인해 불경기와 경제공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失業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가들은 실업을 노동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생산, 분배, 소비를 전면 계획화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와는 달리 안정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시 內閣에 「國家計劃委員會」를 설치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에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완료되어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현재 북한의 모든 경제운동은 「政務院」의 「國家計劃委員會」가 중심이 되어 勞動黨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경직된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방대한 계획업무로 인해 각종 계획지표가 상호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경제부문간에는 필연적으로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화 사업에서의 一元化, 細部化原則’을 강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계획의 一元化라고 함은 계획수립의 중앙집권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북한은 1965년 9월부터 省(지금의 정무원 部, 委員會), 중앙기관, 도 인민위원회(지금의 道 行政經濟指導委員會), 道 農村經理委員會 등 각급기관과 공장·기업소의 계획부서들을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단위로 개편하여 계획사업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북한경제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체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기업소로부터 전반적인

인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 관리체제로 조직되어 있다.”고 한다.⁷⁾

북한이 경제지도와 관리에 적용하는 원칙들은 金日成의 ‘주체사상’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⁸⁾

첫째, 당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밀접한 결합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옳은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철저한 관철

넷째,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 등이다.

계획관리업무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중앙행정기구인 정무원의 총40개기관(14위원회, 25부, 1원) 중 80%에 해당하는 32개기관(11위원회, 20부, 1원)이 경제관련 기관으로 되어 있는 등 시장경제하에서의 분권적 관리체제보다 훨씬 비대한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대한 조직에서 계획·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오히려 관료화에 따른 비능률만 증대되고 있는 것이 북한 경제체제의 현실이다.

나. 經濟政策 및 開發戰略

各國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후생과 복지의 증대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증대(成長), 소득분배의 衡平, 物價 및 雇傭의 安定 등 부문별 정책이 상호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배의 형평과 물가 및 고용의 안정은 경제성장의 뒷받침위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經濟成長이 정책의 우선적 과제가 되고 있다.

7)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1)」, 1985. p. 93.

8) 1985년에 발간된 「경제사전(1)」에서는 1970년에 발간된 「경제사전」의 서술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1970년판 사전에서는 경제관리원칙으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정치사업우선, 중앙집중제, 독립채산제, 군중노선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사회 모든 성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수단”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은 경제문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전면적으로 맞게 수립된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이익이나 복지·후생의 증대보다는 군사력 증강 등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목표로 하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따라 인민대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소위 ‘自立的 民族經濟’를 경제건설의 목표로 표방해 왔다.

‘自立的 民族經濟’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이 다양하고 부단히 성장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나라의 賦存資源과 원료·자재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¹⁰⁾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노선을 ‘自力更生路線’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초기단계에서부터 重工業의 우선적 발전, 輕工業과 농업의 동시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重工業優先策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공업우선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병행한다는 소위 ‘國防·經濟並進策’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9)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1)」, 1985. pp. 112-113.

10) 노동당 출판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경험」, 1983. 8.

하고 있다. 이 정책은 1962년 노동당 제4기5차 전원회의에서 ‘四大軍事路線’¹¹⁾을 채택함으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특히 中·蘇 이념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자 金日成은 1966년 10월에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내세워 “...경제발전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이 정책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好戰性을 노출하게 됨으로써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를 표면화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예산 발표시 군사비도 실제와는 달리 다른 예산항목에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스커드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독자적인 개발성과는 그동안 ‘국방·경제병진책’이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2) 經濟開發 戰略

북한이 표방해 온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목표나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理想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은 분명히 전체 산업부문이 동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결과의 배분면에서도 소비와 축적간에 균형이 유지되는 均衡成長戰略을 택한 것으로 잘못 알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의 희생하에서 중공업화를 달성하려는 不均衡成長戰略에 따라 공업화를 추진해 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업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남한의 경우는 수입 → 수입대체 → 수출의 段階로 발전하는 모형에 따라, 소비재 → 중간재 → 자본재의 順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개발전략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은 自力更生原則에 따라 먼저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킨 후 소비재 산업부문인 경공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남한과는 정반대의 스탈린식 개발전략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11) 4대군사노선의 내용은 전지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이다.

따라서 북한은 금속, 기계, 군수공업 등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中·蘇의 원조획득과 대내적으로는 경공업·농업부문의 희생을 통해 중공업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북한의 예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년) 기간에는 공업부문 투자의 80%가 중공업에 투자되고 나머지 20%가 경공업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6개년계획 기간에는 중공업 對 경공업 투자비율이 83 對 17로 중공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더욱 높아졌다.¹²⁾

이상과 같이 북한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우선, 경공업에 대한 중공업의 우선, 소비에 대한 축적의 우선이라는 不均衡成長政策으로 일관된 경제개발전략을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構造的 問題點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기본정책노선으로부터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첫째, 경제관리의 비능률성이다.

이는 私有財産制度의 否定, 市場 및 價格機構의 부재로 인해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의 합리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다.

둘째, 자금자족적 폐쇄경제로 인한 대량생산법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데 있다. 현대 산업기술은 대량생산하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처럼 무엇이나 모두 국내생산으로 自給自足하려는 경제구조하에서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생산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2) 국토통일원,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 변화 예측」, 1986. 1. p. 84. 참조.

셋째,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의 심화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문제인데 특히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과 에너지 및 소비재의 부족은 고질적인 애로부문으로 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 격차, 黨·政官僚와 일반근로자들간의 소비생활 격차 등은 社會的 不滿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기술수준 낙후와 산업시설의 노후화이다.

自力更生原則에 입각한 폐쇄적인 對外政策路線으로 인하여 선진 기술 도입이나 산업시설 현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일부 군사기술부문을 제외하고는 기술수준이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투자의 비효율성과 군사비부담의 과중이다.

북한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軍事部門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우상화와 관련된 대형 상징조작물의 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군사비지출과 비생산적 투자로 자원의 낭비가 극심하여 財政狀態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경제의 構造的인 문제점들은 체제개혁과 개방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없이는 해소될 수 없으므로 경제침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主要 部門別 現況

가. 國民總生産과 成長

1990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2,172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1.61%로 같은해 남한의 0.9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지역의 면적은 약 12만 2천km²이며, 인구밀도는 1km²당 176.9명으로 전년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남한의 431.8명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인구밀도면에서 볼 때 북한의 자연적 經濟環境은 남한에 비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國土의 이용면에서는 오히려 남한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농경지확대를 위해 1980년대부터 북한은 간석지개간 및 다락밭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석지 개간실적은 부진하고 다락밭조성에 따른 副作用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經濟成長趨勢는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이래 매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1989년말 이후 동구권 및 소련의 情勢變化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1990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3.7%를 나타냄으로써 북한경제는 최근 심각한 沈滯局面에 빠져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실적은 1.2%로서 계획목표인 7.9%와 비교할 때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1> 최근 북한경제 성장 추세

(단위 : %)

| 연 도 | 1987 | 1988 | 1989 | 1990 | 연평균 |
|-----|------|------|------|------|-----|
| 성장률 | 3.3 | 3.0 | 2.4 | -3.7 | 1.2 |

자료 :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9.

1990년 현재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231억불로 추계되고 있으며, 1인당 GNP는 1,064불 정도이다.

북한은 社會主義國家들이 사용하는 국민소득개념으로 총량규모를 추계하고 있으므로 西方諸國의 GNP와 북한의 국민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GNP평가는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2> 북한의 인구 및 GNP

| 구 분 | 단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인 구 | 만명 | 2,137.5 | 2,172.0 | 4,286.9 |
| 인구증가율 | % | 1.64 | 1.61 | 0.93 |
| GNP | 억\$ | 211 | 231 | 2,379 |
| 1인당GNP | \$ | 987 | 1,064 | 5,569 |

자료 :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9.

자료 :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1. 12.

북한에서 발간된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86년 북한의 1인당 國民所得은 2,400불로 되어 있으며¹³⁾, 1989년 「평양 세계청년 학생축전」당시 북한의 관리들은 1988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30불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GNP평가방법이나 GNP규모에 대한 논쟁은 북한이 완전한 開放社會로 변화하여 믿을만한 기초통계자료를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은 북한의 1인당 GNP를 대략 1,000불~1,500불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 財政規模와 歲出內譯

일반적으로 財政이라 함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定義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나 공공단체는 經濟主體로서의 기능과 간섭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財政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이다. 특히, 북한 경제에 있어서는 財政의 역할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財政의 규모나 중요성은 西方世界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간경제부문이 극

13) 평양 외국문출판사, 「조선개관」, 1988. p.152.

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 통상적인 예산외에 공장이나 기업소의 재정¹⁴⁾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金融機能까지도 정부예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도 북한의 예산규모(결산기준)를 보면 세입이 166억 8천 만불(356억 9,041만원), 세출이 166억불(355억 1,348만원)로 소액의 흑자를 나타내었다.¹⁵⁾

1990년도 북한의 재정부담률(예산/GNP)은 71.9%로, 전년도의 70.9%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남한의 경우 재정부담률은 16.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豫算規模는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크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의 2.3배에 달하고 있다.

<표3> 북한의 재정규모

| 구 분 | 단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재정규모 | 억\$ | 149.7 | 166.0 | 388.0 |
| 재정증가율 | % | 5.4 | 6.4 | 7.2 |
| 재정부담률 (예산/GNP) | % | 70.9 | 71.9 | 16.3 |

자료 :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9.

1990년도 북한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의 67.6%(112.1억불)가 人民經濟費에 지출되었고 교육비를 포함한 社會文化費에 18.8%, 軍事費 12.0%, 나머지 1.6%가 國家機關管理費로 지출되었다.¹⁶⁾

북한의 세출예산내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은 군사비의 지출규모이다. 북한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소위 ‘국방·경제병진책’을 발표한 직후인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

14) 사회주의 공장·기업소 재정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공장이나 기업소경영에 소요되는 투자 및 운영자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국가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15) 최고인민회의 제9기제2차회의(1991. 4), 1990년도 예산결산 및 1991년도 예산안.

16) 같은 자료 참조.

에는 매년 세출예산중 군사비의 비중을 30.4~32.4%로 공식 발표하였다.¹⁷⁾

그러나 1972년부터는 북한의 실제적인 군사력은 질·양적으로 계속 증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예산 내역상의 군사비 지출 비중은 세출총액의 17%이하로 격감되고 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핵 무기개발을 위한 각종 시설을 지상 및 지하에 건설하는 등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990년 북한의 실질군사비 지출규모는 GNP의 21.5%인 49.6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다. 農 · 水産業

북한은 사회주의건설 초기부터 “쌀은 곧 共產主義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량증산을 독려해 왔다. 특히 1960년대의 제1차 7개년 계획에서부터 농업의 水利化,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1970년대까지는 農業生産力이 매년 증대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농업집단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생산체계가 확립된 이후 농민들의 生産意慾은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여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들어와서는 곡물생산량이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식량부족은 에너지부족과 함께 북한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課題가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協同農場과 국유에 바탕을 둔 國營農 · 牧場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현재의 협동적

17)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1986.12, p.180.

소유를 장차 전인민적 소유(국유)로 전환할 것을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현재는 협동농장이 하나의 경영단위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행정적 관리조직인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경영단위 화함으로써 농업경영을 공업화한다는 목표도 설정해 놓고 있다.

「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에 農機械作業所와 灌溉管理所, 資材供給所 등을 두고 각 협동농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농장은 연말 결산분배를 통해 생산비의 명목으로 이들 기관의 생산지원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지불하게 된다.

북한의 耕地面積은 1990년 현재 총214.1만정보이며, 그중 논은 64.5만정보, 밭은 149.6만정보로 되어 있다.

金日成은 농경지의 확대가 없이는 더이상 식량증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1980년대 말까지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운동’을 展開할 것을 결정하고 농경지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간석지개간 實績은 6만여정보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도의 곡물생산량은 총481만 2천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정도 감소된 凶作을 기록하였다. 흉작의 원인은 파종기의 저온 현상과 8월중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穀種別 생산내용을 보면 쌀이 193.2만톤, 옥수수 238만톤, 기타 잡곡이 50만톤이며, 정보당 쌀 수확량은 2,970kg으로 낮아졌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잦은 흉작으로 식량부족난이 점차 심화되었다. 특히, 1990년의 흉작 여파로 북한은 1991년 추수기까지 100만~160만톤의 食糧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⁸⁾ 따라서 북한은 1991년 초부터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연형묵 총

18) 통일위의 분석에 의하면 주민들에 대해 기준량 100%를 배급할 경우에는 기본식량,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등 총수요량보다 160만톤이 부족하며 배급량을 감량할 경우에는 최소한 10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리의 동남아 3개국 순방시에는 이들 국가로부터 쌀 100만톤의 수입을 교섭하는 등 外交的인 노력을 경주했으며, 남한으로부터도 5천톤의 쌀을 直交易으로 수입한 바 있다.¹⁹⁾

<표4> 북한의 경지면적 및 곡물생산량

| 구 분 | 단 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경지면적 | 만정보 | 214.0 | 214.0 | 210.9 |
| (논) | " | (63.2) | (65.0) | (134.5) |
| (밭) | " | (150.8) | (149.0) | (76.4) |
| 곡물생산량 | 만톤 | 538.3 | 481.2 | 663.5 |
| (쌀) | " | (215.9) | (193.2) | (560.6) |
| (옥수수) | " | (268.1) | (238.0) | (12.0) |

자료 :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 9.

북한의 水産業은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생산조직으로 하고 있다. 국영수산사업소는 동해안에 21개소, 서해안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영수산사업소는 어로작업은 물론이고 냉동이나 鹽藏, 加工까지를 맡아서 수행하므로 산업 분류면에서 어업은 채취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의 水産資源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동해안의 명태이며, 수산물생산에서 명태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수산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귀중한 外貨稼得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대구, 섬게, 어란 등은 對日 수출상품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어선의 부족, 기술낙후 등으로 소련과의 協定으로 배정받은 어획쿼타마저 남아도는 실정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로작업에 필요한 油類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19) 북한이 천지상사를 통해 수입해 간 쌀 5천톤의 대금은 아직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

어선의 出漁日數가 줄어들고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서해안 간척사업 등으로 어로자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어획량도 격감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수년전부터 바다 및 내수면 양식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1990년도의 수산물 生産量은 총145.5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도 실적인 161.2만톤보다 10% 감소되었다.²⁰⁾ 따라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수산물공급은 생산량의 감소, 수송시설의 낙후 등으로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實情이다.

<표5> 북한의 수산물생산량

| 구 분 | 단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수산물생산량 | 만톤 | 161.2 | 145.5 | 327.4 |

자료: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1.9.

라. 鑛·工業

(1) 鑛業 및 에너지産業

북한은 自力更生原則에 따라서 原料, 燃料 등 공업발전에 필요한 原資材의 需要를 자체생산으로 보장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소위 ‘採取工業’과 ‘電力工業’을 製造業에 확고히 앞세워 나갈 것을 강조해 왔다.²¹⁾

북한의 鑛業은 석탄, 철광석, 亞鉛,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金 등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되고 있으며 매장량도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精鑛을 기준으로 약 1,

20) 1989년도 북한의 수산물생산량은 당초 218.9만톤으로 평가되었으나 재평가 결과 161.2만톤으로 수정되었다.

21)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경험」, 1983. p.89.

030만톤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철광석 매장량은 자료에 따라 상이하나 약30억톤(Fe 20~50%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철광산은 무산광산, 은율광산, 재령광산 등이 있으며 철광석은 자체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亞鉛은 1980년대부터 북한의 수출전략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추정 매장량은 1,200만톤(Zn 100% 기준)이며, 함경남도 단천시의 검덕광산은 북한 최대의 광산이며 1983년에 연간 1천만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選鑛場이 건설되었다.

시멘트 및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회석은 북한 전역에 걸쳐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자원으로 그 매장량은 1천억톤(CaO 50% 기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耐火物이나 시멘트원료로 쓰이는 마그네사이트는 북한이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정 매장량은 65억톤(MgO 45% 기준)이며 함경남도와 양강도를 중심으로 채굴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산업정책은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石炭과 水力資源을 개발·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총147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중 79억톤 정도가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코크스의 원료인 瀝靑炭은 매장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무연탄과 갈탄이다.

1990년 현재 북한의 석탄생산능력은 총4,33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은 3,300만톤에 불과하여 에너지부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석탄생산이 부진하게 된 요인은 투자부족으로 인한 생산시설의 노후와 장기채굴로 인한 채굴조건의 악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석탄이 산업연료로 사용되는 이외에도 化學工業의 대부분이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체제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석탄의 수급상황이 북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 북한은 석탄생산의 부진과 원유도입의 부족으로 발전용 연료로는 대부분 열량이 낮은 저열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전력사정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發電設備容量은 총714.2만kw로 추계되어 전년도보다 24만kw가 증가되었다. 그 가운데 水力은 429.2만kw, 火力은 285만kw이고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발전소는 아직 가동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무기의 독자적 개발노력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자력건설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유산업은 남한과 비교할 때 아직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봉(웅기)에 있는 승리화학공장과 평안북도 피현에 있는 봉화화학공장 두 정유공장에서 연간 350만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89년이후 外貨事情이 악화되고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나 소련도 원유수출대금을 硬貨로 決濟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1990년도의 원유수입실적은 252만톤에 불과하였다.

<표6> 북한의 에너지산업 생산능력

| 구 분 | 단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발전설비용량 | 만kw | 690.2 | 714.2 | 2,102.1 |
| (수력) | " | (405.2) | (429.2) | (234.0) |
| (화력) | " | (285.0) | (285.0) | (1,106.5) |
| (원자력) | " | . | . | (761.6) |
| 석탄생산능력 | 만톤 | 4,330 | 4,330 | . |
| 석탄생산량 | 만톤 | . | 3,300 | 1,722 |
| 정유능력 | 만BPSD | 7.0 | 7.0 | 84.0 |
| 원유도입량 | 만톤 | 260 | 252 | 4,264 |

자료 : 통일원.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10만톤으로 가장 많고 이란 98만톤, 소련 44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989년 이후 對소련 원유수입량은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2) 金屬工業

금속공업은 기계공업과 함께 북한 중공업의 핵심부이다.

북한은 금속공업을 製鐵, 製鋼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黑色金屬工業과 金, 銀, 銅, 鉛, 亞鉛 등을 제련하는 소위 有色金屬工業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제철·제강공업은 함경북도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남도 송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각각 동·서 지역의 축으로 하고 그 주변에 제강공장들을 배치하여 생산을 계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日帝時에 건설되었던 작은 공장들을 戰後復舊 및 수차의 改建, 擴張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 현재 북한 製鐵能力은 선철 517만톤, 강철 594만톤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철·제강공업은 철광석을 自給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강점이다.

非鐵金屬을 생산하는 製鍊所로는 남포, 문평, 흥남, 해주, 단천 및 평북제련소가 있고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창알루미늄공장이 있다.

비철금속은 북한이 1980년대 이후 전략수출산업부문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생산능력은 鉛 8.8만톤, 亞鉛 29.5만톤, 銅 9만톤, 알루미늄 2만톤 등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화된 것이 없다.

북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강철생산능력을 200만톤 더 늘린다는 목표하에 「10월 9일 강철종합공장」을

남포지역에 건설중이나 아직 기초공사단계에 있다.

<표7> 북한의 금속공업 생산능력

| 구 분 | 단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제철능력 | 만톤 | 517 | 517 | 1,797.7 |
| 제강능력 | 〃 | 594 | 594 | 2,540.6 |
| 압연장재 | 〃 | 404 | 404 | 3,283.6 |
| 아 연 | 〃 | 29.5 | 29.5 | 26.5 |
| 동 | 〃 | 9.0 | 9.0 | 22.5 |
| 알루미늄 | 〃 | 2.0 | 2.0 | 17.0 |

자료 : 통일원.

(3) 機械工業

북한은 중공업우선책에 따라 전후 복구단계에서부터 기계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1960년대에 ‘國防·經濟竝進策’이 추진되면서 기계공업은 兵器工業의 연관산업으로 개발이 촉진되어 왔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에는 12.5만kw급 수력발전 설비를 비롯하여 5만kw급 화력발전기, 1만톤급 프레스 및 각종 공장설비의 일부를 자체능력으로 제작하는 등 일반기계와 공작기계 생산부문에서 어느정도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질이나 기술수준은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최신설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또한 정밀기계나 통신, 전자, 자동차공업 등 첨단기술을 요하는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아직도 조립생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불균형이 심한 상태이다.

공장설비를 생산하는 일반기계공장으로는 용성기계총국을 비롯하여 북중기계, 대안중기계, 낙원기계공장 등이 대표적 공장이며, 공작기계공장으로는 희천, 구성, 만경대 및 평양공작기계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철도차량, 조선 등 수송기계공업 부문은 북한 유일의 자

동차공장인 승리자동차공장과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6월 4일차량 공장(원산철도차량공장),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 등에서 트럭, 전기기관차, 증량화차, 2만톤급 선박을 자체생산 및 건조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주요 기계제품의 연간생산능력은 트럭 3.3만대, 공작기계 3.5만대, 조선 21.4만톤(G/T) 등 전년도의 생산능력과 변동이 없다.

기계공업의 한 부문인 兵器工業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사정거리 1,000km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등은 일부 중동국가에 대량 수출을 시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표8> 북한의 기계공업 생산능력

| 구 분 | 단 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자 동 차 | 만 대 | 3.3 | 3.3 | 190.2 |
| 공작기계 | " | 3.5 | 3.5 | 26.3 |
| 조 선 | 만 G/T | 21.4 | 21.4 | 342.2 |

자료: 통일원.

(4) 化學 및 建材工業

북한의 化學工業은 해방전 日帝가 건설한 흥남질소비료공장, 아오지화학공장 등을 기초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 화학공업의 중심지는 주로 함경남북도가 되어 왔다.

오늘날 세계 화학공업의 발전 추세는 대부분 石油化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국내 자원의 개발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石炭化學工業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精油工業이나 石油化學工業은 규모도 영세하고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유공장은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연간 200만톤 원

유 처리능력의 승리화학공장(함북 선봉)과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연간 150만톤 원유처리능력의 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이 있고 석유화학공장은 서구에서 플랜트를 도입하여 건설한 청년화학종합공장(평남 안주)이 가동되고 있는 정도이다.

화학비료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함남 함흥)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평남 순천)이 대표적인 공장이며, 소위 '주체섬유'로 불리워지는 비날론은 석탄과 석회석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화학섬유인데 2·8비날론연합기업소(함남 함흥)가 대표적인 공장이다.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주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순천비날론공장과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순천비날론공장은 완공시 연간 10만톤의 비날론과 카바이트, 비료, 단백질 사료 등을 생산하게 될 종합적인 대규모 화학공장 단지로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建材工業은 시멘트, 판유리, 마그네샤크링카 공장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북한전역에는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시멘트공장은 북한 전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주요한 공장은 승호리시멘트, 2·8마동시멘트, 해주시멘트, 고무산시멘트, 순천시멘트, 상원시멘트공장 등인데, 각 공장의 규모는 영세하며 일부 공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어 품질도 저급하다. 그러나 순천시멘트공장과 상원시멘트공장은 일본과 서독에서 설비를 도입한 것으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수출상품으로 되고 있다.

내화벽돌의 원료로 이용되는 마그네샤크링카는 단천마그네샤크링카공장이 대표적이며 소련과 중국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판유리는 남포판유리공장이 대표적이거나 판유리 생산량은 내수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영세하다.

1990년 현재 화학 및 건재공업의 주요제품 생산능력은 시멘트 1,202만톤, 화학비료 351.4만톤, 화학섬유 17.7만톤, 마그네샤크링카 300만톤 정도이다.

<표9> 북한의 주요 화학 및 건재 생산능력

| 구 분 | 단 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화학비료 | 만 톤 | 351.4 | 351.4 | 403.2 |
| 화학섬유 | " | 17.7 | 17.7 | 180.0 |
| 시멘트 | " | 1,177.5 | 1,202.0 | 4,210.4 |

자료 : 통일위.

(5) 輕工業

경공업은 북한의 공업부문중 가장 뒤떨어진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工場·企業所는 그 규모에 따라 中央企業과 地方企業으로 나누고, 中央企業은 中央行政機關이, 地方企業은 地方行政機關이 관리하고 있다.

경공업은 극소수의 일부 규모가 큰 방직공장이나 신발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비재공장이 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생산규모도 영세하고 제품의 질도 조악한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부터는 주민들의 일용생활품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공장·기업소가 유희자재나 폐자재를 이용하여 각종 생활필수품을 생산해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공장·기업소 내에는 生必品職場이나 生必品作業班이 조직되어 이를 전담하고 있다.

1984년 합영법이 발표된 이후 일본의 조총련계 상공인들이 북한에 경공업분야 합작공장들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수출상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북한주민들의 소비생활

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 輸送 · 通信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경제구조적 특징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社會間接資本施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이 매우 낙후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며 수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는 오늘날 북한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있는 휴전선으로 인하여 북한은 東·西海岸線이 단절되어 있고 內陸의 地勢가 험준하여 海運이나 도로수송이 발전되기 어려운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도수송은 1990년 현재 전체 수송의 86%를 담당할 정도로 철도의 존적 수송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수송정책은 철도수송 능력을 높이는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1960년대부터 북한은 새로운 철도의 부설과 동시에 기존철도의 중량레일화 및 철도전기화를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북한의 철도수송 능력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로보수 등 관리소홀과 기술낙후로 화물수송 능력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남북회담 대표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성-평양간 특별열차의 운행속도는 시속 40~50km에 불과하며, 더욱이 북한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의 진술에 의하면 동일한 구간의 운행에 소요된 시간이 12시간이나 되었다고 한다.

1990년 현재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045km이며, 그중 98%가 단선철도이며 3,194km가 電鐵化되어 있어서 전철화율은 63%로 남한보다 앞서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3,000km로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도로의 포장률은 7.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근 油類事情이 극도로 어려워짐으로써 수송화물의 도로이용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속도로는 평양-원산을 비롯하여 4개 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연장은 354km이다. 1989년 「평양축전」 이전에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였던 평양-개성 고속도로(200km)는 포장용 原資材의 不足으로 노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 개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양-회천간 120km 건설공사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해운수송 역시 낙후되어 있다. 북한의 항만 하역능력은 연간 3,490만톤에 불과하나 최근에 UNDP가 주재한 국제회의에서 「선봉 경제무역지구 설치구상」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북한은 앞으로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선봉(웅기), 나진, 청진 등 항구에 外國資本을 유치하여 항만 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통신 시설은 情報統制社會의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가장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1989년에 개척되었던 「평양축전」 준비 과정에서 평양의 국제통신지구국과 국제통신센터 등이 건설되고 시내 자동전화 회선도 일부 증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의 국제전화 직통선도 개설하는 등 통신시설에 대한 관

<표10>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 구 분 | 단 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철도총연장 (전철) | km km | 5,024 (3,084) | 5,045 (3,194) | 6,435 (524) |
| 도로총연장 (고속도로) (포장도로) | km km km | 23,000 (354) (1,497) | 23,000 (354) (1,717) | 56,715 (1,551) (40,545) |
| 자동차보유 | 만대 | 26 | 26.4 | 339.5 |
| 항만하역능력 | 만톤/년 | 3,490 | 3,490 | 224,353 |

자료: 통일원.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경제 발전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 對外經濟關係

(1) 貿易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철저한 理念路線에 따라 政經一致政策이 채택되어 왔다. 물론 197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완전 포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6개년계획(1971~1976년)의 착수와 함께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의 획득을 위해 소위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政·經分離政策의 징후를 나타내었다.

국제경제협력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국제분업원리에 입각하여 유무 상통하는 무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무역은 국가관리하의 計劃貿易이기 때문에 輸出人 품목이나 규모는 ‘인민경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출입계획은 먼저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 등 자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상품에 대한 輸入計劃이 작성되고 그 지불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輸出計劃이 세워지게 되므로 대외무역은 互惠平等의 원칙과 수출입 균형이 강조된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통상 5년 정도의 장기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무역의정서를 교환하여 수출입 품목과 물량을 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왔으며, 對서방 무역과 같은 미수교국과의 무역은 ‘바터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 이후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기간중 무역규모를 3.2배(연평균 18.1%)로 증대시킨다는 과욕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1990년도의 무역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3.3% 감소된 46.4억불에 불과하며 그중 수출은 20.2억불, 수입은 26.2억불로 6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圏域別 무역구조는 소련·중국 등 非西方圏이 전체 무역의 67.5%, 西方圏이 32.5%를 나타내었다.

주요한 교역국은 소련·중국·일본이며 소련과의 무역액은 23.5억불, 중국 5.2억불, 일본 4.8억불 등으로 이들 나라와의 무역이 북한 전체 무역의 72.2%를 차지하고 있다.

<표11> 북한의 무역실적

| 구 분 | 단 위 | 1989년 | 1990년 | ※남한(1990년) |
|------|-----|--------|--------|------------|
| 무역총액 | 억불 | 48.0 | 46.4 | 1,348.6 |
| (수출) | " | (19.1) | (20.2) | (650.2) |
| (수입) | " | (28.9) | (26.2) | (698.4) |
| 무역수지 | " | -9.8 | -6.0 | -48.2 |

자료: 통일원.

연도중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對日 무역에서는 흑자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며, 對中·蘇 무역적자의 지속으로 인한 외채증가는 최근, 이들 국가가 북한에 대해 무역대금 결제를 硬貨로 요구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2) 外債規模 및 合營實績

북한은 1960년대에 있었던 中·蘇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이들 국가의 對北 경제지원이 감소되자,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계획의

수행을 일부 서방선진국들로부터 延拂輸入이나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국제에너지파동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북한은 대외채무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延滯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서방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은 물론 무역적자의 지속으로 外債는 매년 증가되어 왔다.

1990년 현재 북한의 外債는 총 78.6억불로 추정되고 있는데 中·蘇 등 非서방권 외채는 43.7억불, 서방권 외채는 34.9억불 정도이다.²²⁾

최근 소련측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북한의 對蘇 채무는 총 33억 1,000만 루블에 달하며 1991년중 북한은 채무의 일부인 5억 100만 루블을 상품으로 상환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³⁾

<표12> 북한의 외채규모

| 구 분 | 단 위 | 1989년 | 1990년 |
|-------|-----|--------|--------|
| 외채총액 | 억불 | 67.8 | 78.6 |
| (對서방) | " | (27.4) | (34.9) |
| (非서방) | " | (40.4) | (43.7) |

자료: 통일원.

북한은 연체문제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기술 도입이 어렵게 되자, 1984년 9월에는 「合營法」을 발표하여 외채 부담을 지지 않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1979년에 발표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22) 북한의 외채총액은 각 채권국 화폐의 對美弗貨(\$ 환율문제, 연체 이자율의 상이 등으로 달러화 기준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우므로 평가기관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23) 통일원, 「한·소 제2차 북한문제워크샵 출장결과보고」, 1991. 10.

합영법 발표 이후 지금까지의 合作誘致 실적은 1990년 현재 총 135건으로 그중 57%에 해당하는 77건이 조총련 상공인들과의 합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합작 분야를 보면 서비스, 경공업 및 농수산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건당 100만불 미만의 소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 발표에 의하면 홍콩 「中策投資有限公司」와의 합작은행인 「統一發展銀行」이 평양에 설립되었다.²⁴⁾

북한은 서방과의 합작은행 설립을 통해 서방 자본의 도입을 촉진하고 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무역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對外經濟關係의 問題點

최근 북한이 대외경제협력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1991년 8월사태 이후의 소련정세 변화와 이로 인한 대소경제협력 기반의 붕괴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과 ‘주체경제’를 내세워 왔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의 對蘇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었다.

소련 언론 보도에 의하면 1989년 현재 북한 電力 생산의 60% 이상, 탄광 및 정유시설 50% 이상, 강철 30% 이상, 알루미늄 100%, 철광석 40%, 화학비료 14%, 섬유 20% 등이 소련 지원으로 건설된 산업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²⁵⁾

또한 1990년 현재 북한의 對蘇 무역의존도는 51% 이상으로 특히 경제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원유, 코크스, 면화 등 주요 원자재의 對蘇 수입비중도 매우 높으며, 북한 외채의 50% 정도가 對蘇 채무로 분석되고 있다.

24) 평양 중앙방송, 1991. 11. 22.

25) 모스크바 방송, 1989. 9. 2.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 최근 소련 공산당의 붕괴와 경제 약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이미 1990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무역회담에서 양국 무역은 과거의 청산결제 방식을 폐지하고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硬貨決濟方式으로 전환할 것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²⁶⁾

그러나, 북한이 경화결제를 거부함은 물론 소련의 내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1991년 1월~7월까지의 무역실적은 2억 800만 루블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적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²⁷⁾

특히, 1991년 4월에 체결된 무역협정에서는 年度中 소련의 對北 원유수출계획량이 30만톤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선적량은 7월까지 4.1만톤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對蘇 경제협력 기반의 붕괴로 소련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 경제건설계획의 차질은 물론,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원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26) 통일원, 「한·소 제2차 북한분계워크샵 출장결과보고」, 1991. 10.

27) 같은 자료.

4. 南北經濟統合의 可能性

가. 民族共同體 回復의 必要性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의 원리에 따라 나름대로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최근에는 休戰以後 최대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에는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농업생산부문에서도 흉작을 기록함으로써 실질경제성장률은 -3.7% 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력은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3 對 1, 1인당 GNP는 5.2 對 1로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남북간에는 32.2 對 1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었다.

1991년 8월 소련의 보수·강경파가 주축이 되어 일으켰던 쿠데타가 실패하고 蘇聯共產黨이 와해된 사건은, 북한에 대해 동구 공산정권의 연쇄적인 붕괴사태 이후 또 한번의 충격을 주었으며, 침체국면에 빠진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 1991년의 북한 경제동향은 전년도보다 더 침체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일본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金日成은 1991년 10월 중국 방문시 중국으로부터 석유, 석탄, 식량을 각각 100만톤씩 긴급히 원조할 것을 약속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眞僞는 불문하고 그것이 북한의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의 國際情勢를 조감해 볼 때 1990년대의 국제관계는 과거

냉전구조하에서 유지되어 왔던 정치이념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체제가 붕괴되는 반면, 다분히 民族的 實利를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간 협력체제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남북한은 공히 분단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큰 민족적 손실을 강요당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나 변화되는 국제질서속에서 민족적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南北關係에 있어서도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대결차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우리의 통일방안에 입각한 民族經濟共同體 회복에 동참하는 정책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南北交易 現況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은 相異한 경제체제위에서 民族經濟共同體를 회복해 나가는 첩경은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두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과 同年 10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의 실천을 위한 경제부문 후속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간에는 직·간접교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상호교류와 협력의 제도적 바탕을 정비하였다.

반면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시종일관 政治·軍事問題의 우선적인 해결을 주장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 경제발전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그 주된 원인이며, 1989년이후 동구국가들의 급진적 開放·改革과 서독의 동독 흡수통합에 따른 충격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南北交易實績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7·7선언」이후 남북교역의 발전추세를 보면 우리정부의 남북교역 승인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88년 반출·입총액은 103.7만 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는 2,230.4만불(반입 2,223.5만 불, 반출 6.9만불), 1990년 2,508.5만불(반입 2,035.4만불, 반출 473.1만불)로 증가되었고, 1991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이 1억 4,691.7만불(반입 1억 3,369.1만불, 반출 1,322.6만불)에 달하고 있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로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남한으로부터의 반출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直交易에 응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1991년도의 반출입품목을 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아연괴, 냉동조기, 냉동명태, 철강, 빌레트, 금괴, 생사 등 1차금속제품과 농·수산물에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북한으로의 반출품목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나일론 직물, 백설탕, 쌀, 칼라TV, 직물 등이다. 그러나 직교역에 의해 처음 반출된 쌀 5천톤의 대금을 북한이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반출업체인 천지무역에 대해 1991년 10월 「남북협력기금」에서 약 1억 2,700만원을 損失補助金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부문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여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合作投資와 같은 경제협력 사업에서는 전혀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南北關係에서 그동안 견지해 왔던 소극적이고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12월 28일에는 북한이 「정무원결정 74호」에 의해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621km²)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는 등 본격적인 經濟開放에 착수하였다.

다. 經濟統合의 可能性

1990년 7월 동·서독간에 經濟統合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10월에는 政治統合이 실현되었으며, 한반도 분단의 주역을 맡았던 소련에서도 1991년 8월 쿠데타 실패이후 공산당이 와해되는 등 1989년이후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南北統一의 외적환경이 급속히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통합이나 통일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南北經濟共同體와 독일통일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經濟統合間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회복이라 함은 南과 北이 각각 상대방의 體制를 점차 상호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물자와 자본, 기술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민족 단일의 경제권을 회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主權은 당연히 南과 北에 별개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통합은 경제공동체보다 완결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적 주권은 南과 北에 별도로 귀속될 수 있으나 각각의 경제체제는 兩立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경제통합과 함께 정치적 통합이 실현되면 南과 北에 나누어져 있던 경제적 주권도 통합된 정부에 귀속되어 완전통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간에 경제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은 경제체제의 單一化이며,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거나, 남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선택하거나, 또는 남북한이 공히 현재의 자기 체제를 포기하고 제3의 새로운 경제체제(혼합경제)를 공동으로 창출하거나 하는 3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이 社會主義 경제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길을 선택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가 市場經濟로 이행되는 것은 최근 세계정세의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1985년 소련의 변화로 인해 東歐諸國에서부터 개혁·개방이 급진전되자 이러한 추세를 사회주의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帝國主義者들의 책동에 의한 것으로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 19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주변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 여파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9년말 동구 사회주의정권들이 차례로 붕괴된 이후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政治思想教養을 강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1991년 소련사태 이후에는 태도를 급변하여 UN동시가입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결정하는 등 對外開放을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지도층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함을 인식하면서도 개혁·개방의 여파가 現體制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대내적으로는 주민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바탕위에서 改革보다는 開放에 비중을 두는 戰略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북한 내부상황에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한 당장에 독일의 경우와 같은 경제통합이 가능하리

라는 성급한 기대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경우 南과 北은 經濟共同體의 과정을 거쳐 經濟統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結 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논의는 사회주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理想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잘못된 體制, 잘못된 政策으로 인하여 구조적 모순이 심화됨으로써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특히, 1990년에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정세 급변으로 인한 대외경제협력 여건의 악화와 농업생산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함으로써 극심한 경제침체에 빠졌으며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991년 8월의 소련사태이후 朝·蘇 경제관계는 전년도보다 더욱 악화됨으로써 연도중 북한경제는 농업생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업원료, 기계설비 등의 공급부족으로 성장실적은 매우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간 경제력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도 必然的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 지도층이 대내적으로는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를 구호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통제

를 강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경제개방을 시도하는 兩面戰略을 구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현 여건상 南北經濟統合이 당장에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통일방안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경우 南北經濟共同體의 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 내부에서 돌발적 변수가 발생할 경우 경제통합의 기회가 의외로 빨리 주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經濟統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충분한 힘을 길러 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라 하겠다.

Ⅲ 北韓의 社會

任 鍾 嫻(統一研修院 教授)

| | |
|-----------------------------|-----|
| 1. 序 言 | 87 |
| 2. 社會政策과 社會體制의 構造的 特性 | 88 |
| 3. 住民生活 | 91 |
| 가. 衣·食·住 生活 | 91 |
| 나. 家庭生活 | 100 |
| 다. 職場生活 | 101 |
| 라. 消費生活 | 105 |
| 마. 餘暇生活 | 107 |
| 4.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 110 |
| 가. 冠婚喪祭 | 110 |
| 나. 歲時風習 | 113 |
| 5. 保健·醫療 | 115 |
| 가. 無償治療制 | 115 |
| 나. 豫防醫學的 方針 | 116 |
| 다. 醫師擔當區域制 | 117 |
| 라. 東醫學 | 118 |
| 마. 醫療機關 | 119 |
| 바. 疾病 | 121 |
| 6. 言論實態 | 121 |
| 7. 結 言 | 124 |

1. 序 言

南北分斷의 장기화는 南과 北을 思想과 理念을 달리하는 이질적 체제로 兩極化하였고, 이에 따라 南과 北은 각기 다른 생활양식과 감정을 형성시켜 왔다.

우리는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따라 個人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北韓式 社會主義理念에 따라 個人의 선택보다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 全社會的 動員體制를 발전시켜 왔다.

人間은 원래 다양한 욕구를 가진다. 生存과 관련된 의·식·주 등의 생리적인 욕구를 비롯하여 안전, 소속, 지위, 인정, 성취, 자유 등의 사회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욕구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 모든 生活의 條件은 黨의 統制에 의하여 個人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管理하며 집단의 욕구에 귀속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社會的 욕구는 黨으로부터 결정지어진다. 그것은 黨의 결정이 곧 보다 높은 지위, 권세, 안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즉, 주민의 衣·食·住 問題를 골고루 원활하게 해결하는 일에 국가의 깊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은 무료나 마찬가지인 가격으로 食糧을 공급받고 있으며, 衣服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주택을 통해서도 막대한 추가적 惠澤을 받고 있는데, 주택은 國家資金으로 건설되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商業은 本質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공급활동이며,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의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生産된 商品들은 全國의 市場에 체계적으로 할당되며,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公共給食 事業과 便宜 서비스 事業도 크게 신장되어 그러한 시설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文化的인 것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부들의 家事負擔을 덜어 주어 적극적으로 직장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北韓은 黨의 人民의 政策에 의하여 실업자도 걸인도 없으며, 누구나 의식주 문제로 신경을 쓰는 일이 없이 넉넉하고 文化的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러나 北韓의 선전대로 하더라도 주민생활은 集團主義原則에 따라 黨의 계획적 통제와 조직적 배려로 個人의 선택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黨과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北韓의 이러한 資料를 참작하면서 그들의 社會構造와 住民生活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社會政策과 社會體制의 構造的 特性

社會政策의 基本은 供給정책인데 그 내용은 供給노선과 供給규모를 앞세워 體制의 基盤을 公同화하고 政治權力의 安定·유지도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 「조선개관」(평양:외국문출판사, 1987), 통일원 번역자료(1988), pp.150-156.

따라서 계급정책은 社會主義建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北韓은 人類歷史를 계급투쟁 과정에서 보는 共產主義의 계급투쟁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北韓의 계급정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 입각한 온 사회의 革命化, 勞動階級化의 실현에 있다.

金日成은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을 다 革命化하는 과정이며, 全社會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표면상으로 볼 때,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그 目標로 하고 있다.

北韓이 주장하는 共產主義 社會政策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生産手段을 國有化하고, 소위 ‘반당·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사회를 조직화하며, 전주민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개조하는 과정으로 일관된다.

北韓이 이같은 政策目標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온 社會分野의 政策으로는 계급정책을 비롯하여 전통적 가족제도와 생활 풍습의 변질, 의·식·주 생활의 통제노력 강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社會政策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김일성가계 우상화조작과 사상적 교화작업을 통하여 전사회적 동원체제와 온사회의 主體思想化 運動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會政策의 결과, 北韓社會體制의 구조적 특성은, 첫째, 權力이 黨에 집중되어 있고, 유일정당에 의한 완전 지배권이 확립되어 있다. 黨은 혁명의 중추적 추진세력이고, 또한 국가 최고의 명령기관이다. 즉, 北韓을 통치하는 집단은 조선노동당이 며, 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國家主席인 金日成 1人이다.

黨員은全體住民中에서 특정條件을 갖춘 사람만이 선발되고 體制維持에 공헌할 열성분자들로 구성된다. 黨은 국가조직의 基幹이고, 독재의 基盤이기도 하며 또한 미래의 지도층을 양성하기도 한다.

黨員은 정상적인 각자의 과업외에 국가적 사업을 지지하고, 또 보조하면서 일반주민을 감시하고 반체제적 활동을 견제하는 일을 맡는다. 현재, 북한에는 300만 黨員(1986년 현재)이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분이나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엄격히 구분된다.

둘째, 김일성 주체사상과 黨의 유일사상 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 사회이다.

北韓 憲法 第4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반대되는 이데올로기가 허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주체사상은 정치, 경제, 종교활동을 비롯한 人間行動의 전부를 규제하는 광범한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意志이며, 누구나 이 원리에 복종하도록 강제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社會體制의 指向은 주체노선인 것이다.

셋째, 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통제적 조직사회이다.

北韓社會에서는 모든 주민을 조직속에 묶어 두고 집단적 능력의 상호경쟁으로 효율성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이 자율적이고 독창적일 수 없다.

北韓의 모든 社會組織은 상이한 계층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민을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黨의 후비대에 지나지 않는다.

北韓 憲法 第49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체와 개체의 이해는 언제나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北韓의 집단주의체제하에서는 모든 주민이 조직속에 묶어져야 하며, 黨의 지령에 따르는 일사불란한 획일성이 요구된다. 이는 바로北韓이 지향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행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3. 住民生活

가. 衣·食·住 生活

(1) 衣 生活

北韓의 의류공급은 신분에 따라 差等供給制가 실시되고 있다. 즉, 계층에 따라 中央供給對象과 一般供給對象으로 구분, 공급량과 품종을 달리한다.

중앙공급대상은 급수에 따라 2~4년에 양복 또는 복지가 한벌씩 염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반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벌 정도 노동용품자라는 명목으로 광목, 포플린, 스포직물 등이 배급된다. 그러나 예술가, 당·정간부, 기자, 교원들에게는 의류를 特配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1950년대 말까지는 소위 ‘千里馬時代’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男子는 인민복에 레닌모(帽), 女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제일조총련계 교포의 北送事業과 관련한 입북자들의 옷차림 영향과 1970년대 초부터 남북회담이 실현되면서 韓國人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김정일의 지시(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생활미감에 적응하라.)에 따라 나름대로 단조로운 의복패턴으로부터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기 이후부터 각종 옷전시회(춘추의류전시회, 기성복전시회 등), 옷품평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여성들에게 출퇴근 등 외출시에는 필히 화장을 하고 양장 또는 색깔있는 화려한 옷을 입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신체노출이 있는 의상도 더러 나타나고 있으며, 구두도 하이힐을 신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의 교복도 점차 양장으로 교체하였다.

男子들에게는 신사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장려하고, 짙은색 의복(콤비), 잠바 등을 착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다양화, 세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일반 주민들은 신사복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착용시에도 세탁 등이 불편하여 인민복을 계속 입는 실정이다.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외출시 복장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는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이는 北韓社會의 허상과 실상이 괴리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평양과 각 직할시 및 도 등에 피복연구소가 설치

되어 있으며,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옷으로 전국적인 의복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사업으로는 형태설계, 가공공업화계획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金正日이 주장하는 ‘人民生活 向上運動’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사회주의 생활 문화」라는 패션잡지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²⁾

그리고 金正日은 1988년 2월 29일 소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창안·제작된 의류도안, 신발도안 등 각종 생활용품 도안과 제품 등이 전시된 경공업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주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경공업 혁명을 계속 벌여 나감으로써 질 좋은 여러가지 경공업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경공업 제품의 질적 개선과 量産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전시회의 의류부문에서는 7백 80여점의 도안을 비롯해 남성용양복, 잠바, 셔츠, 바지 등과 여성용한복, 외통옷(원피스), 동강옷(투피스), 뜨개옷, 아동용의류 등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또한 신발류에서는 구두, 운동화, 샌들, 장화, 그리고 모자류에서는 종이모자, 초물모자(밀집모자)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³⁾

한편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려 일으키겠다.”는 北韓의 방송논조로 보아 입는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욕구는 점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경공업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北韓이 주민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일조총련계 실업인들과의 合營事業이 그런대로 활발해지면서 옷공장이 많이 생겨,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양복을 입거나 양장을 하고 외출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岡田穂, 「平壤의 人民生活(上)」, 《現代코리아》, 1988. 5), pp.41-42.

3) 内外通信(자료판 제614호, 1988. 11. 11)

(2) 食生活

北韓은 社會主義政權 수립이후 지금까지 농업생산체제의 사회주의화를 통해 “농촌경제의 수리화, 전기화, 종합적 기계화 및 화학화” 등 농업근대화를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에 있어서는 식품가공 및 처리기술, 저장수단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다 생산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각종 식품의 공급이 적시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식생활의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에 있어서도 北韓은 1957년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식량의 自由販賣制를 폐지하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해 完全配給制로 전환하였다.(단, 협동농장원은 연말 결산분배)

그리하여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하여 최소한의 延命에 그치는 실정이다.

쌀생산량의 부족은 심각한 실태로서 金日成은 1982年 新年辭에서 “쌀은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농업부문의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가 하면 종래의 의·식·주라는 語順을 식·의·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⁴⁾

金日成은 “옷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⁵⁾라고 강조함으로써 식생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500만톤 알곡고지 점령’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30만정보 간석지 조성, 20만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군칭호 쟁취운동’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되는데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

4) 노동당 제6기12차전원회의 (1986. 12. 27)

5)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7

급카드로 里·洞배급소에서 유상으로 배급받으며, 대상자의 신분과 직위, 지역, 시기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비율 등에서 差等配給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출장 또는 여행시에는 미리 발부받은 糧券과 食代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방문의 경우에 통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때는 糧券을 지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배급시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평양이나 직할시는 6(쌀):4(잡곡)이고, 지방은 作況에 따라 다르며, 산간오지에서는 2(쌀):8(잡곡)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부녀자들의 노력동원 극대화를 위해서 강조된 바 있는 ‘밥공장’의 대폭확대 결정에 따라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는 主食을 가공하는 밥공장과 半製品으로 된 부식물 및 국거리를 배급하는 봉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⁶⁾

그로 인하여 북한주민중 가족이 적은 가정은 15일간 먹을 식량을 배급받을 때 양곡이 아닌 糧券으로 받는다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취사하여 식사하는 것보다 밥공장의 아침·저녁 매대에서 糧券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副食은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을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식료품상점에서 임의 구입하고 있다.

고기류는 名節特配를 통하여 할당되는데, 김일성부자 생일, 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배급받으며, 배급받는 대상과 시기, 수급사정에 따라 공급품목이 다소 달라진다.

만약 배급이외의 主·副食을 구입하려 할 때는 비싼 값으로(배

6) 로동신문, 1984. 4. 2.

7) 북한실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100.

급쌀 1kg:8전, 암거래:10원) 구입할 수 있다.

地上天國임을 자랑하는 北韓은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에 대비하여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즉, 주요도시의 정비와 건축물, 주민의 의복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먹는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北韓에서는 식량절도, 약탈, 횡령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 生活苦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中國, 泰國 등에서 쌀을 도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산 쌀도 수입해 가고 있다.

이렇게 北韓住民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첫째, 北韓의 영농체계나, 영농기반의 문제이다.

北韓의 영농체계는 청산리방법에 의한 集團營農體系이다.

토지뿐 아니라 낫, 호미에 이르는 小農機具까지도 일체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작업장에서 일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없다. 농민의 생산의욕이 결여된 상태에서 식량증산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경지면적이 부족하며 기후조건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當局은 간석지개간, 다락밭일구기, 새땅찾기 운동을 벌여 농경지 확장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관개수로, 양수장건설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다락밭일구기 사업으로 황폐해진 산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서 오히려 기존의 농경지를 잠식해 가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군사비부담, 展示的 尙品의 축조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먹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북한의 식량 배급기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름)

| 구 분 | 배급량(g), 1인1일기준 | 백미:잡곡 혼합비율 |
|------------|----------------|------------|
| 당 및 정권기관간부 | 700g | 10:0 |
| 특수군인(경보병) | 800g | 7:3 |
| 군인 | 700g | 3:7 |
| 중노동자 | 800g | 3:7 |
| 일반노동자, 사무원 | 600g | 3:7 |
| 대학생 | 600g | 3:7 |
| 고등중학생 | 500g | 3:7 |
| 인민학생 | 400g | 3:7 |
| 유치원이하 아동 | 300-100g | 3:7 |
| 부양가족 등 무직자 | 300g | 3:7 |

(3) 住 生 活

北韓에서는 個人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性分과 職位에 따라 등급별로 규격화된 독립가옥 또는 연립주택, 아파트를 할당받는다.

住宅形態는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이며, 조립식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격화된 아파트와 연립식 주택형태는 施工의 경제성과 편의성 이외에 集團主義의 주거양식에 의거한 획일화 추구에 따른 것으로써, 이른바 民族的 樣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으려는 黨施策의 결과로써 이는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주민 상호간의 감시·통제 및 주민 동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데서 기인한다. 주택의 규모 및 시설은 주택의 規格化, 集團化施策으로 말미암아 주거생활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내·외장도 거의 획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마다 獨立의 부대시설도 제한되어 있다.

주택 현황은 연간 주택건설목표 달성의 부진과 공급대상 인구

의 증가에 따라 住宅普及率은 6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결혼하여도 쉽게 방을 할당받을 수가 없어 상당기간 신혼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1세대용 아파트 또는 주택에 2~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농촌의 경우는 재래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초부터는 평양 시내 주택의 高層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0~40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이래 남포, 원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도 고층아파트(10~30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⁸⁾

최근 평양에서는 1986년까지의 천리마거리 제2기 주택건설, 그리고 1988년까지로 계획된 광복거리의 재개발에 따른 住宅建設 등이 이루어졌으며, 1991년 완공을 목표로 낙랑거리, 하당거리 등을 새로 건설하고 이곳에 5만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였다.

현재 주택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평양을 비롯하여 신의주, 함흥, 원산, 순천 등 도시지역으로서 기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주택난은 더 한층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난이 심해지자 공여지책으로 개인이 집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멘트와 벽돌은 당국에서 實費로 지원하고 개인이 기타 건축자재를 부담하여 건축하며 대개의 경우 방1칸, 부엌1칸 정도라 한다. 이 경우 집은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나 財産上의 登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매매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私有財産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推進中인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 기간중에는 전국적으로 20~30만세대의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형은 크게 보아 당·정 부부장급 이상이 거주하는 特號로부

8) 로동신문, 1984. 4. 2.

터 말단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할당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주택배정은 階級과 性分에 따라 차등화하여 할당하고 있다.

<住宅事情(平壤)>

| 區分 | 住宅型 | 家屋構造 | 入 住 者 |
|----|-----------------------------|---|--|
| 特號 | 獨立高級住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立式 단층 또는 2층 住宅 ○ 庭園 ○ 수세식 변소 ○ 冷溫房 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
| 4號 | 新型高層아파트 (세대당 20-30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변소 ○ 베란다, 冷溫水施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 기업소 책임자 |
| 3號 | 中級 單獨住宅 및 新型아파트(세대당 15-20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 ○ 부엌, 倉庫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이상 ○ 기업소 부장 ○ 학교 교장 |
| 2號 | 一般아파트 (세대당 7-10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마루방 1, 부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원 ○ 일반노동자 ○ 시·도과장급 ○ 사무원 ○ 도급기관 지도원 |
| 1號 | 集團 公營住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부엌 | ○ 일단근로자 및 말단사무원 |
| | 農村 文化住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層 聯立住宅 ○ 방2, 부엌, 창고 | ○ 협동농장원 |
| | 舊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의 農村既存舊屋 | ○ 변두리 농민 |

나. 家庭生活

家庭이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人間的 삶의 공간이며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安息處가 된다.

가정생활은 그 사회의 體制的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정생활의 유형이 社會構造的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한 국가의 國民性形成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북한헌법은 제63조에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家族에 대한 개념은 마르크스·엔겔스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役割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 형태가 생성 변화해 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해야 한다.”⁹⁾라는데 기반을 둬으로써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集團主義體制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同族集團의 조상숭배개념은 배제되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가족구성의 변형은 戶籍制度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된다.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을 封建社會의 잔재라 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1946년 9월 1일부터 公民證制度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친족 범위가 直·傍系血族으로 제한되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動態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민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족 중심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家父長的 위계

9) 엔겔스,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1884).

질서의 파괴, 그리고 大家族制度의 붕괴를 초래케 하였다.

北韓은 가정이 人間的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黨的 統制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黨的 課業을 촉진하는 媒介集團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강조한다. 북한은 家庭의 革命化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양식의 溫床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社會主義建設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습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北韓의 가정은 최저 生産單位인 동시에 社會主義革命理論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가정의 政治化가 더욱 촉진되어 가고 있다.

北韓에서는 가정생활까지 黨的, 政治的 介入이 이루어짐으로써 혁명수행단위로서의 家長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家族成員들은 부부·형제이기에 앞서 思想的 同志가 되어야 한다.¹⁰⁾

즉, 가정은 혁명의 細胞單位가 되며 전통적 친족범위는 직·방계혈족으로만 국한되고, 가정의 형태가 社會主義的으로 개조되었다.

다. 職場生活

北韓에서는 個人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權利와 自由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어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黨과 政權機關의 조정, 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北韓住民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다. 그것은 北韓의 모든 직장이 社會主義經濟體制下에서 노동당의 획일적 지도, 감독을 받으며 관리되고 모든 농장, 공장, 기업소가 國有化, 集團化되었기 때

10) 조선중앙년감(1984), p.302.

문이다.

직장배치에 있어 가장 核心的인 판단기준은 性分(출신성분, 사회성분)과 黨性이라는 이른바 政治的 表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核心階層은 黨·政·軍幹部로 등용될 수 있고, 승진이 보장된다.

動搖(基本)階層은 각종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극소수만이 黨·政機關에 상향 이동되나 책임적 지위(위원장, 단위기관 책임자)까지는 승진되기가 어렵다.

敵對(複雜)階層은 有害 중노동직에 배치된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表徵인 職務遂行能力으로서, 여기에는 學歷, 자격, 전개력,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연수, 근무평정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學歷이 사회적 上昇異動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기본계층과 복잡계층의 자녀는 진학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職種 및 職場에 진출할 기회는 어렵게 되어 있다.

직장배치과정을 보면 모든 就業은 전적으로 黨의 指示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상자는 시·도행정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 간부부(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발부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의 人事行政의 기본원칙은 政治的 信任度를 기준으로 직장을 알선하며, 이 경우에도 오직 중앙의 需給計劃에 의한 직장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그 다음으로 참작되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노동의 權利 즉, 취업의 기회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즉, 黨政의 노동력흡수계획에 따라 모든 勞動能力者를 전원 직장에 배치하기 때문에 완전취업이 보장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 및 직장배치시 개인의 능력, 성향, 의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潛在失業率은 그만큼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黨幹部의 자녀는 中央黨과 政務院 등 中央機關에 배치되고, 平黨員의 자녀는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대개 지방의 기관 및 기업소에 배치된다.

이와 같은 획일적, 차별적 인력배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 불만과 태업적인 근무자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政治思想敎養이 요구되는 것이며, 소위 ‘社會主義 競爭’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적 감시에 의한 노력의 집단화와 노력동원의 극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北韓은 그동안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方法으로 個人, 作業分組, 作業班, 職場, 工場, 企業所 또는 協同農場을 단위로 하여 대중적 勞力競爭運動을 계속적으로 強化시켜 왔다.

1957년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을 비롯하여 6개고지 점령운동, 10대과업 완수운동, 속도전,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건설대 등에 각양각색의 돌격대(속도전 돌격대, 붉은청년 돌격대, 2·17과학자 돌격대 등)를 조직하며 勞力動員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 100일전투, 200일전투 등 限時的 노력독려, 숨은영웅 따라 배우기운동, 침식을 직장으로 옮기기운동까지 강요하면서 “수령과 黨이 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는 설 權利도 죽을 權利도 없다.”¹¹⁾ 라는 구호아래 주민들의 勞力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제3차 7개년계획을 成功的으로 완수하여 사회주의의 完全勝利를 보장한다는 구실하에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벌이고 있다.

11) 조선중앙방송(1984. 8. 15)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성별, 연령별에 관계없이 같은 勞動에 대해서는 같은 報酬를 받으며, 分配에 있어서는 노동자, 사무원 구분없이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賃金は 직종 및 기술급수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임금기능 等級制를 적용한다.

한편, 협동농장원들은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과 는 달리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에 의해 現金과 現物을 분배받는다.

北韓은 黨의 일방적 직장배치에서 오는 모순을 탈피하는 한 방

<北韓의 階層別 賃金(月給)>

| 區 分 | | 賃 金(원) | 備 考 |
|-----------------------|-------------|---------|--|
| 事 務 員 | 部 長 級 | 300~350 | 黨政治委員, 政務院 및 黨部長, 特級企業所支配人, 科學院院士 등 |
| | 地 方 單 位 | 100~150 | 道幹部 및 郡單位 責任者 |
| | 一 般 事 務 員 | 70 | |
| 技 術 者 | 責 任 者 級 | 150~200 | 1~2級 企業所・工場 등의 支配人 및 技師長 |
| | 5 等 級 技 術 者 | 75~80 | |
| 勞 動 者 | 重 勞 動 者 | 130 | 鑛夫, 製鐵・製鍊工 |
| | 輕 勞 動 者 | 90 | 一般機械運轉士 |
| | 其 他 | 60~80 | 一般輕勞動者 |
| 教 員 | 大 學 | 200~250 | |
| | 一 般 | 80 | |
| 軍 人 · 將 校 | 將 星 級 | 250~490 | |
| | 領 官 級 | 120~215 | |
| | 尉 官 級 | 84~110 | |
| 其 他 | 醫 師 | 120~250 | ※ 평양산원의 경우 |
| | 俳 優 | 200~300 | ※ 人民배우, 功勳배우 등 |

법으로 1984년부터는 科學英才教育을 위한 教育기관으로 평양제일
고등중학교를 신설한 이래 1985년부터는 평양과 각 직할시, 도에
1개교씩 증설하는 등 才能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
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人力養成에 부심하는 것은 제3차 7개년계획
동안에 科學技術發展에 주력한다는 黨의 정책적 고려와 黨性和 출
신성분위주의 층원방식에서 오는 經濟的, 科學的 낙후성탈피 및
주민 불만요인 해소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北韓이 그동안 답습해 온 思想을 절대시하는 인력활용정책
에서 탈피하여, 일부나마 資質과 實力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바뀌
었음을 뜻하며 이같은 경향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¹²⁾

라. 消費生活

北韓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이 도매소와 소
매소를 통해 유통된다.

都賣所는 生産業所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小賣所에 공급해 주
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里·洞單位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이나 도
시에 있는 백화점과 유사한 종합상점이 소매소에 해당된다.

도매소의 종류는 중앙도매소, 各道의 도매소, 市·郡의 지구도매
소로 구분된다.

이밖에 重要한 商品에 대해서는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
매소, 육류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이 있으며, 小賣所의 종류는 평
양의 백화점, 지방도시의 종합상점, 직매점, 각 里·洞상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소매상점들은 상품에 따라 이동판매, 배달
판매, 야간판매, 주문판매방법 등을 사용하여 生活必需品을 일반주

12) 피ョンヤン 見たまま(現代코리아), 1985. 8-9월호, pp.28-29.

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北韓의 공급체계는 기본적으로 注文方式에 입각해 각 하부단위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상품주문서를 작성, 상급단위로 올리면 그 양만큼 생산하여 小賣商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이후의 輕工業重視政策에 따라 이 주문생산제 방식에 예외가 생겼다. 즉, 사전 주문없이 공장으로부터 그때그때 직접 조달해 판매하는 대도시의 直賣店이 늘어나고 있고, 농민 각자가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農民市場도 활발해지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나마 市場經濟要素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의 價格은 정무원 가격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同委員會는 제품의 평균원가에다가 기업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利潤으로 추가하여 상품별, 등급별, 품위별로 가격에 차이를 둔다.

이렇게 國定價格이 결정되어 各地域 里·洞單位로 설치되어 있는 소매점으로 하달되면 소매상점은 일반주민들의 구매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을 확인하고 판매한다.

그러나 TV, 냉장고, 시계 등 사치품은 구매카드에 따라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직장에서 할당해 주는 자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카드없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商品은 휴지, 옷핀, 손톱깎기 등 극히 값이 싸고 소형인 제품에 한정된다.

한편, 적당한 곳에 농민시장(장마당)을 개설하여 協同農場의 초과생산물, 텃밭에서 생산된 각종 채소, 가내부업으로 키운 축산물, 잡곡류 등에 한해 自由販賣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의 농민시장 개설목적은 협동농장원들의 생활향상 도모와 노동의욕 고취, 國營商店이 제때에 供給하지 못하는 생활필수품의 적기공급, 현물교환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식량, 식료품, 중고가구,

외제 옷감, 귀중품, 축산물, 중국거주 韓人이 訪北時 가지고 온 옷감과 피복류, 시베리아파견 벌목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온 공업생산물, 北送僑胞 및 일본내에 거주하는 북송교포의 친척이 방북시 가지고 온 물건 등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資本主義社會의 시골장터를 연상케 하고 있다.

1984년부터 農民市場은 확대되기 시작하여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도 구역별로 농민시장(장마당)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에서도 식량, 술, 담배 등 몇몇 品目を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민시장은 최근에는 常設 市場化되어 시장내에 관리소를 두고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며 식당과 청량음료코너가 마련되는 등 편의 시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시장에서는 잡곡류, 채소류, 가내수공업제품 등 거래가 許可된 상품들뿐만 아니라 매매금지 품목까지도 눈을 피해 暗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상품들의 市場價格은 국정가격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農·工產物 등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마. 餘暇生活

北韓은 주민들에게 餘暇時間을 가급적으로 주지 않는 것을 政策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 그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한다. 때문에 個人이 自由로운 시간을 가지고 生活을 즐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직업선택이 黨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일터와 직장이 一元的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이 일과표에 의한 생활은 직종

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日課는 공통성을 띠게 된다.

특히 생산분야 노동자의 경우 매일 완수해야 할 責任量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에는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행사 등에 동원되는 예가 많으므로 제대로 쉴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個人的 時間은 雜念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共產主義式 思考方式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活用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公演觀覽도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과 인민반조직을 통한 集團觀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보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더욱이 북한의 영화, 연극은 공산주의 사상교양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고 즐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政治學習의 연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北韓 住民들이 공산주의 사상교양을 위해 많이 동원되는 작품은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의 歌劇과, 영화 ‘조선의 별’ 그리고 ‘딸에게서 온 편지’, ‘성황당’, ‘도라지꽃’ 등이다.

이러한 가극, 영화, 연극 등은 평양과 지방의 각 공연시설 즉, 평양대극장, 개신영화관, 낙원영화관, 함흥대극장 등에서 餘暇生活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動員된 가운데 주기적으로 공연 또는 상영되고 있다.

특히 ‘피바다’의 경우는 지난 1971년 初演된 이래 北韓 각지역을 돌며 1,200회 이상이나 공연되었으며, 여기에 동원된 주민수는 200만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한다. ‘꽃파는 처녀’도 거의 비슷한 공연기록과 관객동원수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영화는 평양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개봉된다.

이와 같이 北韓은 주민들에게 思想敎養을 목적으로 연간 평균 25편 정도의 연극, 영화 등을 보게 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부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遊園地에 나들이를 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약 5만의 人波가 모이며, 그곳에서 전동열차를 타기도 하고 곡예공연, 영화, 연극 등을 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아주 조용하게 관람하고 자신의 感情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한 표정들이라고 한다.

北韓에서도 등산, 낚시, 사냥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나 오락은 大衆化되어 있지 못하고 特定階層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登山은 학교·공장·직장 등에서 단체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단순한 취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체육을 통한 여가선용은 개인적 취미활동보다는 政治性, 革命性과 결부시켜 국가목적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스포츠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며, 모든 스포츠활동이 國防力과 勞動力을 強化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직장이나 문화회관 등에는 탁구대, 장기판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으며, 윗놀이 등은 舊正에 하고, 화투 대신 주패놀이(서양식 카드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北韓 住民들의 여가활동은 여가 자체가 不道德視되고, 설혹 여가를 즐긴다 하더라도 心的인 압박감이 우선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가가 政治·思想的 信任을 얻기 위한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4. 冠婚喪祭와 歲時風習

가. 冠婚喪祭

北韓은 관·혼·상·제를 포함한 모든 민속과 생활풍습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성격의 社會主義的 內容과 民族的 形式을 확립한다는 口實下에 전통적인 관·혼·상·제 儀式을 크게 변질시켰다.

그리하여 1955~1960년 사이에 소위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를 단순한 사회적 요구화하는 한편, 統治手段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 婚 禮

北韓에서는 婚禮에 있어 男女當事者의 자유로운 의사와 兩家의 합의도 중요하나 각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黨 및 社會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北韓이 결혼을 男女間의 애정보다는 革命戰士의 결합으로 보고, 가정의 혁명화¹³⁾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가 交際를 하는 것은 組織생활의 紀綱을 흐트리지 않고 생산목표 초과달성에 障礙要素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묵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성간의 교제는 엄격히 통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戀愛風俗은 급속히 증가되는 경향이며, 평양의 경우 대동강, 보통강변에서 데이트하는 모

13) 가정의 혁명화(평양:현대조선말 사전, 1981), p.35.

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혼인의 성립도 부모가 결정하는 중매결혼 형식에서 당사자간의 선택이 중시되는 경향으로 변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黨性, 出身性分, 職業 등과 관련하여 제한조건이 많이 작용한다. 配偶者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시되는 것은 결혼상대의 출신성분과 직업이다. 당 고위층간 부가 아닌 일반계층에서는 당원, 비당원 여부가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으나 6.25 당시 치안대원, 종교인, 지주, 월남자 가족집안 등은 기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식·주 생활이 보다 편한 도시의 남자에게 시집가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연령은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을 보면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병력과 노동력확보 등을 위해 당이 임의로 統制해 왔기 때문에 197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실제 結婚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나 가능했다고 한다.

男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통상 8~10년으로, 군복무중에는 결혼이 不許되고 있고, 女子의 경우 여성들에 대한 노동계급화, 혁명화와 함께 여성노동력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婚期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이 완화되어 女子의 경우는 23~24세, 男子의 경우는 27~28세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결혼 擇日에는 종래의 吉凶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고 있으며, 결혼예식은 회의실 아니면 신부집에서 하고, 主禮는 집안의 연장자나 직장간부가 서게 되는데 김일성 초상화앞에서 주례가 革命家庭의 탄생과 金日成父子와 黨에 대한 충성을 맹세케 하는 절차에 따라 치르고 있다.

禮服은 대부분 평상복차림에 가슴에 붉은 造花를 단다. 최근에

는 평양 등 도시에서 신랑은 신사복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신부는 모두 韓服을 착용한다.

그리고 式이 끝난 후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진다.

(2) 葬 禮

북한의 장례절차는 극히 간소화되었고 3日葬을 치르고 있으나 1~2日葬의 경우도 많다.

葬禮式과 埋葬은 도시의 경우는 녹화사업소,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한다. 喪服은 따로 만들어 입는 일이 없고 팔에 검은 천을 두르는 경우가 있으며, 葬地는 도시에서는 주로 공동묘지를, 지방에서는 편리한 장소에 임의로 매장한다. 喪輿는 없어지고 運柩時에는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1年 脫喪이 통례이나 3年 脫喪도 한다. 북한에서도 최근 묘지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火葬을 권장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는 火葬을 하지 않고 있다.

直系 尊屬의 사망시 喪主에게는 3일간의 공식 휴가가 주어지고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배급된다.

그리고 직장에 따라서는 차량을 지원하기도 하고 扶助金을 걷어 주기도 한다.

(3) 祭 祀

전통적인 祭禮는 미신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祖上崇拜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祭禮는 없어졌다.

그러나 가정에 노인이 있는 경우 매년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데, 제사상은 평시에 먹는 음식으로 사용하고 傳統祭禮에 따라 제수를 별도로 장만하지 않는다. 대체로 밥, 떡, 지짐이, 생선, 과

일, 나물 등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차린다.

김일성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낡은 생활 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혁명과 건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⁴⁾라고 하였다.

나. 歲時風習

北韓은 우리 전래의 歲時風習 자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경력히 배격하였다. 예컨대 중추절의 경우 봉건잔재의 유물, 복고주의의 부활, 긴장의식의 해이, 노동력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였다.

그런데 1972년부터는 추석명절부터 容認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추석날 인근 조상묘소의 省墓를 묵인하였으며, 증명서없이 他郡에 2日間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니 1988년 추석부터는 추석을 휴무일로 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舊正과 端午까지 휴무일로 하여 민족고유의 명절로 부활하였다.

음력 설날은 新正때와 마찬가지로 연하장을 보내고 있으며, 쌀로 만든 떡국으로 아침을 먹고, 각기 형편에 따라 省墓를 하며 웃놀이, 연날리기 등을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남북대화, 그리고 우리의 海外同胞 추석성묘 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최근 美洲를 비롯한 해외

14) 김일성 저작선집(제1권), 1967, p.173.

동포들의 북한방문이 집중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평가된다.

北韓의 선전기관들은 이같은 歲時風習의 부활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찾아주신 명절을 맞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다그쳐 나갈 우리 인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名節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소위 ‘社會主義 名節’이라는 김일성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선물전달, 예술공연, 각종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축하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隔年으로 김정일생일부터 김일성생일까지 ‘忠誠의 祝典’期間으로 설정, 각종 우상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명절 및 공휴일>

| 구 | 분 | 월 | 일 | 구 | 분 | 월 | 일 |
|---|---|-------|-----------------|---------|---|----|---------|
| 신 | 정 | 양력 | 1. 1 | 김정일생일 | | 양력 | 2. 16. |
| 구 | 정 | 음력 | 1. 1('89년 부활) | 김일성생일 | | " | 4. 15. |
| 한 | 식 | 동지로부터 | 105일째 되는날 | 국제노동절 | | " | 5. 1. |
| | | | ('89년 부활) | 해방기념일 | | " | 8. 15. |
| 단 | 오 | 음력 | 5. 5 ('89년 부활) | 정권창건일 | | " | 9. 9. |
| 추 | 석 | 음력 | 8. 15 ('88년 부활) | 당 창 건 일 | | " | 10. 10. |
| | | | | 헌 법 절 | | " | 12. 27. |

5. 保健・醫療

北韓의 보건의료정책은 無償治療制를 기조로 ‘예방의학적 방침 관철, 의사담당구역제 실시’로 요약된다.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시설은 소위 國家所有로 국가가 관리하며,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北韓憲法 第48條를 보면 “국가는 전반적 무상 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北韓에서 보건의료제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無償治療制와 豫防醫學에 중점을 둔 ‘의사담당구역제’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無償治療制

北韓은 1952년 1월 20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노작 발표이후 1960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보건사업 강화에 관한 決定을 채택하고 無醫村의 근절과 무상치료제 실시를 계획한 바 있다.

그리고 현행헌법(제48조)과 인민보건법에서도 “예방의학방침을 위주로 한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를 明文化하여 정책기조로 하고 있고, 또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달리 매달 월급에서 미리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씩 공제를 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약자

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를 내야 하는 등 여러 구실로 기본임금의 10% 이상이 공제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무상치료제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포장된 북한판 醫療保險制度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월남자가족 등 敵對階層은 아무리 重病에 걸려도 高價의 약품을 쓸 수 없으며 市·區域·郡병원 이상의 보다 고급병원에는 입원할 수도 없다¹⁵⁾

나. 豫防醫學的 方針

예방의학이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자는 것으로서, 北韓이 여기에 주력한 것은 1956년경부터이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열악한 社會保健環境에서 연유되었다.

휴전후 3년간이나 계속된 凶作으로 주민들은 영양실조가 되어 각종 질병이 만연되었다. 그러나 빈약한 의료시설을 가지고서는 病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실정에 있었다.

그리하여 北韓當局은 보건문제에 관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는 바, 보건위생의 기본방침이 豫防事業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保健管理는 질병으로 인한 勞動力流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의사와 간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당시의 여건에서는 최선의 조치인 것이다.

현재 北韓에서는 질병예방사업이 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全국가적, 全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15) 김만철 증언(월남귀순자, 1987. 1. 15)

데, 그 기본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⁶⁾

- 위생 선전 계몽 교양사업
- 위생 일꾼의 체계적 양성사업
- 생활 및 노동환경조건 개선사업
- 위생법규의 제정 및 위생검열지도
-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
- 담당구역제 원칙의 실현과 치료예방 원칙의 확대
-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른 의학교육 등

다. 醫師擔當區域制

이 제도는 1964년부터 우선 평양을 비롯한 道소재지 등의 몇개 구역병원과 일부 큰 규모의 산업병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탄광, 광산에서도 직장의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예방의학적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각 의사가 자기가 맡은 責任區域에 나가서 위생, 보건, 접종, 건강진단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 의사담당구역제도는 노동당 제4차대회(1961년) 이후 실시해 왔는데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규모(200~300명)로 區域을 맡아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巡廻診療制度이다.

이 의사담당구역제 실시로 전체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市・郡・區域병원, 공장병원, 里인민병원, 종합진료소와 진료소 등이 이 사업을 직접 맡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의사담당구역 사업을 맡고 있는 市・郡・區域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 임상과의 전체의사들, 그리고 里인민병원 및 진료

16) 북한총람(북한 연구소, 1983), pp.100-104.

소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진, 위생지도, 소독, 예방접종 등 衛生防疫事業을 조직, 집행하고 있으며 검진, 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명의 의사가 200~300명의 주민을 한나절에 진료해야 되니 正常的인 진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담당구역제에 충실할 수 없는 실정이다.¹⁷⁾

이 제도가 질병의 豫防的인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으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여 이를 은폐함으로써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라. 東醫學

북한의 치료·예방사업의 특징은 洋醫學과 東醫學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동의학을 과학화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北韓이 동의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現代醫藥品の 절대 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성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즉, 北韓은 그들의 기술수준으로는 현대의학의 開發이나 發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 현대의학과 동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보건정책하에 漢方을 토대로 한 동의학연구와 제약공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

1958년 6월부터 의과학원 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各市·郡單位까지 동의학관리국을 설치했으며, 이어 1974년 3월에는 동의학 약초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東醫學開發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78년부터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일정량의

17) 김만철 증언(월남귀순자, 1987. 1. 15)

藥草를 생산하도록 의무를 賦課하고 있으며, 각급 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발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농촌가정에 사유경작지로 허용된 20~30평 규모의 텃밭중 2~5평 이상씩 약초재배를 강요하는 등 약초생산을 全群衆的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 民間療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1964년 11월 의과학원 산하 동의학연구소의 민간요법연구실 연구팀을 중심으로 民間療法을 널리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질병의 종류별로 연구, 임상 검토하였다.

북한의 의과학원 산하 동의학연구소에서는 45,000여건의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한 「민간요법」, 「동의학의 민간요법연구자료」 등의 서적을 發刊한 바 있다.

마. 醫療機關

의료기관으로는 중앙에 종합병원인 중앙병원, 직할시와 도단위에는 대학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인 결핵병원이 있다.

市(區域)・郡 행정위원회 소재지에는 1~2개의 인민병원이 있는데 시립병원, 郡인민병원, 區域병원이며 도시지역에는 2~3개 洞마다 종합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1974년부터는 里(노동자區) 단위의 진료소를 里인민병원으로 개편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지로는 1~2개 里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準의사 1~2명이 배치되어 외상치료 등 초보적인 진료와 투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지역에는 3급공장기업소 이상에 산업병원, 4급공장기업소 이하에 산업진료소가 1개씩 있다.

그리고 평양에는 黨・政幹部들의 전용병원으로 남산진료소, 봉화진료소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北韓最高의 의료진과 침단의료장비, 高價의 약품이 갖추어져 있다 한다.

이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 정규의사도 아닌 副의사, 準의사 그리고 X-Ray 촬영기 정도가 갖추어진 里·郡 단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1974년부터는 里單位 진료소를 里人民病院으로 개편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2個里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準의사 1~2명이 배치되어 가벼운 외상치료 등 初步的인 治療와 投藥을 해주고 있다.

북한의 의료분야 종사자는 의사, 간호원, 약제사, 조제사 등인데, 의사는 정규의사, 부의사, 준의사, 동의사, 위생의사로 구분된다.

정규의사는 7년제 의대, 副의사는 4년제 고등전문학교, 準의사는 3년제 고등의학교에서 양성되며 진료나 대우면에서 차이가 난다.

정규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는 평양을 비롯한 各道에 1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부의사나 준의사는 執刀나, 마약처방 등을 하지 못하며, 직장 里·郡病院에 배치된다

그리고 간호원, 약제사, 조제사 등은 중등보건일꾼으로 불리운다.

藥劑師는 의과대학 약학부(5년제)에서 양성되며, 거의가 큰 병원에서 조제감독과 연구업무를 맡는다.

調劑師는 2년제 보건간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이며, 작은 병원에서 조제업무나 약국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일을 맡는다.

助產員과 保育員도 의료인력에 포함되는데 助產員은 보건간부학교(2년)와 의학전문학교(3년)에서, 保育員은 보육원양성소(3개월)에서 양성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이다.

北韓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양에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평양제1 및 제2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近代的 설비와 綜合的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¹⁸⁾

18) 조선개관(평양:외국문출판사, 1987), 통일원 번역자료 (1988), p.187.

바. 疾病

일반적으로 위장계통의 질병이 가장 많고,¹⁹⁾ 신경관절계통의 환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장병의 경우 勞動時間過多 및 政治思想學習 등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 옥수수 등 잡곡위주의 식생활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관절염은 목표량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동원, 노동보호물자 부족 및 작업환경의 열악 등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정신병은 잘 못먹고 過勞에 지친데다가 정치사상교육 등의 統制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北韓의 의학자료에 의하면 심장계통의 질병과 癌性疾病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병들을 미리 막고 제때에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²⁰⁾

특히 빼라그라병 환자가 많은데 이 病은 옥수수를 主食으로 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영양실조로 손발이 까맣게 되고 살갓이 벗겨지는 특수질병이며 1개 인민반(20세대)에 3~4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6. 言論實態

北韓의 언론은 언론의 일반적 기능인 보도기능, 교육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 가운데 오락기능이나 광고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金日成 1人獨裁體制 강화와 金正日世襲體制

19) 정병모 증언(월남귀순자, 1983)

20) 「주체의학」(평양:의학과학출판사, 1988), 3월호.

를 공고히 하는 메카니즘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레닌이 資本主義社會의 신문을 “부유계층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 그들을 위한 정보·오락도구로 노동대중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도구”라고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레닌은 革命遂行의 중요한 수단으로서만 신문을 定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문을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에 따르면 共產主義言論의 기능이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 등의 4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는 언론이 혁명수행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黨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어야 할 政治的 手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北韓言論도 마르크스·레닌主義路線을 따르고 있다.

1985년 조선 중앙방송창설 40주년 기념대회 논설에서 “방송의 내용에서는 수령과 黨의 위대성, 黨과 人民의 不敗의 統一團結, 충실성 선전 등 사회정치 교양선전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言論의 이러한 성격은 뉴스에 대한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즉, 北韓에서의 뉴스의 대부분은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것엔 관심이 없이 黨이나 정무원에서 주는 내용만을 報道·傳達할 뿐이다. 이것은 뉴스보도가 선전·선동목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레닌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金日成이 “신문, 잡지, 서적같은 출판물이야말로 黨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黨이 제시하는 혁명과업 실천을 위해 노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 선동의 도구”라고 강조했듯이 표현의 자유란 黨의 指導理念과 이의 遂行을 위한 政權의 지시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북한헌법 제53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表現의 自由가 있는 것처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역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黨이나 政務院管理의 언론, 출판제도하에서 個人的 이익이나 주장은 이기주의, 종파주의로서 배척된다.

북한헌법 제10조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여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個人的 基本權에 대한 법적 제한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北韓言論은 그들 주장대로 당의 선전, 선동을 위한 도구인 만큼 모든 신문, 방송을 비롯하여 정무원의 언론 관계부서도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指示와 統制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北韓에는 조선기자동맹과 정무원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출판국 등이 있는데,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北韓의 放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표면상으로는 정무원 직속이나, 내용상으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연락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즉, 조선중앙방송 위원회의 임무에서 방송내용 자체를 指導, 調整하는 것은 黨體系에 의거하고 방송국의 시설과 기재의 관리, 사무운영은 政務院에서 관장하는 2元組織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정무원 산하의 출판총국은 모든 出版物을 검열·통제하는 기관으로서 검열1부(전단, 광고물, 번역물), 검열2부(정치), 검열3부(문예), 검열4부(경제, 사회, 교육), 검열5부(과학, 기술)로 업무가 分掌되어 있다.

北韓의 신문은 노동신문(당 기관지)를 비롯하여 민주조선(정무원 기관지), 평양신문, 노동청년(사로청 기관지), 인민군신문 등의 주요 중앙지와 각 도단위 신문을 합하여 30여종이 발행되고 있다.

편집상의 특징은 당의 강력한 보도통제와 사전검열을 받는다는 점이며, 또한 속보성과 독자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고, 사회면과 광고란이 없으며, 구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北韓의 라디오放送은 對內用인 중앙방송과는 별도로 對外 및 對南心理戰用으로 평양방송이 운영되고 있고, 對南僞裝放送으로는 '구국의 소리방송'(민민전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은 海州에서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국민의 반체제·반정부투쟁을 선동, 고무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또한 1989년 1월 1일부터는 평양 F.M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이 방송은 서울까지 可聽圈에 포함되고 있다.

주민들의 주요 라디오 방송기기는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나, 마을과 직장에 설치된 유선방송인 확성기뿐이다.

한편, TV방송국은 1969년에 조선중앙TV방송국을 개설 정규방송을 시작했으며, 1971년 개성TV방송국을 개설하여 대남선전용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만수대방송도 있다.

칼라TV는 1974년부터 방송되었으나, 현재 15만대밖에 보급되지 않아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結 言

自由民主主義를 이념으로 하는 우리 사회체제는 자율성, 다원성, 개방성을 존중하는 질서로 형성되고 있는데 반해, 金日成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北韓社會는 金日成1인지배체제 확립과 그의 權力世襲에 부합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開放社會와는 크게 다른 체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보다 全體主義的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北韓은 이념상으로는 無階級社會이며, 開放體制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생활에 있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삶의 기회는 크게 두가지 층으로 나누

어져 있다. 즉, 특권핵심계층과 일반주민들 사이에는 社會的 機會에 있어 차별이 심하다. 이 때문에 北韓住民들은 의식구조의 측면에서도 體制同調의이고 現實滿足의 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非同調的이고 不滿意識에 젖어 있는 층이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한편으로는 불만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社會主義革命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각종 統制方法을 통해 획일적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北韓에도 서서히 變化가 일기 시작했다. 즉, 中·蘇 및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變化와 日本 등 西方國들의 자본주의적 思潮가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사고에 變化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人間답게 살고자 하는 北韓住民들의 욕구는 김일성 일인독재체제 유지에 강력한 危險要素로 작용하고 있다.

1989년 7월에 있었던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행사를 계기로 북한주민들의 획일적 사고에 變化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70여년간 宗主國의 역할을 해 왔던 蘇聯邦의 붕괴, 소련공산당의 해체는 북한주민들에게 ‘共產主義의 完全勝利’에 대한 懷疑的 사고를 갖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당국은 對外·對南·對內政策에서 戰術的 變化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체제의 本質的 變化가 없는 한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술적 보완조치로서의 작은 變化가 일어나거나, 선전을 목적으로 한 外形的 變化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體制修正의 變化, 對南戰略의 포기로 誤認하는 틀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IV 北韓의 教育

金 淳 培(統一研修院 教授)

| | |
|----------------------------|-----|
| 1. 序 言 | 129 |
| 2. 教育理念과 目標 | 130 |
| 가. 教育觀과 理念 | 130 |
| 나. 教育目標 | 131 |
| 3. 教育政策 | 132 |
| 가. 政策의 變遷過程 | 132 |
| 나. 「사회주의 교육체제」와 政策方向 | 134 |
| 다. 社會教育和 思想學習 | 140 |
| 4. 教育行政과 學制 | 143 |
| 가. 教育行政 體系 | 143 |
| 나. 學校制度 | 144 |
| 5. 教育內容과 方法 | 149 |
| 가. 教育內容 | 149 |
| 나. 教育方法 | 154 |
| 6. 結 言 | 157 |

1. 序 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땅에 共產主義를 이식한 이후, “교육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는 口號를 내걸고 教育과 思想學習을 중시해 왔다.

그들은 “한두끼 밥을 굶을지언정 혁명사상 학습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教育의 社會·政治的 性格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에서 교육은 공산혁명의 수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써 기능해 왔다.

북한은 현재 教育의 目標을 金日成을 偶像化하여 권력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두면서, 한편으로는 大韓民國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전복·청산하는 데 두고 있다. 이로써 남북한간의 民族 異質化는 더욱 확대·심화되어 왔다.

북한 教育의 政治적 성격으로 인해, 북한 동포의 민족관, 가치관, 의식구조와 행동양태는 남쪽 동포와 달라져 민족의 동질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 民族이 平和統一의 길로 나가자면 북한이 실시하는 정치교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金日成을 神으로 떠받드는 ‘우상화 교육’과 대남투쟁심을 고취하는 ‘증오교육’은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일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무형적인 정신역량도 간과할 수 없기에 북한의 교육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本 教材에서는 北韓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政策과 制度, 教育內容과 方法을 간략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教育理念과 目標

가. 教育觀과 理念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教育을 인간의 잠재력, 창의력, 개성을 개발하는 과정이라 보기보다는 공산당에 충실한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틀에 똑같이 맞추어 나가는 革命事業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教育을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 정치사상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教育을 ‘사상·문화 교양의 무기’로, 敎員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教育機關을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¹⁾

북한은 敎育을 통한 思想革命을 강조하는데, 사상혁명이란 바로 낡은 사상을 뿌리뽑는 인간개조사업이라고 한다. 金日成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敎育기관의 날을 버려야 한다.”고 敎育을 통한 사상혁명을 촉구하였다.²⁾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가 진전할수록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화 된다.”는 공산주의적 교조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共產主義를 실현하자면 3大革命(사상·기술·문화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동시에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도 점령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상적 요새는 思想革命을 통해 점령할 수 있으며 사상혁명은 바로 인간개조사업으로써 공산주의의 완전 승리에 이를 때까지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라 한다.

1) 「사회주의 敎育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참고.

2) 「사회주의 敎育학에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73), p.313.

북한 공산체제에서는 金日成의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서 모든 분야의 지도지침이 되고 있듯이, 교육분야에서도 ‘주체의 요구대로’가 최고의 원칙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의 결정권자는 金日成 1人이며, 주체사상은 바로 ‘金日成 1人만이 主體’란 사실이 教育에서 가장 잘 반영, 실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教育은 순수한 共產主義 教育理論에만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金日成을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만을 순수하게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教育目標

북한의 教育에서 제시하는 教育의 目標은 전 주민을 ①革命化 ②勞動階級化 ③共產主義化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이다.³⁾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3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든가,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의미는 金日成 首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최소한의 개인욕구마저 없애고 전체(전체 = 金日成)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金日成만을 따르는 효자와 충신이 바로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가장 큰 덕성인 것이다.

북한의 教育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이란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3)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1986)참고.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김일성에게 목숨바쳐 충성케 하는 교육을 주체사상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충실한 교육의 효과는 역설적으로 극도의 非主體的인 인간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3. 教育政策

가. 政策의 變遷過程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8·15 해방 직후, 공산정권을 수립하면서 全分野에 걸쳐 소련식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였듯이 教育分野에서도 ‘소비에트 교육학’을 도입·적용하였다.⁴⁾ 이 시기에는 우선 일제 식민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맹 퇴치를 통해 공산주의사상의 기초 지식을 보급하는데 힘을 썼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6·25 동란기에는 “모든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學校教育을 軍事訓練으로 대치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후에는 계급 교양을 위주로 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인력동원의 필요상 초등교육 과정인 人民學校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전후복구에 주력하였다.

1956년 말에는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4년제 초등교육을 義務教育化하고, 1958년 11월에는 중학교 3년과정을 포함하여 7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⁵⁾ 그 이듬해부터 상업학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술학교를 확장하면서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4) 任鍾琳, “北韓의 教育·文化”, 「民主統一論」(統一研修院, 1989), p.156.

5) 北京大 教授 賀僉城, 「北韓의 教育」, 北韓의 實相과 展望, (同和研究所, 1991), p. 314.

위해 통신교육도 확충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새롭게 革命傳統敎養이라는 주입식 사상교육을 학교교육의 중심과제로 삼으면서 勞動敎育과 生産技術敎育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階級敎養과 共產主義敎養, 勞動精神敎養 등의 구호가 확산되었다.

1967년부터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1966. 1. 1. 공표)가 실험적으로 추진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는 사상교육에서 黨의 唯一思想이라는 金日成 主體思想이 학습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1970년 「로동당 제5차대회」를 계기로 金日成 主體思想 혹은 黨의 唯一思想을 교육의 기본원칙과 정책노선으로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主體의 원칙과 노선은 1977년 9월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에 金正日이 후계자로 공식화되면서 革命的 首領觀이라는 후계이론이 나오고, 이어서 金正日에 대한 우상화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체제를 공고화하면서 人間改造論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 출판한 「인간개조리론」(조선로동당 40돐 기념, 강운빈 저)에는 인간개조에 관한 구체적 이론과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개조론은 주체혁명 이론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지적한 이 책에는 金日成 敎示와 함께 수많은 金正日의 지적 사항이라는 것들을 수록하고 있다. 인민학교에서 ‘金正日 따라 배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고, 각급학교에서 金正日 우상화교과목을 채택한 때가 바로 1985년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北韓의 教育政策은 완전히 金正日의 독단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의 현명한 령도로 주체교육의 화원이 개화·만발했으며, 대학생들은 해바라기와 같이 오

직 김정일을 충직하게 따라야 한다.”는 결의가 나오고 있다.⁶⁾

또한 최근에는 소련·동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에 잡사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쳐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고등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련·동구국가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학습교재를 수정·보완하였다.⁷⁾

북한의 教育政策은 시기별로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소의 변화과정을 거쳤으나, 큰 맥은 유지되어 왔다.

우선 社會主義 建設에 유용한 노동력의 확보 즉, 기술 인재의 양성에 노력했지만 그보다도 항상 政治思想性이 더 강조되었다. 정치사상교육 분야에서는 항시 김일성 개인숭배심리의 유발과 대남혁명식 고취가 필수적으로 지속·강화되어 왔다.

나. 「사회주의 교육체제」와 政策方向

(1) 「사회주의 교육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교육이란 용어를 나름대로 개념화한 시기는 1968년 3월 金日成이 ‘교육부문 일군’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비롯된다. 金日成은 이 연설에서 “공산주의에 적대되는 사상인 낡은 사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상이 특히 교육 부문에 만연되어 있다.”고 질책하고 낡은 부르주아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주의 교육학을 강조하였다.

金日成은 1971년 12월 27일에 개최된 「전국교원대회」에서도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은 어느 나라의 것을 막론하고 사상혁명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6) 「전국 대학생 최우등생 대회」(1990. 1. 12-13)에서 「社勞靑」委員長, 최룡해 보고.

7) 내외통신, 주간판 771호(1991. 11. 22)

며 독창적인 社會主義 教育學을 창조·적용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6년 4월에는 탁아소·유치원 교육을 法으로 규정한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고, 1977년 9월에는 교육강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교육테제」의 내용은 교육에 관한 기존의 金日成 교시와 명령, 연설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5個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 제2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제4장은 사회주의교육의 교육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인 것이다.

「교육테제」에서 밝힌 教育理念과 目標은 이미 지적인 대로 모든 인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만든다는데 있다. 이를 실천하는 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책 노선으로서 ①교육에서 黨性, 勞動階級性의 구현, ②교육에서 主體의 확립, ③교육과 革命實踐의 결합, ④국가의 教育事業에 대한 조직진행의 책임이라고 제시하였다.

북한 선전기관들은 이 「교육테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의 참다운 교육강령”, “교육에 관한 백과전서이며 총서”라고 찬양하였다. 그 발표일인 9월 1일은 교육절로 정해져 매년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⁸⁾

「교육테제」가 제시한 教育方向은 이전보다 더욱 教條的 측면을 띠고 있다. 政治思想教育을 여타의 교육보다 더욱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教育制度和 教育의 內容·方法 등 교육의 모든 사항을 구체적이며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별, 지역별, 대상별, 개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 北韓總覽 (북한 연구소, 1983), p.125.

「테제」는 主體思想을 사회주의 教育에 반영시키려 한 시도였지만, 이들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일사상체계의 도입은 사회주의적 教育의 本質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일반적 教育원리가 희생되고 대신 金日成 敎示라는 주체사상의 敎理가 사회주의 教育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의 구체적 모습이 바로 북한 教育에서 나타나고 있는 金日成・金正日 偶像화 학습 경향이다.⁹⁾

(2) 政策 方向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教育을 南北韓의 비교 관점에서 본다면 ①黨에 의한 획일적인 教育統制, ②早期 政治思想教育(김일성・김정일 偶像화), ③集團主義原理에 충실한 教育, ④勞動과 軍事動員 教育을 들 수 있다.

(가) 黨에 의한 教育統制

북한의 教育은 「조선로동당」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하에 실시되고 있다. 教育을 관장하고 있는 黨의 전담부서는 中央委員會 祕書局 산하의 「教育部」이다. (초기에는 黨 中央委 「선전선동부」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중앙위 「과학교육부」가 관할)

이곳에서 주요 教育政策이 수립되며, 그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한다. 또한 각급 지역당과 教育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黨機關들도 教育의 세부 사항들을 통제한다. 그 밖에,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사로청)」 등 黨의 외곽단체들도 教育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다.

북한 勞動黨과 각종 선전기관들은 항상 “매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教育의 내용과 방법을 고쳐야 한

9) 문용린, 「교육제도와 정책」(북한개론, 책임편집:최명, 을유문화사, 1991), p. 392.

다.”고 촉구한다. 教育이 黨의 정치 선전·선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의 일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 早期 政治思想教育(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북한은 조기교육과 의무교육을 外形的으로 확장함으로써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 거의 모든 幼兒는 태어나서 30일부터 託兒所에서, 만 4세부터는 幼稚園에서 양육·교양받도록 되어 있다.

1976년 제정된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6조에는 “...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은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기 교육단계에서 共產主義思想을 주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학습이 취학전 아동교육의 주된 내용이다.

만5세의 유치원 높은반 과정부터는 義務教育期間으로 취급한다.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쳐 11년이다. (197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북한은 日日·週·月 託兒所와 유치원교육, 11년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데 주력해 왔다. 북한과 같이 모든 生産手段이 국·공유화되어 개인이 사유재산을 보유할 수 없으며 모든 소비도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共產體制에서는 유상교육이란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공산국가의 教育學者들도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는 모든 생산시설과 교육시설을 소유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⁰⁾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대한 선전은 마치 ‘세금없는 나라’라는 선

10) 北京大 教授 賀僉城, 「북한의 교육」(北韓의 實相과 展望, 同和研究所, 1991) 참고.

전과 같이 體制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밖에 안된다.

북한이 의무교육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早期教育을 강화한 것은 政治思想의 주입과 집단주의정신 함양이 어리면 어릴수록 빠른 것이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 목적은 ▲인지가 발달하기 전의 유아를 가정과 전통문화체계의 ‘낡은 사상과 관습’으로부터 격리·차단시켜 어린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동원하며, ▲부모에게 어린이 양육시간을 줄임으로써 부녀자등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金日成父子에 대한 효자와 충신이 되게 함이다.¹¹⁾

(다) 集團主義 教育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의 개성과 소질 등 특성과는 관계없이 집단에 귀속시켜 ‘수령과 당’을 무조건 따르는 같은 定型의 사람을 기르기 위해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全體主義的 集團 教育은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체제」에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생활과 교육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教育에서의 集團主義 原則은 教育의 목표와 정책, 그 내용과 방법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며 나타나는 특징이다.

북한의 教育은 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자주성을 가진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라는 집단의 한 구성부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集團主義 教育에서는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하는 전체란 성립

11) 都興烈, 「북한청소년의 社會化實態」, 국토통일원, 1978, pp.187~190.

하지 않는다. 전체가 위하는 하나는 金日成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각급학교에는 각 연령층에 걸쳐 思想教養을 담당하는 정치조직이 있다. 인민학교에는 「소년단」(8~13세), 고등중학교 및 대학 단위에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14~28세) 및 고등중학교에 「붉은 청년근위대」와 대학생 대상의 노동당 조직과 「교도대」가 있다. 각급학교 학생들은 해당 청소년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는 기치하에 각종 모임과 회의, 集團行軍과 野營 등 군대의 兵營生活과 같은 집단생활에 참가한다.

(라) 勞動과 軍事動員 教育

북한당국은 각급학교 학생들의 勞動力動員을 제도화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라고 명시하고 「교육테제」에는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에 共產政權이 들어선 직후부터, 학생의 勞動力動員은 강제되어 왔다. 이것이 1959년부터는 ‘學生 社會義務勞動’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북한에서 학생의 수업료가 면제된 시기는 바로 1959년 학생 사회의무노동제가 채택되면서부터이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勞動은 무보수로 1일 작업량이 할당된다.

학생들의 노동현장 투입 범위는 대학생에서 인민학교 학생까지 포함된다. 각급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年間 義務勞動 日數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긴급을 요하는 課業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학생들을 수시로 동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과된 의무노동 시간은 매년 초과하게 마련이다.

북한의 각급학교 학생들은 강도 높은 軍事訓練을 받으면서 軍의 幹部化와 軍事力 增強에 동원되어 왔다. 고등중학교 고등반에는 「붉은 청년근위대」를, 대학에는 「教導隊」(1959년 「대학로농적위

대」로 발족하여 1974년 교도대로 개편)를 조직하였다. 이런 교내 군사조직에서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부터 정규군 못지않은 고도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매주 교내 군사훈련 이외에 야외훈련과 입영훈련을 받고 있다. 대학 졸업전에 실시하는 40여일의 入營訓練을 마치고 예비군 소위의 자격을 획득해야만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군사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은 학교 특성과 전공에 따라 軍種과 兵科가 부여되는데, 예컨대 金日成綜合大學은 보병, 金策工業大學은 포병, 元山水產大學은 해군 등으로 분류된다.

다. 社會教育과 思想學習

북한에서는 정규학교 학생들만 政治教育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에게 政治學習과 再教育이 광범하게 실시되고 있다.

北韓은 黨의 간부와 일반당원, 주요기관과 단체의 간부요원을 재교육시키는 社會教育機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관으로는 김일성고급당학교, 道公산대학, 郡黨학교, 人民經濟大學 등을 들 수 있다. 郡黨의 책임자와 道黨의 간부는 金日成高級黨學校나 인민경제대학에서, 하급당 간부는 道共產大學 등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재교육을 받는다. 그 밖에 당과 행정기관 등의 간부 가운데 비판을 받고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단기 洗腦教育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 노동자와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通信教育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成人教育課程에서는 작업과 학습을 동시에 병행시키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思想武裝을 하며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런 기관으로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에 세워진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공장(농장, 어장, 광산)대학」 등이 있다. 현재 3년제 근로

자학교, 3년제 공장 부설 직업대학과 야간 통신학교, 4~5년제 공장·농장·어장 관련 대학이 있다. 보통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직장에서의 작업량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교육을 마쳐도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며 다른 곳으로의 轉勤은 없다.

북한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성별, 연령별 차이없이 학령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정치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政務院의 부장을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학습을 받으며 1년에 1개월씩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¹²⁾ 일반주민들은 직장과 지역단위로 실시되는 學習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비록 정기적은 아니라도 간부나 일반주민이나 하루 2시간 이상 학습을 한다.

學習方法은 강습회, 자습회, 강연회, 작업전 휴식시간에 진행하는 독보회, 조회 등이며, 學習資料는 주로 「김일성 로작」, 「로동신문」 등이다. 그 밖에 주요 학습수단은 공장이나 마을, 거주지 별로 집단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작업장과 건설현장에서도 매일같이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政治學習은 지나치게 노골적이며, 때로는 기괴한 내용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경우도 많다.¹³⁾

주민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은 勞動黨의 외곽단체인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등이다. 黨에서 출판한 「정치사전」에는 이러한 사회단체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공산주의 학교”라고 밝히고 있다.

12) 조선중앙년감(평양:조선중앙통계국, 1976), p.189.

13) Ingerborg Göthel, 「주체사상과 민족적국가관」(北韓의 實相과 展望, 同和研究所, 1991), p.260.

북한의 「사회주의 로동법」에는 “8시간 로동, 8시간 학습, 8시간 휴식”(제33조)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學習은 조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전사회적 규모에서 학습을 生活化, 習性化하라고 촉구한다. 학습구호로는 “全黨, 全軍, 全民이 학습하자.”, “학습으로 혁명 사업을 시작하고 학습으로 일생을 마치는 인민”, “학습으로 일과가 시작되고 학습으로 일과가 끝나는 나라” 등과 같은 수많은 선전문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宣傳機關들은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질서, 1주일에 1번씩 강연회 및 정기강연, 화요학습, 만나절 학습, 해마다 현직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한달 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크게 보도한다. 그 밖에 전투를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軍政學習, 行軍중의 問答式學習,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밭머리학습 등 다양한 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 보도매체들은 모범적 學習事例로 죽음을 눈앞에 둔 군인과 교원, 의사 등의 학습을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중상을 입은 인민 군대의 처녀 소대장은 자기가 죽는 날에도 2시간 學習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켰다고 하는 내용이다.¹⁴⁾

북한에서는 思想學習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학습경연대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심지어 1974년 6월에는 아예 모든 주민들이 김일성저작집을 가지고 다니도록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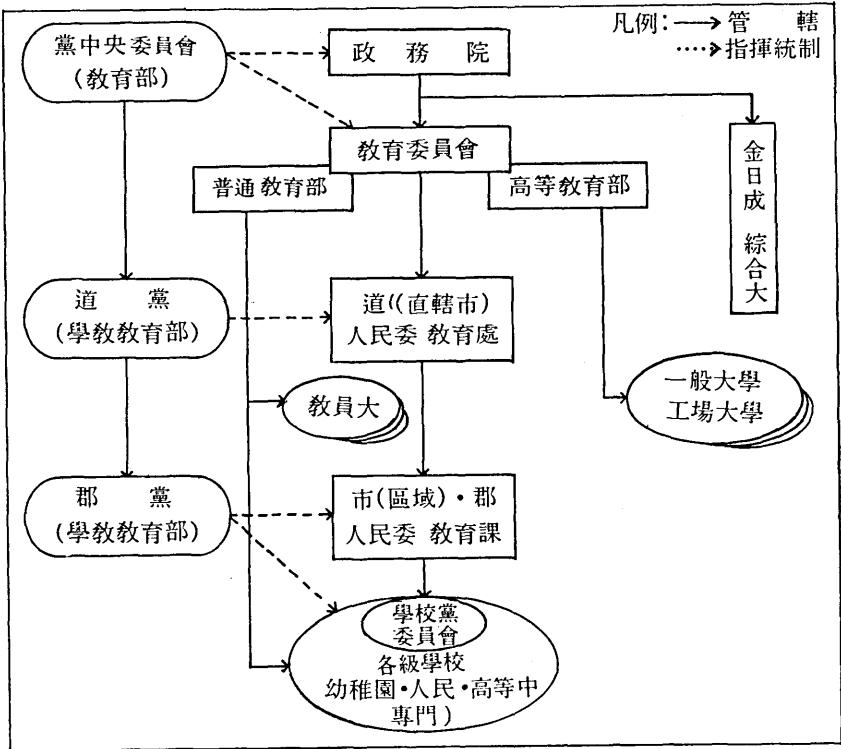
14) 「로동신문」(1981. 5. 21)

4. 教育行政과 學制

가. 教育行政 體系

북한의 전반적 教育體系는 이미 언급한 대로 勞動黨의 완전 통제와 감독하에 놓여 있다. 教育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총괄적 지도 · 감독은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各道黨과 郡黨은 해당 지역 教育행정을 관장하며, 그 지역의 각급 학교를 직접 지휘 · 감독한다.

學校行政 및 統制體系



행정집행기관인 政務院 산하의 教育委員會는 黨에서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행정을 統轄한다. 북한의 교육행정체계는 黨과 政務院의 2중적인 系線이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행정과 분립,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政務院의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을, 후자는 교원대학을 포함한 그 밖의 각급학교의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예외로 金日成綜合大學은 교육담당 행정부서의 관할하에 있지 않고 政務院에 직속되어 있다.

나. 學校制度

북한 정규교육의 基本 學制는 4~6~4(6)制로서 인민학교는 4년, 고등중학교는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의무교육기간을 1974년에 취학전 1년(유치원 높은반 : 5세)을 포함하여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모두 합쳐 11년제로 결정하고 이를 지역 사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실시하였다.

初等教育은 만6세에 입학하는 4년제의 人民學校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취학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金日成 崇拜精神과 共產主義思想의 주입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인민학교에서는 주로 “수령에 대한 흠모의 감정과 혁명적인 의지를 길러냄으로써 학생의 사상과 감정속에 수령을 절대화하고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도록”¹⁵⁾한다.

기초교육 과정인 인민학교에서부터 ‘복종과 충성’(內的志向)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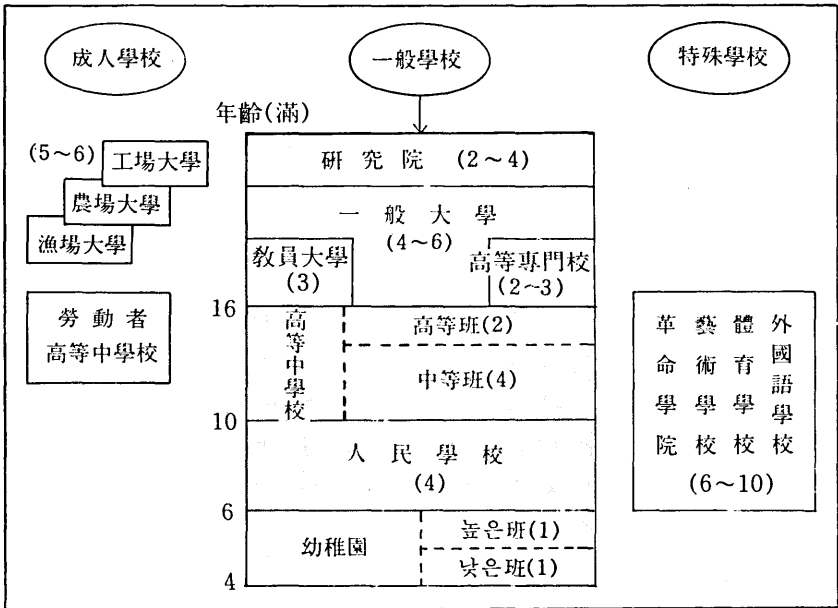
15) 鐸木昌之, 「북한의 社會政治의 生命體論」(北韓의 實相과 展望, 同和研究所, 1991), pp.246-247.

‘혁명투쟁’(外的志向)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어릴수록 감수성이 예민하여 감성 유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6년제의 고등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중등교육은 義務教育의 완성기간이다. 고등중학교는 4년의 중등반과 2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기간에는 “기초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主體型的 共產主義的 人間을 키운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金日成은 “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學校教育制度

凡例：□ 義務教育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정규 高等中學校 이외에 特殊學校(革命學院, 예능·체육학교)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는 萬景

臺革命學院, 康盤石革命學院과 같은 특수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음악, 무용, 조형예술, 체육 등 특기자가 들어가는 藝體能系學校가 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인민학교에서 고등중학교까지의 10년제로 되어 있다.

예체능계학교 등의 학생 선발에서는 장차 해외 선전활동에 종사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特技 이외에도 출신성분과 사상성이 중요시된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장기간 일정한 틀속에서 學生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제도적 利點을 가지고 있다.

1985년에는 平壤을 비롯하여 各道에 1개씩 專門科學技術者의 조기 양성을 위해 科學英才學校로 「제1고등중학교」를 신설하였다. 최근 영재교육기관으로서 「제1고등중학교」와 함께 고등교육기관도 대폭 증설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의 김일성 우상화 등 思想教育에만 치중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확보가 부진한 데에 기인한 政策의 變化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高等教育은 대학과정(4~6년)과 그 위에 연구원(3~4년), 그리고 박사원(2년)으로 연결된다. 기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원대(3년)와 고등전문학교(3년)가 있다. 이런 정규학교 이외에 노동 현장에 工場大, 農·漁場大 등 成人教育機關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大學은 綜合大學, 單科大學, 教員大學 등 3종류가 있으며, 교원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4년제이다. 다만 金日成綜合大學은 社會科學部가 주로 5년, 自然科學部는 6년제이다.

정무원 직속으로 설치된 金日成綜合大學과 金策工業大學 등 중앙에서 관할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전문대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양의과대학, 金亨稷사범대학 등 몇개의 수준급 대학만을 中央(教育委員會)에서 관장하고, 그 밖의 많은 대학은 地方級大學이라 하여 도(직할시) 단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이들 지방급의 단과대학은 실제로 韓國의 대학에 설치된 하나

의 專功學科 규모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원산 철도차량 단과대학, 은천 제염단과대학 등이 그것이다. 1980년대에 북한은 매년 수십개의 單科大學 등 고등교육기관 혹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신설하였다는 대학들은 대부분 소규모 전문대학이거나 공장대학 등 직장에 부설된 機能工養成 성인교육기관들이다.

北韓의 敎員大學은 명칭 그대로 인민학교 교사와 탁아소·유치원의 敎養員을 양성하고 있다. 師範大學은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교사를 양성하는 제1사범대학과 중등반 교사를 양성하는 제2사범대학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교원대학, 제1사범대학, 제2사범대학들은 각각 道別로 1개교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

1990년 10월에는 대부분의 사범대학과 일부 대학의 校名을 바꾸었다. 金日成 혁명업적이란 것과 관련시켜 그의 血族과 그에게 忠誠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교명으로 붙였다. 대표적으로 회령교원대학은 김정숙(前妻:김정일 生母)교원대학으로, 평양사범대학은 김철주(어릴때 죽은 동생)사범대학으로, 함남제1사범대학은 김형권(叔父)사범대학으로, 청진제1사범대학은 오증흡(김일성을 위해 목숨 바쳤다는 烈士)대학으로, 신의주제1사범대학은 차광수(김일성에 충성했다는 숨은 영웅)대학 등으로 改名한 것을 들 수 있다.

개명 당시에 각 대학에서는 黨의 지도층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였다.

북한의 各道와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高等專門學校는 3년제의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양성한다. 고등전문학교는 建設專門大學과 같은 북한 전역에 공통으로 필요한 직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와 제2고등도자기전문학교와 같은 어느 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과를 교습하는 전문학교로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기업 소 등의 직장생활이나 7년이상의 軍服務를 마치고 난후, 그동안 勞動黨이나 社勞靑의 조직생활에서 인정을 받아, 黨의 통제하에 있는 각지의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진학할 수가 있다. 다만 특권층 자녀 등은 예외로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 진학의 특권이 부여된다. 萬景臺革命學院 출신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숫자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⁶⁾ 반면에 가족과 친척의 출신 성분이 불확실한 사람(과거 地主나 財産家, 종교인, 6.25 당시 국군동조자 후손)은 대학입학자격 심사에서 제외된다.

1980년부터 대학입학 자격고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출신성분 위주의 대학추천으로 많은 불만이 생기고 人力資源管理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成分中心의 추천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學位를 수여하지 않고 자격증을 준다. 인문·사회·예술분야 학과의 졸업자에게는 전문가의 칭호, 자연과학과 기술분야학과 졸업자는 技士의 資格證을 수여한다. 사범대학교 교원대학 졸업자들은 해당되는 敎員 자격증을 받는다.

學士學位는 研究院(韓國의 석사과정)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박사학위는 博士院을 이수하고 학위 논문을 끝낸 사람에게 준다.¹⁷⁾

북한은 각급 학교와 학생수에 관한 統計數値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각종 보고문이나 선전물 등에 때때로 교육관계 숫자를 抽象的으로 발표하는 때가 있으나, 그런 수치는 때에 따라 다르며, 다른 선전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16) 문용린, 「교육제도와 정책」(북한개론, 책임편집 : 최명, 을유문화사, 1990), p.178.

17) 金東圭,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7, p.84.

선전으로 발표하는 교육관계 통계 수치는, “인구의 1/3인 860만 명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 “6만개의 탁아소·유치원에서 300만 명이 양육되고 있다.”, “270개의 대학, 600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1987년 10월 평양 외국문출판사가 해외 선전용으로 발간한 「朝鮮概觀」(日語版)에는 학교와 학생수에 관해 다음표와 같은 숫자를 밝히고 있다.

| 구분 | 탁아소 | 유치원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 | 대학 | 전문학교 |
|-----|--------|--------|-------|-------|-----|------|
| 학교수 | 28,358 | 19,262 | 4,792 | 4,738 | 235 | 473 |

* 이 책자에서 북한 학생총수는 492만 3천명, 탁아소·유치원생은 200만 명 이라고 주장

5. 教育內容과 方法

가. 教育內容

(1) 初中等學校 教科課程

북한의 초중등과정에서의 교과 내용을 대별한다면 ①김일성부자 우상화 및 대남혁명의식 고취의 정치사상 내용과 ②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기술인력양성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점은 각급 학교의 교과 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육 과정인 인민학교에서 교습시키는 교과목은 다음표와 같다.

인민학교의 교과목 구조상 특징은 국어, 산수, 정치교육(경애하는 김일성, 공산주의 도덕)이 전체 교육의 67.6%에 이르고 있어 이 세영역에 매우 큰 강조를 두고 있으나 과학분야는 경시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인민학교 교과목 명칭 및 비중 순위

| 순위 | 교과목 | 비중치 (%) | 순위 | 교과목 | 비중치 (%) |
|-------|------|---------|----|-------------------------|---------|
| 1 | 국어 | 32 | 6 | 자연 | 6.2 |
| 2 | 산수 | 23 | 7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 4.2 |
| 3 | 체육 | 8.4 | 8 | 특강 | 4.2 |
| 4 | 음악 | 8.4 | 9 | 공산주의 도덕 | 4.2 |
| 5 | 도화공작 | 8.4 | 10 | 위생독본 | 1.0 |
| 總10科目 | | | | | 100(%) |

출처: 文龍麟, 北韓의 學校教育課程分析, 국토통일원, 1987.

고등중학교 교과목 명칭 및 비중 순위

| 순위 | 교과목 | 비중치 (%) | 순위 | 교과목 | 비중치 (%) |
|-------|-------------------------|---------|----|---------------|---------|
| 1 | 수학 | 18.4 | 14 | 위대한 수령 김일성 | 2.7 |
| 2 | 국어문학 | 11.6 | | 원수님 혁명활동 | |
| 3 | 물리 | 8.3 | 15 | 기술기능실습(5, 6년) | 2.7 |
| 4 | 외국어 | 7.5 | 16 | 음악 | 2.1 |
| 5 | 화학 | 5.8 | 17 | 현행 당정책 | 1.5 |
| 6 | 생물 | 5.6 | 18 | 공산주의 도덕 | 1.3 |
| 7 | 지리 | 5.1 | 19 | 자연 | 1.0 |
| 8 | 체육 | 4.5 | 20 | 위생독본 | 1.0 |
| 9 | 력사 | 4.2 | 21 | 미술 | 1.0 |
| 10 | 한문 | 3.7 | 22 | 체도 | 0.9 |
| 11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력사 | 3.0 | 23 | 기초기술 | 0.8 |
| 12 | 특강 | 2.9 | 24 | 전기기본 | 0.8 |
| 13 | 녀학생 실습 및 공작실습 | 2.8 | 25 | 농업기본 | 0.8 |
| 總25科目 | | | | | 100(%) |

출처: 文龍麟, 北韓의 學校教育課程分析, 국토통일원, 1987.

인민학교 教育課程은 학생들에게 통합적 경험을 주기 보다는 교과 영역별 경험을 주기에 합당하게 꾸며져 있다.

1985년부터 각급학교에 金正日 우상화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포함됨에 따라 인민학교에서는 「김정일 따라 배우기」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高等中學校에서는 6년간에 걸쳐 앞의 표와 같이 총25개 教科目を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앞의 표에 나타난 학과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數學을 위시한 科學계통의 학과목이 전체 비중의 41.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語學(국어문학, 한문, 외국어)으로 22.8%, 政治思想教育領域(金日成 혁명력사 및 활동, 현행 당정책, 특강, 공산주의 도덕 등)이 11.6%, 社會領域이 9.3%, 藝·體能이 7.6%의 구성비를 갖는다.

고등중학교에서도 교과목을 統合적으로 構成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 특히, 최근에는 고등중학교에서도 교과 과정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활동」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혁명력사」의 2개 과목을 채택하고 있다.

(2) 教育內容의 政治思想性

북한의 「교육테제」에는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면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그들의 정치사상적 교육이념과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테제」는 “정치사상교육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미 金日成도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에서 “어떤 과학이나 모두 혁명에 복종해야지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數學이나 體育까지도 학과목 본래의 교육취지보다도 정치사상교육 수단으로서의 비중을 갖는다. 수학교육에서는 數의 구

조직 개념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정치사상성을 더욱 중시하는데, 계산 문제의 설정에서 정치, 경제, 군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교재의 내용이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실제 사회상과 일상 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주기보다는 反帝・反美思想을 갖도록 서술되어 있다.

일례로 뉴욕市를 소개하는 영어 문장에서 학생들은 뉴욕시가 실업자와 결인, 수백만의 쥐떼가 들끓는 번쩍이는 거대한 빈민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묘사하고 있다.¹⁸⁾

북한의 각급학교 교재에 수록된 政治思想內容의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¹⁹⁾

<김일성우상화>

-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원수님 은덕(인민4 국어)
-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 수령님 교시따라(고중3 국어)
- 수령님의 방문과 밤잠(고중3 국어)

<계급의식 고취>

- 욕심 많은 개(인민1 국어)
- 어린이에 대한 지주의 만행(공산주의 도덕)
- 욕심장이 지주를 인민들이 죽여버렸다.(공산주의 도덕)

<대남적개심 및 반미의식>

- 남조선 실업자 수의 증가율(고중1 대수)
- 남조선 매혈매안구 $5+5=?$ (인민1 산수)

18) 김형찬, 「중등교육, 학교교육의 실제」(북한의교육, 책임편집 : 김형찬, 을유문화사, 1990), p.278.

19) 金炅泰, “北韓의 教育”(北韓實態, 統一研修所, 1983), p.177.

- 명성 아버지 얼굴 흠집은 미국놈이(인민3 국어)
- 미국놈 탱크 50대중 인민군이 30대를 까부셨다. 앞으로 몇대를 더 까부셔야 하는가?(인민1 산수)

1992년 김일성은 新年辭에서 「교육체제」 발표 15주년을 기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질적수준을 높여 후대 교육사업과 민족 간 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金日成, 金正日을 우상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의 아동심리학과 교과서에 따르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덕성, 지도의 현명성, 투쟁 업적에 대한 認識, 自覺 그리고 意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²⁰⁾

정치사상교육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측면은 착취사회, 지주·자본가의 착취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憎惡心을 고취하면서 이를 모두 對南 증오심·적개심으로 비약시키는 것이다.²¹⁾ 이는 非民主, 反民族的인 教育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교과서 내용 서술에는 미사여구와 함께 반대로 好戰的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배떼기를 찌르다’, ‘까부시다’, ‘피바다’, ‘원쑤’, ‘놈’ 들과 같은 어휘와 ‘혁명의 전취물’, ‘타승(승리)’, ‘고지 점령(목표달성)’ 등과 같은 軍事用語가 일상적인 教育用語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言語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북한의 체육교육과 과외활동 등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의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다.

북한의 體育은 그 자체가 아마추어정신의 발휘보다는 金日成에

20) 鏗木昌之, 「북한의 社會政治의 生命體論」(北韓의 實相과 展望, 同和研究所, 1991), p.247.

21)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3), pp.375-378. 참고.

22) 「문학예술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1072.

게 절대 충성시키는 政治思想性이 강조되는 등, 어떤 體育活動이든 정치생활의 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體育教育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革命과 建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²³⁾

북한은 國防體育의 대중화란 정책구호하에 생산노동과 체육활동을 결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體育을 통한 金日成 우상화로 귀결시킨다.

金日成 우상화와 관련된 體育活動으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우리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등이 있고, 한편 대규모로 진행되는 集團體操(마스게임)의 주제와 구호도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김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 나겠습니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각급학교 학생들은 체육활동, 노동활동 이외에도 과외활동으로 조직생활을 한다. 학생의 조직생활에서는 체육시간과 마찬가지로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內面化시킬 뿐만 아니라 戰鬥力向上도 도모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부터는 學校의 社勞靑 지도하에 체육시간과 조직의 과외활동을 통해 사격, 제식훈련, 병기의 조작, 지형지물의 파악 등 군사적 훈련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學校教育 內容은 포괄적으로 金日成에 대한 무한한 忠誠心의 고취, 黨의 노선에 충실하며, 혁명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 教育方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教育方法으로서 ①깨우쳐주는

23)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참고.

교육 ②이론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③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④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 양성을 위해 集團教育, 反復教育, 조기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洗腦와 馴致의 다양한 教化方法을 쓰고 있다. 그것은 주로 소련의 교육 방법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생물학자 파블로프(I. P. Pavlov:1849~1936)에 의해 정립된 條件反射 理論 혹은 행동주의적인 이론에 의거, 반복을 통한 조건화 형성으로 人間改造를 꾀하고 있다. 인간개조는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며 외부 환경에 자율·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아니라, 다만 조건반사하는 人間集團을 육성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밖에 소련 교육학자인 마카렌코(A. S. Makarenko)나 크루프스카야(Krupskaya) 등이 제시한 教育理論과 方法論을 인간개조방법으로 삼고 있다. 마카렌코가 시험한 集團主義教育原理와 그룹스카야가 주창한 ‘조기교육 이론과 실천의 결합’ 方法이 북한의 教育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한 북한의 教育은 특히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중요시하고 있다.

共産主義 教育에서 실천이나 생산활동과 결합되지 않는 지식은 無用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것은 革命을 하나의 실천운동으로 보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북한 공산집단은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勞動을 시킴으로써만 학생들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과 생산활동의 결합, 혹은 산 지식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은 수시로 生産勞動에 동원되고 집중적인 軍事訓練을 받는다.

북한의 대학생은 연간 3개월, 고등전문학교 학생은 연간 10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연간 4~8주,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의 義務勞動을 하도록 되어 있다.²⁴⁾ 실제로는 규정된 의무 노동시간이 있지만 학생들의 노동 참여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형편이다.

고등중학교 고등반부터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던 학생들은 4대군사노선에 따라 大學生活에서는 「교도대」의 신분으로 조직적인 훈련을 받는다. 대학 1~2학년은 주당 7~8시간, 3~4학년은 5~6시간의 校內訓練과 함께 학기말에 야외훈련을 받는다. 대학4년간에 교내훈련 960시간, 입영훈련 1,780시간 도합 2,740시간에 달하는 군사훈련이 실시된다.²⁵⁾

북한은 集團主義教育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조직생활에서의 사회정치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교육테제」에 “조직생활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조직생활에서는 공산주의의 敵對思想으로 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부르주아사상을 용해하여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상혁명만은 누구에게나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면서 집단주의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요한다. 적대사상은 出身成分이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농민이나 노동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조직생활의 강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은 集團主義社會의 유지를 위해서는 학생시절부터 學校生活를 통해 조직생활을 일찍이 체득시키고 있다.

북한의 각급학교에는 각 연령층에 따른 政治思想組織들이 있다. 인민학교에는 「소년단」, 고등중학교에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붉은 청년 근위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社勞靑」과 「교도

24) 「南北韓社會文化 現況比較」(국토통일원, 1983), p.26.

25) 金昞泰, “北韓의 教育”(北韓實態, 統一研修所, 1983), p.170.

대」, 黨의 조직이 있다. 이런 정치조직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상호 비판과 자아비판, 이념학습, 조직규범에 대한 강의시간 등을 갖는다. 조직생활의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긍정적인 學習法을 장려하는데, 인내력, 지구력, 지도력 그리고 자발심을 고취·함양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생활과 사상학습의 담당자들은 학급담임과 정치학습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소년단의 단장, 「社勞靑」의 지도자, 혹은 黨의 간부들로서 黨의 政策에 충실한 者들이다.

어떤 인간이든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獨創性和 自由는 위축되기 마련이며, 교육과 훈련에서 획일성의 요구는 非人間化와 인권의 억압을 동반하게 마련이다.²⁶⁾

6. 結 言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육성한다는 인위적이며 비민주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政治思想教育에 치중해 왔다.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출발부터 폐쇄적, 맹종적, 호전적 인간을 양성하는 규범으로서 非教育的인 성격을 갖고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1945년 분단이후, 획일적 政治教化를 통해 북한 동포의 사상과 의식구조, 행동양태까지 共產主義化하려고 온 힘을 쏟은 결과, 평화적인 民族統一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관과 人間本性에 배치되는 政治教化와 思想革命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북한이 反動思想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부르주아사상이란 따지고 보면 人間 本性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것이다. 인간

26) 문용린, 「北韓共產主義 教育方法 分析」(국토통일원, 1983), p.7.

본성의 발로는 인위적으로 억제·말살하려 해도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

오랫동안 人間改造에 주력했음에도, 지금도 북한안에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경계하고 있는 外部思潮의 침습과 개방의 압력은 思想革命이 완벽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사상혁명을 계속 추구하는 한 民族統一의 실마리는 풀리기 어렵다. 북한의 교육이 변화를 가져와야 ‘한민족공동체형성’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다. 지금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오직 한길 따라”, “우리식대로 살자”의 구호를 내걸고 교육에 임하고 사상혁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세계사적 추세인 變化의 물결을 완전히 차단하는 못할 것이다. 그 변화는 북한의 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姜 鎬 洋 (前統一研修院 教授, 政博)

| | |
|---------------------------|-----|
| 1. 序 言 | 161 |
| 2. 對外政策 基調 | 162 |
| 가. 社會主義 革命路線 固守 | 162 |
| 나. 對外政策 決定過程 및 機構現況 | 164 |
| 3. 地域別 對外政策 | 170 |
| 가. 對中·蘇外交 | 170 |
| 나. 對東歐外交 | 172 |
| 다. 非同盟外交 | 174 |
| 라. 對UN外交 | 176 |
| 마. 修交現況 | 178 |
| 4. 政策變化의 展望 | 180 |
| 가. UN加入과 脫理念的 多邊外交 | 180 |
| 나. 對西方 實利追求外交 | 182 |
| 5. 結 言 | 184 |
| 가. 革命과 實利外交의 二重性 | 184 |
| 나. 南北交流 與件造成 展望 | 186 |

1. 序 言

지금 세계는 소련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外交政策에 따라 東西 和解를 背景으로 동구 공산국가들의 脫이데올로기적 改革・開放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한 民主化가 推進되면서 東西 冷戰體制가 붕괴, 交流・協力の 새시대를 맞는 획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社會主義 宗主國인 소련까지도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그러나 北韓만은 마지못해 UN에 加入하기는 했으나 外交의 基本 目標 및 方向에 있어서는 變化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1992年 金日成 新年辭에서는 “세계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화정책을 짓부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對外關係를 발전시켜 나아가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위업에 적극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거듭 밝힘으로써 反帝自主的 對外政策을 견지하며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으로만 보는 북한의 「로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개혁을 거부하며 革命 優位體制를 내세워 내부체제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대로 살자”는 정책은 결국, 실용주의 실리외교를 수용치 못해 國際的 孤立을 자초할 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대내외정세 변화와 국제적인 개방압력에 떠밀려 자구책으로 戰術的 變化와 함께 중국식 개발모형을 도입하

는 등으로 혁명과 실리의 이중노선을 병행시킬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변화의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인 對外開放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된 개방이 결국은 북한의 政治的 開放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中國과 같이 큰나라는 일부 지역을 개방해도 그 여파가 전체에 미치지 못할 것이나 북한은 지역적 협소성으로 인해 체제지지 세력의 이탈현상증대 등 모험이 따를 수밖에 없어, 북한 지도층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심중이다.

북한은 외교의 목표인 국제혁명역량강화가 벌써 난관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전략기조 자체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처해 있으며, 거기에서 國際原子力機構의 핵사찰 문제까지 겹쳐 복잡한 대내외 입장에서 세계의 초점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엄청난 자료의 홍수에 접하고 있다. 本 教材에서는 북한정권 수립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對外政策 基調, 對外政策 決定過程 및 機構, UN外交를 포함한 地域別外交 現況과 앞으로의 對外政策變化 展望 등을 예측해 보는 선에서 다루기로 한다.

2. 對外政策 基調

가. 社會主義 革命路線 固守

이제까지 북한의 모든 정책은 전체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추구하고 있으며 外交政策도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金日成은 “남조선 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 부분이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중략)…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외교부장 허담도 “미제를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결국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외교정책의 最終目標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 총화보고에서 金日成은 북한 對外政策의 기본이념을 ‘자주, 친선, 평화’라고 표방하면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역량과 반혁명역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반제자주역량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 사회주의역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의 對外活動 方向이

첫째,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강화 및 친선협조관계 발전

둘째, 비동맹 제3세계제국과의 국가관계의 발전 및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단결과 협조의 강화

셋째,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제국과의 우호관계 형성 및 경제·문화교류의 발전

넷째,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제국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위한 내왕과 접촉의 강화 및 경제·문화교류와 협조의 발전에 있음을 밝혔다.

그 이후 北韓 外交政策의 방향은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 기본목표와 방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나. 對外政策 決定過程 및 機構現況

북한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기본으로 한 金日成 首領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은 金日成 혁명사상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기관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해서 조직되어 있다.

外交의 基本原則은 사회주의 헌법상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가 對外關係의 원칙을 수립한 예가 단 한번도 없었다.

모든 외교정책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심의 결정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대외문제를 관장하는 비서국의 국제부가 중심이 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최고인민회의에 통고, 추인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그 집행은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감독 아래 政務院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그 최고책임은 국가주석의 관장하에 있다.¹⁾

정무원의 외교부는 외교집행의 실무부서로서의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對外業務가 다양하게 분담되어 對外經濟協力事業部도 對外活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외교는 노동당 소속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맡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主要 執行機構는 다음과 같다.

(1) 國家機關

(가) 最高人民會議

북한의 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道(직할시) 및 市(구역)·郡인민회의 등 3層制로 조직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

1) 북한헌법 제76, 96, 97, 103, 109조

관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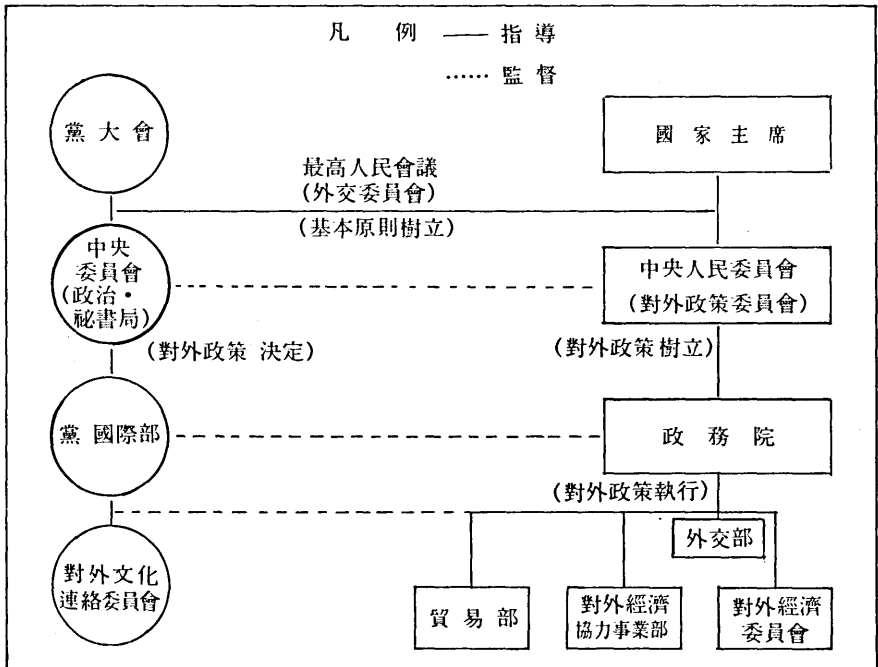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법령 등 입법권 행사와 對內外政策의 기본원칙까지 수립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원칙적인 방향설정도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교정책의 基本方向은 김일성의 시정연설 또는 정강에서 발표하고 최고인민회의는 그것을 지지·찬성하는 형식상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는 자격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외교위원회와 통일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로 外交統一分野에 대한 의회 차원의 활동강화를 기했다.

<표1> 外交政策의 決定 및 執行機構表



(나) 國家主席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주석제를 채택한 것은 首領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舊憲法에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합의제 국가원수)의 지위와 권한이 新憲法에서는 주석에게 이양되어 “주석은 국가의 수령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교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주석은 外交分野에서

첫째, 각국과 체결한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과²⁾

둘째, 각국 사신의 신임장 또는 소환장을 접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³⁾

이는 중국의 주석보다 권한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다) 中央人民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는 북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⁴⁾ 조직되어 노동당의 정치국위원 및 정무원의 고위간부들로 구성, 형식상의 黨政協議體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석의 보좌·자문기관이며 1인지배체제하에서 형식상 민주성을 부여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모든 권력을 국가주석에 통합·집중시키자는 것이다.

헌법상 중앙인민위원회의 對外關係 임무와 권한은 국가대외정책 수립,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외교활동에 관한 지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⁵⁾

(라) 政務院

정무원은 북한 최고주권기관의 行政的 執行機關으로 국가주석과

2) 북한헌법 제96조

3) 북한헌법 제97조

4) 북한헌법 제100조

5) 북한헌법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정무원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 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헌법에 명시된 정무원의 임무와 권한 10개항중 대외활동에 관한 것은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⁶⁾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外交部

외교부는 정무원 기능중 외교활동분야를 전담하는 실무부서이다. 외교부는 타국과의 관계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공식적인 활동을 하나 對南業務, 民間外交 또는 非政治的 對外活動은 담당하지 않는다.

외교부장은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인텔리출신으로 박현영, 남일, 박성철, 허담에 이어 현재 김영남이⁷⁾ 맡고 있는데 재임기간이 긴 편인 것이 특징이다.

外交部の 組織은 <표2>와 같다.

1990년 10월 對日修交原則이 결정된 후 최근 북한은 외교부의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종전, 美·日에 관한 업무는 라틴아메리카국 및 동남아국에 소속되어 추진 되었으나 현재는 미국과 일본 담당부서로 美·日局을 신설하고 美國課와 日本課에 인재들을 증원 배치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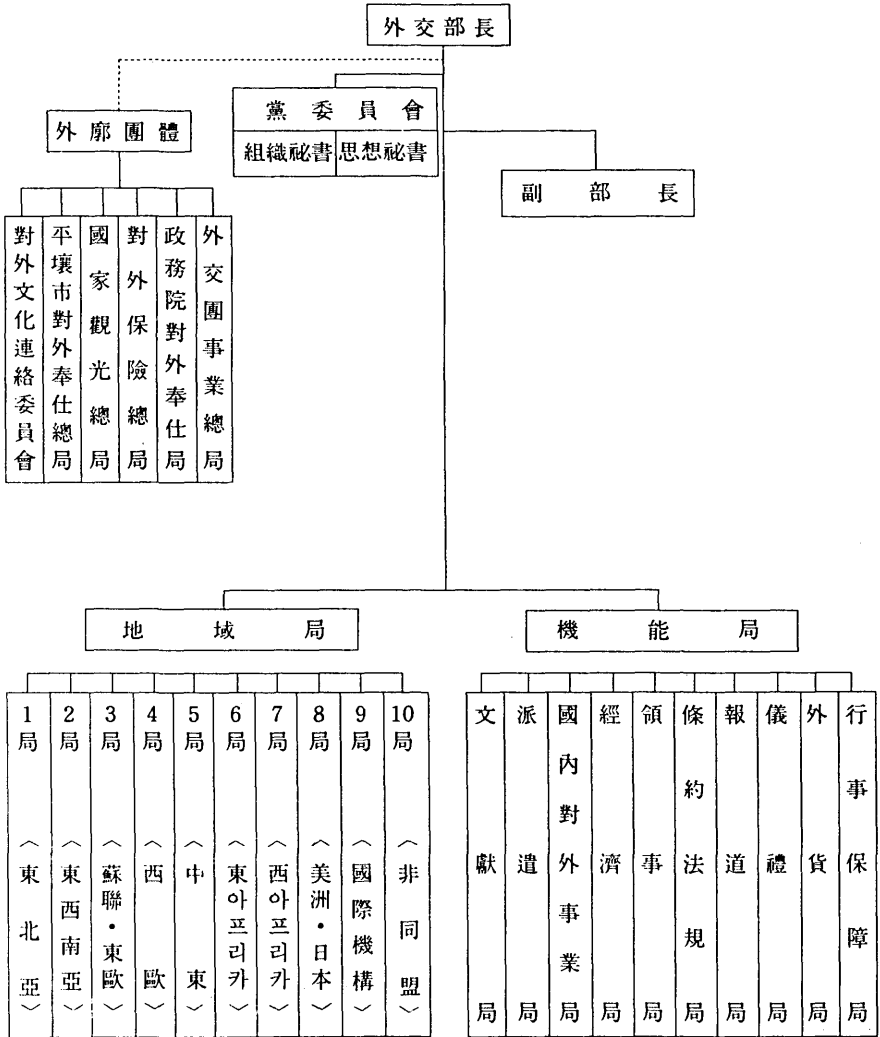
1985년부터 외교부는 형식상 정무원에 속하되 실제로는 金正日 직속부서로 바뀌어 인민무력부, 국가보위부 등과 같이 독립부서로 활동하고 있다.

6) 북한헌법 제109조 7항

7) 서열7위

8) 서울신문, 1991. 11.

< 丑2 > 外交部 機構表



(바) 對外經濟委員會 및 對外經濟事業部

대외경제위원회와 대외경제사업부는 經濟外交의 집행기관으로서 대외경제위원회는 주로 소련・중국을 비롯한 국교가 수립된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하며 대외경제사업부는 정식 국교관계가 없는 나

라들을 대상으로 경제교류 이전의 무역관계개설, 상담, 기술도입 등 경제협력추진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2) 外廓團體

(가) 對外文化連絡委員會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1956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중립국 또는 신생 독립국가들과 폭넓은 外交活動을 하기 위하여 당 및 정부의 외곽단체로 창설되었다.

1956년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의 영향을 받아 多邊外交의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과 정식접촉에 앞서 민간외교, 친선단체교류, 문화활동, 예술공연 등 사전교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협회의 기구로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 그리고 실무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산하 기관으로 각종 친선단체가 있다.

협회활동이 활발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져 政治的 性格을 띠자 위원장을 당핵심간부 출신으로 기용해 문화교류의 범위를 넘어 政治工作까지 겸하여 해외의 친선단체 및 연대성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社會團體

북한의 사회단체는 對外活動의 일부를 분담한다. 직업동맹 등 각종 사회단체는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이들과 교류를 民間外交의 차원에서 매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민간외교의 한 방안으로 외국의 사회단체인사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까지 대외활동에 동원시키고 있다.

(3) 朝鮮勞動黨

당은 실질적인 권력기관으로 북한체제의 領導的 위치에 있다.

당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국내외 모든 정책들의 방향을 결정하

고, 원칙문제를 수립하며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지도한다. 노동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북한의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된다.⁹⁾

對外政策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당대회에서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는 대외관계의 노선과 정책을 수정하고 그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의 실무부서 최고기관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며 그 산하 부서중 대외관계를 黨的으로 지도하는 부서가 국제부이다.

그러므로 당중앙위원회의 대외담당비서와 국제부가 북한의 모든 일상적 對外活動分野를 책임지고 총체적으로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당중앙위원회에서 토의되는 경우가 있다.

3. 地域別 對外政策

가. 對中·蘇外交

북한은 ‘國際革命力量強化’를 위하여 공산권 국가들에게 크게 의존해 왔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소련의 역할이 核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1948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그후 줄곧 北韓政權의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 소련이 經濟的 後援者, 理念的 支柱가 되었다.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 金日成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中·蘇를 위시한 사회주의제국과의 단결 강화 및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中·소는 물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이 북한 外交政策의 기본노선

9) 북한로동당규약 제3장 22항

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초 노골화된 중·소분쟁 사이에서 그때 그때 주어지는 상황적 변화에 따라 기회주의적 밀착, 소원 그리고 중립적 관계를 반복해 왔다.

그러다가 1966년 8월 12일에 ‘자주노선’을 표방하여 대외관계에서 自主性を 강조하고 對中蘇 ‘等距離 外交政策’을 追求함으로써 중·소 쌍방으로부터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최대로 얻어내려 노력해 왔다.

북한이 중·소 관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던 漂流外交를 時期的으로 區分, 考察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 對蘇 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다가 1950년 12월 중국의 6·25 참전 등 결정적인 지원을 계기로 對中關係도 같은 비중을 두어 왔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運動이 전개될 때 소련과의 관계가 별려졌으나, 1961년 7월에 북한이 소련·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對中, 對蘇 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1962년 10월 쿠바 사건과 중·소국경분쟁은 중·소관계를 크게 惡化시켰고 북한은 소련의 對社會主義 政策에 실망을 느껴 중국쪽으로 다시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4년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文化革命은 북한을 소련쪽으로 접근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말 중국의 문화혁명종식과 더불어 제3세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해 중국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고 對中國關係改善을 또다시 추구하였다.

1970년대를 통하여 북한은 적극적인 對中·蘇 자주노선을 점차 정착시킬 수가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

서 중국으로부터는 理想的 約束을, 소련으로부터는 經濟·軍事的 實利를 추구하는 등 중·소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왔다.

마침내 1990년 9월 韓·蘇間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소련의 배신행위를 극렬하게 비난하고 중국과의 관계강화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국내 사정이 복잡한 소련은 대북한 경제·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종래의 友好價格에 의한 현물거래에서 硬貨決濟 方式으로 무역거래를 변경하였으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交易方針을 통고하자, 북한은 급속히 중국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주장하는 중국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國際的 孤立感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소련은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 외교를 취하였다.

최근 북한은 중국이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면서부터 北·中간의 일방적인 외교시대는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韓·中 貿易代表部의 설치 및 무역량의 증가와 중국의 태도로 한·중 수교가 시간문제라는 시대의 흐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북한은 한·중간의 관계진전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중수교를 늦추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北·中 兩國間의 血盟關係를 내세우면서 이념적 결속을 다지는 한편 석유, 석탄, 식량 등을 중국에 긴급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中國式 經濟開放모형을 권고하는 등 북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나. 對東歐外交

북한의 對東歐 外交政策은 중·소 관계변화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시부터 동구제국은 소련의 정책에 따라 차례로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후 북한과 동구제국은 모두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共產宗主國인 소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단결과 결속을 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이 전재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받은 것은 중·소를 제외하고는 東歐諸國이 유일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중·소 분쟁에서 북한이 對중국편향 정책을 취하자 동구권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류도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親中國路線을 벗어나 소련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자, 다시 소련과 가까운 동구제국들과의 관계도 정상회복되면서 강화·발전되었다.

1970년대 북한의 對중·소관계가 균형적으로 회복되자 북한은 유고슬라비아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루마니아와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창설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였으며, 1971년 4월에는 오진우를 단장으로 한 代表團이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양국간의 군사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는가 하면, 6월에는 루마니아 대통령 차우세스쿠가 북한을 방문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조함과 함께 對유엔 戰略을 협의도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당 총비서 후사크가 1973년 6월 평양을 방문하여 쌍방간에 친선을 다지고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한반도통일에 대한 북한측 주장을 전폭 지지하였다.

1972년 2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때를 같이 하여 북한은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政權代表團을 소련, 루마니아, 유고, 체코, 동독, 폴란드, 불가리아에 순방시켜 동구제국과 상

호 정책지지 및 우호를 다짐하였다.

1973년 朴正熙 前大統領의 「6·23선언」으로 한국정부의 對東歐 接近 可能性이 커지자 북한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구와 계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하여 정치 지도자 및 각 분야 대표단을 수시로 상호 초청, 방문케 하였다.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직후에도 金日成은 중국을 비롯하여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유고를 방문, 무역·과학·기술 등 분야의 우호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1984년에는 金日成이 소련을 방문한 후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구 7개국을 차례로 순방하여 정치뿐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동구제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에 증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 직후부터 동구제국이 改革과 民主化를 추진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필두로 1990년 폴란드, 유고,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모든 동구국가들이 韓國과의 國交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외교무대를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헝가리의 배신행위는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극렬히 비난했지만 연이은 동구국가들의 對韓修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다. 非同盟外交

北韓은 비동맹국가를 위시한 제3세계와의 외교관계를 공산권국가 다음으로 중요시하였다.

북한이 제3세계에 처음 눈뜬 것은 1955년 반동회의가 개최된 이듬해인 1956년 4월, 노동당 3차대회에서 관계설정을 밝혔을 때부터이다.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와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며, 자주와 평등에 입각한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세계 모든 평화애호국과 실무적 관계를 갖는다.”는 名分으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 노동당 외곽단체를 통하여 친선 및 문화교류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金日成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의 신생 독립국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대외정책의 고리로 삼는다.”고 재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정치적 접근도 개시하여 제2차 반동회의를 앞두고 중국지도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을 순방할 때 북한에서도 고위대표단을 파견 지역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였다.

1966년부터 중국의 문화혁명시기에 북한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親蘇的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선사절단을 파견하였다.

北韓은 제3세계 외교를 ‘國際革命力量強化’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친선 유대를 강화하여 ‘반제반미공동전선’을 형성하고, 북한의 지위향상 및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 획득을 목표로 하였으며, 미국과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를 위해 북한은 人民外交와 經濟交流 方式을 사용하였고, 또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민족해방투쟁’이라는 명분을 세워 군사 지원까지도 해줌으로써 상당히 입지를 강화하였다.

마침내 북한은 베트남 공산화의 여세를 몰아 1975년 8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북한은 비동맹회의에 한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978년부터는 비동맹회의가 열리기 전에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열어 비동맹회의에 임하는 입장과 방침을 미리 정하는 用意周到한 면을 보였다.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 비동맹회의 회원국간에 노선 분류가 생

기자 북한은 非同盟國家들의 “통일단결과 경제협력 및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투쟁의 방향을 ‘反帝自主化’로 돌리려 하였다.¹⁰⁾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제정세가 화해와 실리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한국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1987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비동맹국가 각료 특별회의에서 김일성은 “개발도상국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채무상환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채무상환기일을 연기하고 그 이자도 동결하는 방향으로 대외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여 북한의 채무상환 능력의 상실로 인한 국제적 파산상태를 모면해 보려고도 하였다.

1989년 9월 유고에서 개최된 非同盟 頂上會議에서 북한은 「한반도문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러 결국은 북한의 비동맹외교에서 한계성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 對UN外交

한반도 문제에 관한 북한의 對UN정책은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① UN간섭 거부기 ② UN상정 거부기 ③ 선별적 UN상정기 ④ 상정 유보기의 4단계를 거치면서 1991년 9월 17일 UN가입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동안 UN외교 과정을 살펴보면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政府’로 승인되고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UN의 권위와 기능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1953년 韓國戰 休戰會談에서 북한은 UN군사령관과 휴전협정을

10) 제6차 비동맹 정상회의, 이종욱 연설(1979. 9. 6)

체결한 뒤 UN을 미국과 동일시하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관련국 회의의 제의하는 등 한국문제를 UN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였다.

1960년대에는 북한이 自主外交를 강조하면서 UN에 대한 자세는 경색되고 UN의 권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東西解氷 霧圍氣의 형성과 함께 중국이 UN에 가입했으며 1973년 한국이 남북한 UN동시가입 불반대를 선언한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發表한 날, 북한도 「조국 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면서 ‘단일국호에 의한 UN가입’을 주장하여 UN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어 북한은 1973년 9월 UN본부에 상주대표부를 개설했고, 제네바 UN사무국에도 상임옵서버 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각종 UN 산하 전문기구와 정부간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1975년 제30차 UN총회에서는 “① 남북대화의 계속을 촉구하고 ② 모든 직접 당사자가 휴전협정 대체 및 항구적 평화보장을 지향하는 협상의 개시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방측 수정결의안과 한국을 제외시킨 채 “한국휴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美·北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산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기현상을 보임에 따라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UN기능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북한은 제30차 UN총회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공산측안만 통과된 듯이 선전하면서 “UN 결의를 무시하면서 미군이 남반부에 주둔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력 성장으로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세계의 화해구조와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자 북한은 국제적으로 지위가 약화되고 對UN戰略도 위축된 경향을 현저히 보였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단일의식의 UN공동가입안’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이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여론에 초조함을 보여 주었다.

그후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한국과 별도로 UN에 가입하겠다고 외교부가 공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종래의 ‘두개조선 반대정책’ 主張이 모순되었음을 드러냈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해 9월 17일 북한은 남북한 UN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의 UN가입은 한국의 UN단독가입 강행결정과 北韓의 對美·日관계 개선욕구, 中·蘇의 압력 등이 주효했던 것이다. 이제 북한이 UN무대 안에 들어 왔다는 것은 최근 급격한 국제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향후에도 북한이 UN정회원 국가로서 UN헌장을 준수해야 함은 主體外交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개방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변화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북한의 UN가입은 유엔 외교가 북한의 對內外政策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마. 修交現況

修交란, 상대국에 대해 외교활동을 하기 위한 公式的 채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교국을 확장시키는 것은 곧 국가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한은 1992년 1월 현재 11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바, 한국의 154개국에 비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수교관계의 특징을 時期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외교망은 공산권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도 반공노선의 固守와 할슈타인원칙 遵守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1960년까지는 남북한 공히 수교국이 16개국에

불과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反帝反植民地解放’을 내세우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諸國에 대한 浸透外交를 강화하고 1966년 自主外交宣言뒤 多邊外交에 치중하여 1971년 수교국이 37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국제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中立國 등과 외교관계를 적극 추진하여 1971년 수교국이 총 83개국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는 데탕트의 새로운 국제정세와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이념을 초월한 實利外交로 非敵性國家에 대해 門戶를 開放함으로써 1980년 말에는 북한이 100개국, 한국이 112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발전, 7·7선언,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에 힘을 입어 동구권 및 소련까지 수교, 총 14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成果를 이룩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 북한 외교관 밀수행위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은 물론 호주 등 일부 국가로부터는 斷交措置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남미 등에 대한 꾸준한 접근 시도로 1988년 콜롬비아, 1989년 페루, 1990년 안티과다브다 등과 새로이 수교를 했지만 1992년 1월 현재 修交現況은 다음<표 3>과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南北韓의 地域別 修交現況

(1992. 1. 현재)

| 地域 區分 | 亞洲・太平洋 | 美 洲 | 歐 洲 | 中 東 | 아프리카 | 計 |
|----------|--------|-----|-----|-----|------|-------|
| 韓 國 | 30 | 34 | 32 | 19 | 39 | 154개국 |
| 北 韓 | 19 | 19 | 22 | 13 | 42 | 115개국 |
| 同 時 | 15 | 18 | 19 | 10 | 38 | 100개국 |

4. 政策變化의 展望

가. UN加入과 脫理念的 多邊外交

1991년 9월 북한은 급작스런 UN가입으로 남북한 관계 등에 새로운 外交의 章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1973년 이래 일관되게 ‘연방공화국 단일국호가입안’을 일관되게 주장하다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施政演說에서 ‘單一議席 共同加入案’을 제안하여 外見上 변화를 보인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UN단독가입이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초조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UN가입을 결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이 加入名分으로 밝힌 것은 “남조선에 의해 조성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UN무대에서 전조선민족의 리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과 주장이다.¹¹⁾

北韓은 외교부성명에서 한국의 UN단독가입 강행이 “전민족의 통일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UN무대를 통하여 하나의 조선을 둘로 갈라놓는 천추에 용서못할 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 북한은 UN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¹²⁾

위와 같은 主張은 단일의석 UN가입 주장이 국제여론에서 호응

11) 외교부 성명(1991. 5. 27)

12) 정무원 총리 연형묵 연설(1991. 10. 2)

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非現實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北韓이 UN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 가장 획기적인 대외정책의 변화로써 북한이 시대적 조류 및 국제정세 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결과이며 軌道修正이라는 점이다.

1991년 10월 북한 연형묵 총리의 UN총회연설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없이 '하나의 조선' 기초의 '우리식 사회주의' 견지를 강조함으로써 金日成體制의 정책대안 한계를 보여준 바 있다.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1991년 5월 15일 고르바초프와 강택민의 모스크바 정상회담, 한국정부의 성공적인 북방정책 및 유엔가입정책 추진, 또 北·日修交協商에서 일본이 남북유엔가입을 前提條件으로 제시한 것 등이 북한을 UN무대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촉매역할을 한 것이다. 북한이 최대 당면현안인 경제난 타개와 對美·日接近 등 내면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기존의 UN정책을 수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북한의 유엔가입으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개선에 청신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변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끔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4년 5월 공식적으로 23년만에 이루어진 김일성의 소련, 동구권방문에서 특히 동구공산권의 修正主義路線에 따른 경제발전의 실상에 크게 충격을 받고 1984년 9월 8일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본받아 「合營法」을 제정,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시도한 바도 있다.

「지리적 요새」, 「사상적 요새」, 「물질적 요새」에서 「人間改造事業」, 「自然改造事業」, 「社會改造事業」등을 강행해온 북한의 폐쇄사회가 40여년간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서방측의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표한 「합영법」 제정이후에 미미한 협력단계를 극

북하고 적극적인 經濟協力을 위하여 1988년 11월 정무원내에 외국과의 합작·합영공장 문제를 전담하게 될 「合營工業部」를 신설하였다. 북한은 1986년 8월 조총련과의 합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國際總合營會社」를 통하여 對西方接觸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내 경제체제의 개혁과 개방경제정책을 병행시킴으로써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국내경제체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合營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냉전의 적이 사라지고 이데올로기가 무의미해져 가고 있으며, 민족주의 내지는 국가이익 우선의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일성체제는 實利를 위해서도 地球村의 變化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며 UN가입은 시기적으로 대외적인 변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開放과 改革의 추세에 따라야만 할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돌파구가 달리 없을 뿐더러 UN가입을 계기로 閉鎖體制의 이미지를 개선해야만 경제기술교류가 쉬우며, 대내적으로는 父子權力承繼에 있어 카리스마와 정통성이 약한 김정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민생활수준을 높여 민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체제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실용주의의 추구하고 대외개방을 서둘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나. 對西方 實利追求外交

북한정권 수립이후 1960년대 말까지 동서 냉전시기에는 소련 및 동구 8개국 등과는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켰으나 서방국가들과는 극히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1970년대 닉슨 美대통령의 중국방문과 美·中 관계개선, 그리고 美·蘇의 화해 등 데탕트로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 북한은 對西方接近을 본격화시켰다.

국제정세 흐름에 자극받은 북한은 1971년 11월 노동당 제5기3차 전원회의에서의 對西方接近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

이에 북한은 대상국가의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를 개별적으로 초청, 방문하는 등 민간외교를 거점으로 무역대표부와 공보관을 설치하여 準政府次元으로 끌어 올렸다가 공식적인 외교수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대외활동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대서방외교의 중심과 목표는 對美·日 關係에 있다.

당초 북한은 美·日의 對韓紐帶가 共產革命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고 美·日의 對韓紐帶를 弱화시키기 위해 한미, 한일관계를 離間시킨다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미·일과 정치적 관계개선을 통해 기술 및 자본도입이라는 경제난 타개에 역점을 두게 된 것이다.

북한의 對美接近 시도는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美외교관과 공식접촉, 6·25참전 실종 미군의 유해반환, 미국내 학술회의에 대표단파견, 미국학자 평양 초청 학술회의의 개최, 친선축구대회 등 다각적인 접근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사찰, 남북대화의 진전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 사회당과 1971년 11월에 구성된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교류를 추진하면서도 공식 관계수립을 회피하여 왔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北方政策成功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자 기존 입장을 바꾸어 일본측에 국교정상화를 적극 제의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국제적 고립탈피와 일본의 자본 및 기술, 특히 과거 植民統治時期에 대한 賠償金을 받아 파국 직전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켜 보려는 의도가 보다 적극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北韓은 국제권력정치 속성상 日本이 韓半島 統一을 원치 않으며 남북간의 세력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對北修交를 성립시키고, 경제력이 약해진 북한을 남한에 상응토록 끌어 올리기 위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북한은 對日修交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이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두르고 있다.

‘核査察 問題’가 前提條件으로 걸려 있기는 하나 북한은 일본의 시기조정에 의해 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벌써 日本風이 불고 있고, 日本語를 배우겠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5. 結 言

가. 革命과 實利外交의 二重性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新思考政策에 의한 신데탕트체제의 태동 및 알타체제의 붕괴로 상징되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혁, 동서독 통일, 韓·蘇수교와 韓·中관계발전, 日·北관계정상화 교섭진행, 蘇聯몰락 등에 따른 東北亞질서의 재편과 같은 주변정세의 발빠른 변화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정책노선의 방향설정에 고심토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冷戰的인 북한의 주체외교노선의 고수 여부가 세계 각국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 제반 정세변화가 북한의 사회주의 主體外交路線 固守에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주체의외교노선의 수정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소련과 동구의 改革・開放으로 공산주의가 몰락되면서, 이는 40여년동안 공산주의혁명과 팽창을 체제유지의 배경으로 삼아 오던 북한에게는 일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북한은 나머지 사회주의 공산국가 가운데 중국, 베트남, 쿠바 등과 國際革命力量次元이 아닌 理念的 義理의 유대를 다지고 있으나 좌경 비동맹권과의 관계도 상당히 쇠퇴되어 전반적인 외교역량이 크게 위축되었다.

비동맹국의 경제우선주의 추세는 북한의 政治的 口號인 ‘反帝鬭爭’을 퇴색시키면서 ‘反殖民地鬭爭論’이 설 자리를 잃었고 실리주의 국가관계는 북한에게 ‘出血外交’와 ‘貧血輸出’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체제 경쟁은 경제역량이 너무 미약한 북한을 더욱 큰 곤경에 빠지게 할 뿐이다.

대외적인 명분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내부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經濟實利가 더욱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이에 북한은 中國과의 共助關係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원조요청 등 自救策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UN加入을 계기로 對日修交와 對美接近에 박차를 가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과는 기정사실화 되다시피한 두나라간의 소원한 관계와 소련의 복잡한 내부사정 등으로 對北經濟支援의 격감현상과 硬貨決濟方式을 가져왔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지원의 공백을 일본으로부터 메꾸려는 계산에서 對日修交協商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은 걸프전쟁과 소련사태를 통해 세계강국으로 부상

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實際的 側面과, UN加入을 이용하여 국제무대에서 미군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축문제 등을 앞세운 平和攻勢를 멈출 수 없는 名分的 側面的 兩面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금후 北韓의 選擇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북한은 革命과 實利사이의 갈등과 경제문제 등으로 存立의 危機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혁명전략을 버리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조류에 순응한다면 위기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革命路線을 버린 대가로 세계국가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북한의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에서 共存과 實利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 보인다.

나. 南北交流 與件造成 展望

北韓은 테크노크라트 中心으로 일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UNDP 요청 등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공존을 통한 實利的 경제협조 등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외교부성명이나 연형묵 총리 연설에서 나타나 있듯이 ‘南朝鮮革命’을 본질로 하는 종래 대결적 차원의 對南統一政策을 당장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이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 대세와 조류를 거스릴 수 없는 이상 UN 가입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對日修交와 對美關係改善에도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실리추구 대외정책을 가속화하게 될 때 국제기구 및 서방국가들과의 접근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閉鎖體制가 점차 開放이 되므로 남북한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의 조선’보다는 相互實體의 認定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변화가능성은 당장 南北對決關係의 종식으로 연결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에서의 平和共存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그 전망도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북한의 UN同時加入과 더불어 북한의 개방과 南北現實認定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첫출발인 동시에 궁극적인 平和統一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에게 애정을 가지고 友好的인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상대는 같은 민족인 한국뿐이다.

북한의 經濟的 落後性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며 북한의 상품을 수입해 줄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困境에 처한 북한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상대가 한국이고 보면, 交流의 폭을 넓혀가며 相互發展과 民族의 共同利益을 도모하는 것이 북한의 대내외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賠償金安結에 시간을 빼앗기기 보다는 먼저 남북 상호신뢰구축으로 한국으로부터의 經濟協力을 받는 것이 지금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捷徑임을 分明히 알아야 한다.

VI (北韓의 軍事

姜 道 遠 (統一研修院 教授)

| | |
|----------------------|-----|
| 1. 序 言 | 191 |
| 2. 北韓軍의 形成과 性格 | 192 |
| 가. 形成過程 | 192 |
| 나. 軍의 性格 | 195 |
| 3. 軍事思想·政策·戰略 | 197 |
| 가. 軍事思想 | 197 |
| 나. 軍事政策 | 201 |
| 다. 軍事戰略 | 206 |
| 4. 軍事組織·制度 | 210 |
| 가. 軍事機構 | 210 |
| 나. 黨·軍關係 | 212 |
| 다. 軍服務 | 215 |
| 5. 軍事能力 | 216 |
| 가. 常備戰力 | 217 |
| 나. 豫備戰力 | 224 |
| 다. 核 및 化生戰 能力 | 226 |
| 6. 結 言 | 228 |

1. 序 言

1990年代에 들어 國際情勢의 전반적인 흐름은 반세기 동안의 冷戰時代에 終末을 告하고 脫冷戰時代로 불리는 새로운 國際秩序가 형성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소련을 비롯한 東歐의 脫共產主義 民主變革, 유럽에서의 東·西障壁의 붕괴, 獨逸의 統一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으며 軍事的 對決은 平和共存과 共同安保를 추구하는 平和指向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군사적 긴장의 해빙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南北韓 當局間에는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이 進行中에 있으며, 이 「南北高位級會談」에서는 南北韓 關係改善 및 交流協力 問題와 함께 不可侵 및 韓半島 非核化問題 등 軍事問題들이 논의되고 있어 南北韓 關係의 肯定的 變化·發展을 점쳐 보게도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과거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경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래도 그들의 재침능력 및 의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따라서 本 教材에서는 北韓의 軍事實態를 北韓軍의 形成과 性格, 軍事思想·政策·戰略, 軍事組織·制度, 軍事能力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되, ‘軍事能力’面에 力點을 두어 살펴보도록 한다.

2. 北韓軍의 形成과 性格

가. 形成過程

北韓의 軍, 소위 「朝鮮人民軍」(以下 人民軍)의 創軍作業은 8·15光復 直後부터 이른바 ‘建黨·建軍·建國’이라는 3대과제 중의 하나로 당시 북한주둔 소련군의 지도아래 추진되었다.

1945년 8월 24일 平壤에 진주한 소련군 第25軍司令部(北韓駐屯司令部)는 당시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日本軍을 무장해제하고 그해 10월 약 2,000명 규모의 북한청년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일본군으로부터 接收한 무기로 무장시켜 「保安隊」라는 軍事組織을 만들었다. 1945년 10월 21일 발족한 이 보안대가 바로 북한에 생겨난 최초의 군사조직으로 오늘날 「인민군」의 母體가 되었다.¹⁾

한편, 이듬해 1월 소련은 북한으로 보낸 스탈린 명의의 각서를 통해 金日成으로 하여금 「北朝鮮委員會」構成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督勵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과 6월 북한은 훗날 第1 및 第2 軍官學校(사관학교)로 개편된 「평양학원」과 「보안간부학교」를 설치하고, 6·25戰爭時 人民軍의 高級將領들인 金策, 金一, 吳白龍, 金武亭 등을 교관 및 간부요원으로 앉혀 軍의 초급군관을 養成하기 시작하였다.

1) 8·15光復 직후 「治安隊」, 「自衛隊」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한 武裝隊였으며, 1945년 10월 12일자 소련군사령관 치스코프 대장의 다음과 같은 성명 발표로 해산되었다.

— 성 명 요 지 —

- 북한지역내의 모든 무장조직 단체를 해산한다.
- 일본군이 소지한 모든 무기·탄약·군수물자를 소련군사령부에 반납한다.
- 各道의 臨時人民委員會는 소련군사령부와 협의하에 규정된 인원수의 保安隊를 조직한다.

그후 북한의 각 지역에 조직된 保安隊 規模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들을 통합·지도하기 위한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를 평양에 설치하게 되고, 1947년 5월에는 이를 母胎로 하여 「人民集團軍總司令部」라는 것을 發足시키고 종전의 保安隊를 正規軍隊 편제로 개편하는 한편, 군관 및 하전사들의 직제도 정규군에 준하는 계급구조로 변경시켰다.²⁾ 그리고 그해부터 소련의 軍事援助를 받아 新型武器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2월 4일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內에 「民族保衛局」을 新設하여 創軍準備를 완료해 놓은 북한은 同年 2월 8일자로 「人民軍總司令部」를 設置하고 3개의 정규 전투사단을 구성함으로써 「人民集團軍」을 「朝鮮人民軍」으로 개칭, 正規軍으로의 創軍을 公表하였다.

한편, 海軍은 1946년 7월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元山에 창설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은 1946년 12월 水上保安隊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함과 동시에 元山과 南浦의 水上保安隊를 「경비위수사령부」로 개칭하고 淸津에 「위수사령부」를 신설하였다. 1947년 6월에는 元山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뒤에 「海軍軍官學校」가 되었다.

그후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으로 해안경비대가 「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면서 북한의 海軍이 되었다.

空軍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發足한 「新義州航空隊」가 母體로서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新義州航空隊 출신 약 300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하고 이를 1948년 人民軍 創設과 함께 航空聯隊로 증편함으로써 正規軍으로 發展하였다.³⁾

2) 喪名五, “<조선인민군>의 特性和 役制”, 「한국논단」, 1990.10월호, pp.44-45. 參照.

3) 平和統一研究所 編, 「北韓概要」(서울: 平和統一研究所, 1986.12), pp.214-216.

이상과 같은 人民軍의 形成過程을 통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人民軍은 平壤駐屯 蘇聯軍司令部의 지도하에 創軍되었다는 점이다. 1948년 12월 말 소련군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북한의 인민군은 소련군의 지도하에 組織・訓練됨으로써 人民軍의 制度, 戰略 및 運營指針 등은 모두 소련군의 軍事思想과 軍事制度에 그 起源을 두고 있다.

약 1만명의 북한인들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약 3천명으로 추산되는 소련의 軍事顧問官과 기술자들이 1950년 6월 이전까지 人民軍에 所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⁴⁾

둘째, 人民軍이 북한정권 수립(1948.9.9)보다 7개월이나 앞서 創設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國家보다 軍隊가 먼저 發足되었다는 奇現象이다. 人民軍의 母體인 保安隊가 소련군 제25군사령부의 지도 밑에 창설된 것이 1945년 10월이며 「조선인민군」 창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1948년 2월 8일이다.

北韓政權보다 軍이 먼저 形成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당시 한반도를 위성화하려는 스탈린의 ‘東南進政策’과 金日成의 ‘對南赤化企圖’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와 김일성은 북한지역에 人民軍을 독자적으로 우선 창군함으로써 單獨政府樹立 및 武力南侵企圖를 潛在化시킨 채 다만 북한 政權樹立만을 大韓民國 政府樹立 이후로 미루었던 것이다.

셋째, 북한은 지난 1977년까지 2월 8일을 創軍日로 定해 기념해 오다가 1978년 이후부터는 김일성이 1932년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4월 25일로 바꾸어 기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人民軍創建日을 변경한 것은 人民軍의 起源을 이른바

4) 柳仁澤, “北韓의 軍事”, 「民主統一論: 北韓實態」(統一硏修院, 1989.2), p.202.

‘항일빨치산 鬪爭傳統’과 연결시켜 그 正統性을 찾으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金日成과 그의 이른바 ‘主體思想’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⁵⁾

나. 軍의 性格

북한의 軍은 그들 스스로 勞動黨規約에 규정하고 있듯이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 ‘首領(金日成)의 軍隊’라고 하는 特性을 갖는다.

勞動黨規約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못박음으로써 人民軍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47조에서는 “軍隊內 各級單位에 黨組織을 구성하며 黨中央委員會 直屬機關인 軍黨委員會가 이들을 관장하여 사업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軍은 黨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黨의 指導·指示에 따라서만 行動할 수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金日成은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인민군은 오로지 黨의 지도하에서만 불패의 혁명전력으로 강화·발전할 수 있으며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勞動黨規約 제48조에서는 “인민군대내 당원들과 군인들은 당과 수령, 인민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人民軍이 金日成의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金日成의 軍隊, 首領의 軍隊임을 明文으로 規定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黨의·革命的 軍隊로서의 性格과 더불어 金日成의 軍隊로서 人民軍의 特性은 軍幹部들의 軍創建紀念大會에서의 報告나 각종 간행물의 論說 등에서도 누누이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 4

5) 尹柄益, 「北韓의 軍事實態」(統一研修院, 1987.7), pp.6-7.

월 25일 북한 중앙방송은 ‘조선인민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題下의 군창건 58주년 기념논설에서 “당의 의도가 신속 정확히 침투되고 전군이 숨을 쉬어도 당과 함께 숨쉬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자랑찬 면모”라고 하면서 “당의 명령집행을 위한 지휘체계는 오직 수령과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혁명력사’가 金日成을 중심으로 미화·조작되었듯이 軍創建日까지도 金日成의 혁명신화와 연관지어 “북한의 軍은 곧 首領의 軍隊”라는 등식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制度的으로도 김일성은 노동당의 總祕書 겸 黨軍事委員會 委員長으로서 그리고 政權의 主席인 동시에 전반적 무력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서 군사정책의 指導와 일체의 武力을 장악·통솔하고 있다.⁶⁾

한편, 최근 軍創建紀念日을 전후하여 주목되는 점은 軍에 대한 金正日의 主導的 영도가 애써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軍총참모장 崔光은 1990년 4월 25일 군창건 58주년 중앙보고대회 연설에서 人民軍이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된 것은 김정일의 세련된 령도력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위적 군사로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김정일의 主導的 영도를 부각시키고 있는가 하면 同日宇 북한 중앙방송도 “지금 인민군대안에는 지난날 조선혁명군 대원들이 김일성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해 가던 그 신념대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向後 金正日의 權力承繼와 관련하여 人民軍의 性格을 ‘金正日의 軍隊’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로동당중

6) 북한 「로동당 규약」 第27條 및 북한헌법 第93條 參照.

양위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金正日를 「人民軍 最高司令官」으로 추대하였다.

이상과 같은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 首領의 軍隊로서의 人民軍의 性格은 軍事制度나 軍事政策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 軍事思想・政策・戰略

가. 軍事思想

(1) 共產主義 軍事思想

階級鬭爭에 의한 全世界의 共產化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적 군사론에 따르면 戰爭과 革命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革命과 戰爭 혹은 혁명사업 추진과 군사문제는 마치 兩位一體論과 같이 생각되어 온 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적 군사론이다.⁷⁾

마르크스가 武裝革命理論의 사상적·철학적 기초를 다져 놓았다면 Engels는 혁명과 관련되는 군사문제 일반을 보다 폭넓고, 깊게 통찰하였다. 특히, Engels는 非正規戰으로서의 遊擊戰論(게릴라戰) 및 人民戰爭의 마르크스주의적 기초개념을 정립하였으며 內亂에 있어서 무장 노동자의 계급의식발로(계급투쟁)를 고취하고 체계화시키는 軍事思想家로서의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이상과 같이 마르크스·Engels에 의하여 定礎된 공산주의 군사사상은 ‘暴力革命論’을 바탕으로 한 레닌의 실천론적 전쟁관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레닌은 資本主義의 최후단계로서의 帝國主義戰爭과 革命戰爭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을 帝國主義戰爭, 발전된 자본주의시대의 전쟁이며 資本主義 終末時代

7) 尹炳益, 앞의 책, p.20.

의 戰爭 및 征服戰爭으로 규정하고, 역사발전 속의 사회주의 ‘테제’로서 제국주의전쟁을 사회주의혁명 실천을 위한 內戰으로 변전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여,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려면 많은 內戰(革命戰爭)을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말하자면 레닌에 있어서의 일관된 命題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戰爭不可避論’이었으며 따라서 레닌은 “군대는 政治로부터 中立일 수 없으며, 사회주의군대는 곧 혁명무장력”이라는 등식관계를 정립하였다. 그런가 하면,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특한 투쟁형태로서 빨치산 투쟁형태를 창도해 내기도 하였다.

한편, 군사전략가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기간을 통하여서는 政治·軍事指導者로서의 업적을 남긴 스탈린의 군사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政敵으로 몰려 죽은 트로츠키의 군사사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트로츠키는 1918년의 소련 「赤軍」 창군을 뒷받침한 군사이론상의 주도인물이기 때문이다.

1917년 3월 러시아 공산당 제8차대회에서 채택된 黨最高軍事會議議長 트로츠키의 「創軍테제」와 그의 論文 「게릴라戰과 正規戰」(1919. 7)은 이후의 스탈린 時代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社會主義軍隊 一般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革命時期는 階級的 軍隊로서의 ‘勞動者와 貧農의 軍隊’ 建設을 전제로 한 계급적인 民兵體制確立을 행동강령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스탈린은 안으로 一國社會主義建設의 발판을 굳히면서 여세를 점차 國際共產主義運動으로 돌리는 한편, 黨軍性和 階級性이 강한 「勞農赤軍」의 확장을 계속한다. 그러나 제2차 世界大戰中 독일군의 전격전 앞에 맥을 못추자 스탈린은 혁명성을 중시하던 勞農赤軍을 蘇聯軍으로 개편하고, 다른 한편 國際共產主義 鬭爭體인 「코민테른」을 해체시키고 美·英 資本主義國家軍과 이념을 초월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한다. 그 후 흐루시초프는 핵미사일시대의 도래에 따라 1956년 제20차 黨大會에서 ‘平和共存路線’을 채택하기에 이

른다. 이는 군사적으로 전쟁불가피성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戰爭觀의 완화경향이라고 하여 ‘現代的 마르크스·레닌주의 戰爭觀’이란 표현도 등장하고 있으나, 과연 共產主義的 戰爭觀이 수정·변화된 것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소련은 그 시기를 前後해서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解放戰爭’, ‘革命戰爭’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不正義의 戰爭으로서의 征服戰爭과 正義의 戰爭으로서의 解放戰爭이란 레닌의 二元論的 共產主義 戰爭觀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⁸⁾

한편, 毛澤東의 軍事思想은 마르크스·레닌·스탈린 등 共產主義의 전통적 군사사상의 기반 위에 독특한 中國的 모델로서의 人民戰爭 유형을 강조한 것이다. 毛澤東은 階級間, 民族間, 國家間 그리고 政治集團間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투쟁형태로서 전쟁을 규정하면서, “政治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政治”라고 정치와 전쟁과의 상관관계를 갈파하였다. 그리고 장구한 항일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持久戰論을 전개하면서 精神戰力을 물질무기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唯武器論을 배제하였다. 요컨대, 毛澤東 軍事思想의 정수는 人民戰爭論이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노동자·농민계급을 인민의 개념으로 집약시켜 “鬪爭偉力의 가장 깊은 根源은 民衆 속에 있음”을 통찰하고 계급투쟁, 중국의 社會主義革命 및 人民政權樹立 그리고 民族解放의 쟁취를 위한 무력항쟁의 구체적 수단으로써 인민전쟁방식을 취하고 이에 따른 전략전술을 실천하는 것이 毛澤東의 人民戰爭論이다.

(2) 金日成의 軍事思想

金日成은 1930年代에 주로 東滿地區에서 中共黨이 조직한 抗日

8) 尹炳益, 앞의 책, pp.21-24.

遊擊隊의 간부 노릇을 하였고, 1941년 日本關東軍의 대토벌작전에 쫓겨 入蘇한 後에는 소련군대에 입대, 8·15광복과 함께 尉官으로 북한땅에 들어와 집권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서 혁명의 이름을 빌려 완전한 自己獨裁體制를 형성하고, 이른바 ‘金日成의 主體思想’, ‘金日成主義’를 주장하면서 특히 主體思想의 指導理念으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를 내세우는 한편, 抗日빨치산 투쟁경험을 金科玉條로 하고 있으나 思想다운 군사사상은 없고 다만 공산주의자로서 蘇聯 및 毛澤東의 군사사상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金日成은 1948년 2월 8일 創軍紀念式典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人民軍은 소련군을 본받으라.”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人民軍의 編制規範을 모두 소련군의 것을 따 왔다. 金日成은 소련의 對極東 軍事戰略에 따라 6·25南侵戰爭을 일으켰으며, 6월 26일 아침 8시 그들의 軍事行動을 解放戰爭이라고 성명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金日成이 주장하고 있는 南朝鮮人民에 의한 南朝鮮革命論은 기본적으로 人民戰爭論 유형의 毛澤東 軍事思想의 모방이다.⁹⁾

金日成은 1968년 2월 28일 「祖國統一」誌에서 “武裝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主權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장투쟁, 民族解放鬪爭인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같이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쟁론을 그대로 신봉하고 毛澤東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¹⁰⁾

9) 尹柄益, 앞의 책, pp.25-26.

10) 國際問題研究所 編, 「防衛年鑑」(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90.10), p.171.

따라서 ‘南朝鮮人民에 의한 南朝鮮革命論’은 對南軍事行動의 名分을 찾기 위한 요인으로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金日成은 抗日빨치산경험을 최고의 經典으로 내세워 신화적인 軍事思想으로 조작하면서 단독전 개념을 세워 가고 있다. 金日成은 自體軍事力을 증강시켜 가면서 現代戰과 革命戰爭,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유기적 배합을 통하여 이른바 “南朝鮮人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軍事行動을 감행하여 全韓半島를 赤化하겠다는 것이다.

나. 軍事政策

(1) 國防自衛政策

北韓이 1962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추구하고 있는 군사정책은 한마디로 國防自衛政策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쿠바事態에서 蘇聯의 무능과 中・印國境紛爭에서 中・蘇紛爭으로 이어지는 공산권 분열을 목도한 북한은 1962년 12월 黨中央委員會 第4期 5次全員會議에서 ‘造成된 情勢와 관련된 國防力 강화문제’를 토론하고 “人民經濟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立場에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原則을 결의하였다.

北韓이 종전 中・蘇依存政策으로부터 自衛政策으로 軍事政策을 전환하게 된 것은 中・蘇 대립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태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소련의 원조중단이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中・蘇 對立속에서 北韓이 親中國의인 외교정책을 취하자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와 경제원조의 중지 및 삭감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부득이 自衛政策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 原則에 따라 북한은 그후 군사비

를 대폭 증액시켜 우선 3개월간의 戰爭持續을 감당할 彈藥, 油類 및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무기의 자체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전의 中·蘇 軍事敎理의 모방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地形的 특수성과 6·25戰爭의 敎訓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軍事敎理의 개발도 시도하였다.

「金日成主義 原理」第8章 ‘自衛的 國防建設’에는 自衛路線의 본질을 “自力更生の 革命精神을 發揚하여 자체의 革命武力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自衛政策은 具體的으로 아래와 같은 4大軍事路線으로 표명되었다.

(2) 4大軍事路線

(가) 全人民의 武裝化

‘全人民의 武裝化’란, 말 그대로 北韓의 全住民(남녀노소 불문)을 무장화하여 兵員으로서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共產主義革命이란 노동계급을 革命軍化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大衆軍思想이 기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른바 無產階級 全員을 공산주의 혁명의 전투요원화함으로써 계급적 敵과 투쟁하도록 하고, 全住民의 사상무장과 전투기술 수준을 높혀 金日成獨裁의 안정을 기하며, 전쟁시에는 정규군에 편입시켜 전선과 후방 지역 및 직장단위 방어와 게릴라전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¹¹⁾

북한은 6·25南侵 당시 民兵組織과 같은 예비군을 보유치 못하여 병력보충이 어려웠다는 점과, 지역단위의 방어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후방을 死守하려는 주민들의 戰意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무질서한 후퇴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패전요인으로 분석한 바 있

11) 國際問題研究所 編, 같은 책, p.172.

다.

이러한 패인분석에 따라 북한은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인민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全人民의 武裝化를 추진해 왔는데, 1970년 11월 제5차 黨大會 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은 “國防力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인민이 다 무장하고 전체 인민이 다 적을 미워하며 전체인민이 다 달라붙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 어떠한 원썩라도 능히 打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인민의 武裝化路線은 공세시에 정규군병력의 보충을 기하며 수세시에는 비정규군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고 있어 북한은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戰鬥兵力化하는 多兵力主義를 고수하고 있다.

(나) 全地域의 要塞化

‘全地域의 要塞化’란, 북한 전역을 戰場化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공격과 방어의 완벽을 기하려는 전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북한은 6・25戰爭의 패전요인이 북한 전역에 방위시설과 군사요새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전지역 요새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즉, 6・25남침시 유엔군에게 제공권을 압도당해 수송망이 마비됨으로써 軍需支援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유엔군의 반격으로 전선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지역단위의 방위시설과 대피시설의 준비가 전혀 없어 戰時 생산보장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 패전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지역에 지역단위 방어 지탱점과 요새

12) 國際問題研究所 編, 같은 책, p.173.

화 진지를 형성함은 물론 중요 산업시설과 전략물자 비축소 등을 지하화하여, 유사시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쟁을 수행토록 대비한다는 방침아래 북한 전지역의 요새화를 추진하였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總和報告에서 김일성은 “4대군사로 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온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들까지도 다 요새화하였다.”고 말해 北韓 全域이 문자 그대로 요새화되었음을 밝혔다.

(다)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幹部化’란, 장교와 사병을 막론하고 人民軍 누구나가 한 등급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군자체의 전투력을 높이고 軍幹部를 대량 양성해 됨으로써 필요시 武力의 급속한 확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³⁾

북한은 6·25南侵時 전쟁지도능력이 없는 지휘관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세한 유엔군의 현대전에 대응할 작전수행 능력이 부족했던 점, 특히 中共軍과의 협동작전은 물론 각 부대간의 협동작전이 미숙했다는 사실들을 패전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군의 간부화’정책은 ‘전인민의 무장화’ 정책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는 戰時에 급속한 부대 증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동원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전체인민이 다 군대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먼저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듦으로써 전체인민이 무장하게 될 때 지금의 사단은 군단으로, 연대는 사단으로, 대대는 연대로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라) 全軍의 現代化

‘全軍의 現代化’政策은 현대전과 전면전에 대처 가능한 최신투

13) 國際問題研究所 編, 같은 책, p.174.

기의 도입 및 개발, 고도의 전투기술 습득, 각종 기재의 보강으로 韓國軍은 물론 駐韓美軍의 전력보다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¹⁴⁾

金日成은 1966년 10월 노동당대표자회의 연설에서 4대군사노선과 관련하여 “현대전 요구에 맞게 군을 현대적 무기,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켜야 한다. 무기현대화는 최신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해서 제작되어야 하며, 산과 해안선이 긴 한반도의 지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6·25경험이 보여준 바와 같이 타국의 무기와 전술의 敎條主義的 모방은 국방에 심대한 손실을 주므로 군현대화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발전시키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 노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機甲・機械化, 砲兵火力의 自走化 및 射程距離의 극대화, 渡河裝備의 현대화, 核投發手段의 보유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誘導彈, 高速艇과 잠수함 및 高性能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전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4대군사로선」은 주로 6·25남침 전쟁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특히 패인분석에서 나온 것으로서, 1950년 12월 21~23일 慈江道 滿浦 別午里에서 개최된 勞動黨 제2기 제3차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現情勢와 當面課題’라는 報告를 하면서 ① 병력보충의 곤란 ② 地域單位 防禦體制의 不備 ③ 軍需支援體制의 미비 ④ 戰爭指導能力의 不充分 및 作戰遂行能力의 不足 등을 6·25戰爭의 敗因으로 分析한 바 있다.

바로 이 敗因의 修正이 「4대군사로선」이라는 軍事政策으로 나타났는 바, 1978년 9월 9일 북한정권창건 30주년 기념보고에서 김일성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인민군대

14) 國際問題研究所 編, 같은 책, p.174.

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고 호언하고 「4대군사로선」이 북한의 변함없는 기본노선임을 명백히 하였다.

다. 軍事戰略

북한의 軍事戰略을 金日成은 抗日遊擊鬪爭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해방 이후 소련의 지도와 원조로 人民軍을 창설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毛澤東 등의 軍事思想을 敎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6·25南侵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소련군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戰爭의 와중에서는 소련의 電擊戰戰略과 毛澤東의 유격전사상을 병용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韓國戰爭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군사전략을 再定立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휴전 이후 무장계렬라 南派 등의 직접경험과 쿠바사태, 越南戰爭, 中東戰爭 등의 간접경험을 교훈삼아 소위 金日成의 ‘主體戰略’이라는 것을 수립하였다. 金日成主體戰略이란 現代戰과 革命戰의 合法則性으로 速攻機動攻勢戰略과 包圍殲滅戰略으로 구성된 소련식 군사전략과 大部隊 遊擊戰略인 毛澤東式 군사전략의 부분적 융합과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北韓의 軍事戰略은 유사시 電擊戰形式의 速度戰에 의해서 韓國內의 全縱深을 단시일내에 석권하거나 혹은 수도권의 制限的인 점령을 추구할 수 있는 단기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¹⁵⁾

(1) 先制奇襲戰略

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戰略的 기습선제공격으로

15) 國際問題研究所 編, 같은 책, p.177. 및 國防部 編, 「國防白書」(1990. 11), p.74. 參照.

부터 非正規軍인 武裝特攻部隊에 의한 戰術的 기습선제공격 등 多様な 概念이다.

북한은 최근 戰車師團과 車輛化・機械化師團을 旅團으로 개편하고 보병여단을 차량화하였으며, 기갑능력을 강화하고 戰車를 輕量化하는 등 ‘무장력의 輕量化+走力’에 의한 高度의 特殊戰 準備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DMZ의 바로 북쪽에 軍隊・砲・彈藥 및 기타 보급품을 집중시켜 왔고, 地上戰力의 70% 以上을 平壤-元山 以南의 前方에 배치함으로써 기습능력을 강화시켜 놓고 있다. 또한 북한은 休戰線 直後方의 동굴진지에 砲를 設置해 놓고 있으며, MIG戰鬪機를 위한 견고한 비행장을 建設해 왔다. 機甲部隊들도 DMZ에서 60킬로미터 이내의 位置에 배치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南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一般的 관측으로는 북한은 對南軍事力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軍事潛在力에서는 열세에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 전체인구의 1/2, 북한 GNP의 2배가 넘는 京仁地域을 조기 탈취하려고 획책할 것이며, 공격기동장비의 集中 및 전진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선제공격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기습선제공격으로 유리한 戰略的 狀況을 일단 達成하여 놓고 政治協商을 제의함으로써 한국우방국(특히 美國)들의 支援口實을 봉쇄시키려는 方策, 즉 ‘先 軍事的 占領 後 政治的 協商’이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⁶⁾

(2) 速戰速決戰略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機動力인데, 北韓은 軍의 現代化政策을 계속 추진하여 M1G-29기 및 SU-25기 등 고성능 항공기를 도입하였는가 하면 미사일・戰車 등 정규군의 기동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16) 柳仁澤, 앞의 책, pp.212-213.

短期決戰 내지 電擊戰 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別稱되고 있으며, 金日成은 한때 ‘100日戰爭, 10日戰鬪 및 3日占領’ 등의 극단적인 表現으로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기도 했다.

한국의 심장지대인 京仁地域의 戰略的 중요성과 地理的 근접성은 이 전략채용의 변함없는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4차에 걸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戰爭, 포클랜드紛爭 및 최근의 걸프전쟁 등을 통해서 短期決戰의 필연성이 부각되고 있다.

北韓은 이를 위해 기계화 및 기동화된 戰力を 確保하는 한편, 개량형 스커드미사일 양산을 비롯한 地上軍 및 空軍의 火力增強, 해상병참선의 차단을 위한 잠수함 확보, 고속상륙정 및 火力支援艇증강, 화학탄 개발·보유 및 투발을 위한 대량의 放射砲 전진배치 등 速戰速決能力 確保를 위한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3) 總力戰戰略

북한의 總力戰戰略은 軍事와 政治戰의 結合, 軍事와 經濟戰의 結合, 軍事와 外交戰의 結合, 軍事와 心理戰의 結合 등으로 집약된다.

總力戰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戰爭의 國民化와 産業化 추세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兩次 世界大戰을 통해서 전세계가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現代戰은 그 규모·기간·참가범위를 막론하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형태로 전개될 것인바, 북한만이 이 전략을 독점수행한다는 개념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군사전략의 보편적인 패턴이라 할 것이다.

(4) 配合戰略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戰略이란 毛澤東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軍事戰略을 結合하여 한반도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主體的 戰略’이라는 것으로, 大規模인 正規作戰과 非正規인 유격전을 配合하여 相對를 도처에서 攻擊하는 戰線없는 戰爭으로 남한 全域을 同時 戰場化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즉, 이것은 전선에 상대방 主力軍을 붙잡아 놓고 후방에서는 人民抗爭을 유발시켜 全面攻勢를 취한다는 것이다.¹⁷⁾

金日成은 戰爭에 있어서 勝利의 決定的 要素는 正規戰과 非正規戰인 유격전을 配合하는 것이라고 強調한 바 있는데, 1972년 4월 19일자 노동신문은 ‘항일혁명투쟁의 탁월한 전략・전술, 혁명무력 건설의 위대한 강령적 문헌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 출판에 즈음해서’란 논설에서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전인민화 항쟁을 결합하는 것은 상비무력을 핵심으로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전투대오로 꾸려 거족적인 투쟁력량을 마련하고 대규모적인 정규작전과 영활한 유격전을 배합하여 적들을 도처에서 공격하며 소멸하여 조국땅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現在 大規模 특수전 부대를 편성하고 약 10萬餘名の 高度로 훈련된 특수전 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海上 및 空中으로 同時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은 약 1만 8천여명으로 유사시 후방 地域에 大量 침투시켜 配合戰으로 南韓全地域을 同時 戰場化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17) 白光一, “北韓의 軍事環境과 軍事政策”, 「韓半島 周邊의 軍事環境」(世宗研究所, 1988.10), p.25.

18) 國防部 編, 앞의 책, p.74. 및 p.80. 參照.

4. 軍事組織・制度

가. 軍事機構

북한의 군사체계는 黨組織을 통한 政治指導體系와 政權機關을 통한 軍事指揮體系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면서 모든 武力의 指揮・統率이 金日成에게 集中되도록 되어 있다. 주요 군사기구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1) 國家主席

북한 憲法에 따르면 主席은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으로서, 또한 中央人民委員會 首位로서, 또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²⁰⁾ 中央人民委員會의 權限은 “국방 및 국가 정치보위사업의 지도와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및 將領 칭호의 수여, 그리고 유사시 전시상태 및 동원령의 선포” 등이다.

(2) 國防委員會

이 기구는 主權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內에 설치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黨軍事委員會에서 결정된 국방에 관한 기본군사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위원장의 대내외 군사정책에 관해 자문에

19) 柳仁澤, 앞의 책, pp.215-217.

20) 北韓憲法 93條, 101條, 103條 參照.

한편 북한은 1991.12.24.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제19차 全會會議에서 “金正일을 人民軍最高司令官으로 추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人民軍最高司令官은 創軍 이래 金日成이 맡아 왔으며, 북한헌법 93조에서는 “主席은 全般的인 武力의 最高司令官”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金正일을 人民軍最高司令官으로 추대한 것은 權力承繼 本格化的 布石으로 볼 수 있다.

응함으로써 군사정책, 군사작전, 군사동원 등 주요 부서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主席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임명은 主席의 제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3) 黨軍事委員會

黨軍事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와 各級 地方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로 조직되어 있다.

黨中央委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의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人民軍을 포함한 全武裝力強化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指揮한다.(黨規約 27條) 이처럼 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군사위원회의 업무가 대부분 국방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기본적인 군사정책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地方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는 黨中央委 軍事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전시동원체제의 검토, 民兵組織의 운영관리, 民兵訓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4) 人民武力部

人民武力部는 軍의 최고통수권자인 主席밑에서 國防委員會의 지도를 받으며 戰·平時를 막론하고 북한의 軍을 지휘·통솔하는 집행기관이다. 특히 북한은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1차회의에서 인민무력부를 政務院으로부터 분리시켜 主席 또는 黨·政聯合體인 中央人民委員會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운영케 하고 있다.

歷代 人民武力部長은 崔庸健(1948. 2)→金光俠(1957. 9)→金昌奉(1962. 10)→崔賢(1968. 12)→吳振宇(1976. 5) 등이 맡아 왔다.

(5) 總參謀長

북한의 人民軍은 地上軍·海軍·空軍을 人民軍總參謀長이 총괄·지휘하는 單一統合軍體制이다. 평시에는 人民武力部가 軍政을, 人民軍總參謀部가 軍令權을 행사한다.

歷代 總參謀長은 崔庸健(1848. 2)→姜健(1950. 6)→南日(1950. 9)→金光俠(1953. 8)→李權武(1957. 9)→金昌奉(1959. 7)→崔光(1963. 2)→吳振宇(1969. 2)→吳克列(1979. 9)→崔光(1986. 11) 등이 맡아 왔다.

人民軍의 編制는 人民軍 總參謀部 이하에 16個 軍團과 機械化司令部, 砲兵司令部, 輕步教導指導局,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등이 있다.

나. 黨·軍關係

노동당규약 제46조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軍의 黨에 대한 從屬關係, 軍에 대한 黨優位原則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백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대오안에 자각적으로 혁명적인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人民軍隊內의 黨組織들이 군사분야에 대한 黨的 指導를 강화할 것과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워 軍事政治課業을 원만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人民軍隊內에는 노동당 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로서의 각종의 정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서 人民軍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軍隊內 政治組織으로는 「勞動黨」組織과 「社勞靑」組織이 있다.

人民軍內 당조직, 즉 軍黨委員會組織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는 명백하지 않으나 대체로 1956년부터 1961년 사이에 정식으로 조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1961년 10월 4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에는 軍黨委員會 組織이 규정되어 있음.)

이 조직은 中央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유일적으로 망라”하는 「朝鮮人民軍 黨委員會」가 있고, 大隊級 이상에는 黨委員會가, 中・小隊單位에는 黨細胞와 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데,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 (당규약 제7장 제50조) 그리고 人民軍 黨委員會는 노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그 指導밑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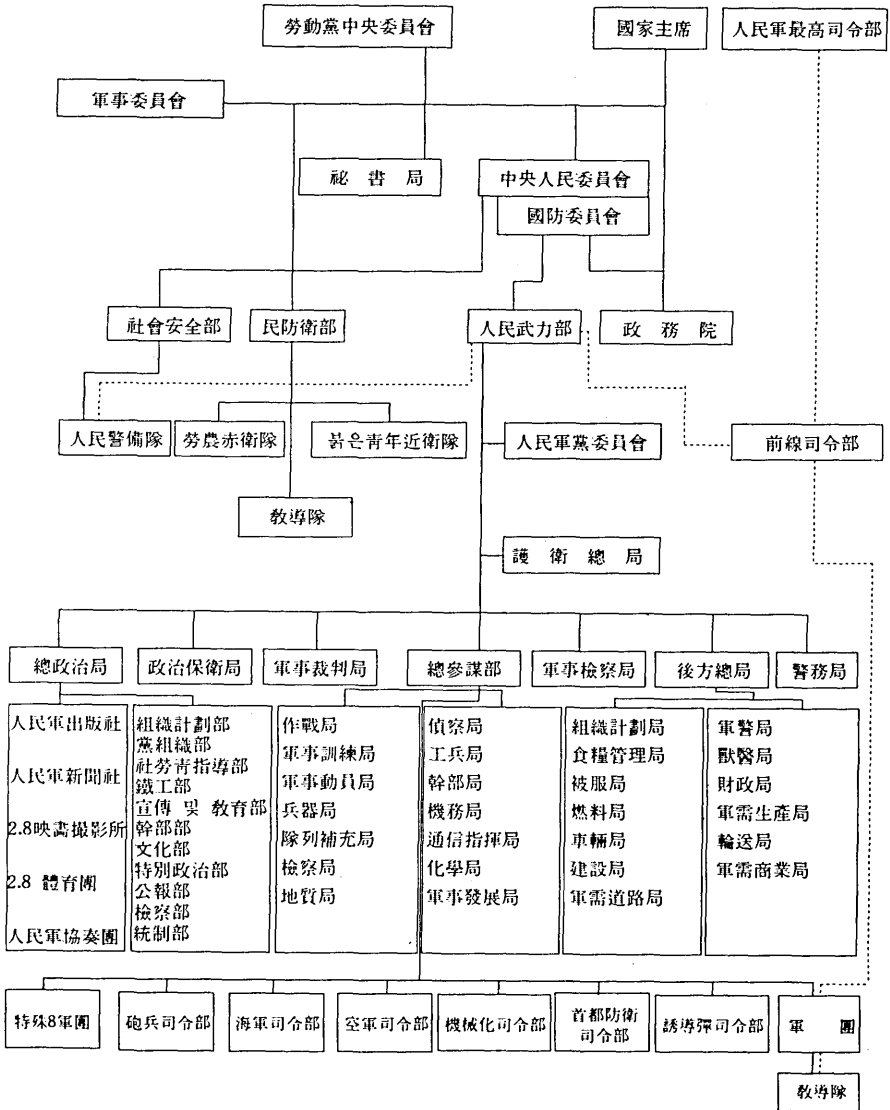
軍內에는 또한 黨위원회와는 별도로 政治機關을 조직하고 있는데 「人民武力部」산하에는 노동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人民軍總政治局」이 있고 大隊級 이상의 부대에는 政治部가 있다. 이 政治機關은 黨의 정책과 결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총참모부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1969년부터는 人民軍內에 政治委員制를 도입하였는데 師團과 聯隊단위에는 政治委員, 大隊와 中隊단위에는 政治指導員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도록 하였으며, 人民軍黨委員會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命令書에 政治委員의 署名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副署制度를 도입하였다. 또한, 人民軍內에는 部隊單位에 따라 「社勞靑」도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각급 노동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밑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非黨員을 노동당의 지도밑에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人民軍內 노동당 조직은 二重・三重으로 統制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하여 政治 및 軍事系統의 二元的 체제에 따른 兩者 간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²¹⁾

21) 柳仁澤, 앞의 책 pp.217-220.

軍事組織體系

— 平時
 ... 戰時



출처: 「北韓概要」(統一院, 1990. 12), p. 408.

다. 軍服務

北韓은 義務兵制度에 따라 만17세에 징집하고 있다. 그러나 成分不良者 및 進學하여 특수분야를 전공하는 者는 징집에서 제외하고 있다.²²⁾

士兵의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에 의하여 地上軍은 3년 6개월, 海・空軍은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육・해・공군 공히 통상 10년까지 복무토록 하여 27세에 제대시키고 있다. 특히 경보병 및 저격부대요원은 10~13년간 군에 복무토록 하고 있다. 인민군의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제148호」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인민무력부의 방침과 노동당의 군사정책에 의하여 장기 복무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군복무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紀律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黨中央委 5期10次全員會議에서 ① 강인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기율 등 「戰鬥力強化 5大方針」이 제시되었다.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대회」에서 金日成은 人民軍最高司令官의 이름으로 ① 軍事規定의 철저한 준수 ② 武器의 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 軍事命令의 철저한 집행 ④ 黨 및 政治組織들이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⑤ 國家機密・軍事秘密・黨組織秘密의 엄숙한 지킴 ⑥ 社會主義的 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軍事政治訓練에의 어김없는 參與 ⑧ 人民에 대한 사랑 및 人民財産의 침해금지 ⑨ 國家재산과 軍需物資의 철저한 보호 ⑩ 軍隊안의 一致團結 등과 같은 「軍務生活 10大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軍服務를 마치게 되면 除隊와 동시에 직장을 배치받게 되며, 배

22) American University, Foreign Area Studies,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326.

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를 하고 大學進學을 하기도 한다. 軍指揮官은 「金日成軍事綜合大學」, 「第1綜合軍官學校」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本科는 3년 내외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軍階級 構造는 軍官은 14種, 士兵은 6種으로 나뉘어져 있다.

軍官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元帥, 次帥 ② 장령급에 大將, 上將, 中將, 少將 ③ 상급군관에 大佐, 上佐, 中佐, 少佐 ④하급군관에 大尉, 上尉, 中尉, 少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士兵의 경우는 ① 하사관에 特務上士, 上士, 中士, 下士 ② 兵은 上等兵, 戰士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²³⁾

5. 軍事能力

軍事能力은 일반적으로 2가지의 武力形態로 대별된다. 그 하나는 常備軍 戰爭遂行能力(常備戰力)이고, 다른 하나는 豫備軍 戰爭遂行能力(豫備戰力)이다.

常備戰力은 일반적으로 현역군 능력과 동일하지만 그 國家의 軍事動員態勢 여하에 따라서는 예비전력일지라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즉 북한이 南侵戰을 감행할 경우 戰爭開始時間의 選擇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豫備戰力의 대부분을 이미 동원한 후 현역화시킨 다음에 전쟁을 도발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韓國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소부터 즉각 현역화가 가능하도록 수립된 북한 군사체제상의 특성으로 보아 이미 軍團에 배속시킨 사단 편성의 교도대는 그 訓練水準과 裝備保有狀態를 보더라도 常備戰力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23) 國際問題研究所 編, 같은 책, pp.326-327.

그러나 일반적인 西方 軍事組織上의 개념에서 보는 상비전력의 세부 분야는 육군, 해군 및 陸戰隊(해병대), 공군, 그리고 特殊軍 등 각군별 병력규모와 장비현황 및 攻防戰 遂行을 위한 戰力展開 狀態(兵力配置)가 망라된다. 예비전력은 일반적으로 準軍事部隊 能力이라고 볼 수 있으나 前述한 特殊性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군사조직상의 편제와 규모, 훈련 및 장비보유 상태가 포함된다.²⁴⁾ 여기서는 북한 군사체제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서방 군사조직상의 개념에 따라 북한 군사력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常備戰力

(1) 兵力 및 部隊

북한의 상비전력은 1990년보다 5천여명 증가된 총 99만 5천여 명으로 육군 86만 8천여명, 해군 4만 5천여명, 공군 8만 2천여명이며 兵力增加 이유는 스커드부대 증편, 함정보유수 증가, 항공기 및 레이다기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²⁵⁾

북한의 이같은 常備 軍事力 규모는 한국의 총 병력 65만 5천여 명 규모의 1.5배 수준이며, 이를 1991년 10월 영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가 「1991-1992년도 군사력 균형」을 통하여 발표한 북한 총병력(111만 1천명)과 비교하면 북한의 총병력 우위는 더 높아진다.

陸軍의 機動部隊 수를 보면, 북한은 인민무력부 예하에 9개의 정규군단, 4개의 기계화군단, 1개의 전차군단과 2개의 포병군단을 포함하여 16개의 군단급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사단보유수는 26

24) 白鍾天,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統一研修院, 1989.8), p.47.

25) 國防部 編, 앞의 책, p.127.

개 步兵 및 車輛化師團, 23개 教導師團을 포함하여 49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教導師團은 한국의 동원 및 향토사단과는 달리 정규군 수준이다. 旅團의 경우 6개 보병여단, 23개 기계화여단, 14개 전차여단, 22개 경보병 특수여단을 포함하여 총 65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기동부대 구조면을 볼 때 북한은 機械化, 戰車 및 特殊部隊 위주로 편성된 공격형의 여단급 부대를 기본전술 단위로 하여 高速浸透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에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국지형에 적합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자주포 포병군단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지휘구조로 개선해 놓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투부대 중에서 특수임무부대, 즉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부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것이 특징인 바, 북한은 세계 최대규모인 10만여명으로 구성된 特殊戰部隊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능력만도 약 1만 8천여명이다. 이러한 병력을 레이다에 잘 探知되지 않는 250여대의 AN-2기와 한국군의 주력 헬기이기도 한 500系列 휴즈 헬기 80여대를 이용하여 후방 깊숙히 침투시킬 전략이 예견되는 바, 이는 유사시 配合戰으로 南韓의 前·後方地域을 同時 戰場化할 수 있을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²⁶⁾

한편 配置面에서 북한의 지상군 주력부대는 평양과 원산을 잇는 平元線 이남 전방지역에 60여개 정규사단 및 여단을 推進配置함으로써 부대의 조정이나 재배치 없이 현위치에서의 즉각 공격이 가능하다. 이들 부대는 全戰線에 걸쳐 坑道化된 진지를 중대단위로 구축하여 제한된 독립전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기계화 부대 추진 및 물자의 비축용 지하경도를 대량 구축해 놓고 있다.

26) 白鍾天, 앞의 책, p.48.參照.

또한 군단, 여단으로 다양하게 편성된 대규모 전차부대들은 주요 공격축선상에 縱深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격시 돌파구 확장 및 戰果擴大를 기하려는 것으로 縱深기동작전부대의 투입을 통한 전격전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2) 裝 備

(가) 地上裝備

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하여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62전차, M-1983전투용 장갑차, 각종 자주포, 다연장 방사포, AT-3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등은 성능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며,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은 全韓半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⁷⁾

북한의 지상군 주요 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54계열 전차(T-54/55/59 등) 2,760여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신형 T-62전차 430여대와 구형인 T-34전차 410대를 포함하여 총 3,6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련제 T-72형 전차의 모방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전차보유면에서 북한은 한국의 총 전차보유대수 1,550여대보다 2배 이상의 수준이며, 남북한共に 우수한 對戰車武器를 갖고 있으나 북한 전차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인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縱深이 짧은 한국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는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된다.

장갑차는 BTR계열 및 M1973형 등 2,500여대를 갖고 있다.

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7,230여문(76.2밀리/100밀리/130밀리/152밀리 등 다양한 口徑)의 曲射 및 平射砲, 그리고 2,250여문(107밀리/122밀리/140밀리/240밀리)의 放射砲를 포함하여 총 9,500여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사거리 20Km 이상의 장거리 야포

27) 國防部 編, 앞의 책, p.105.

600여문과 방사포 100여문, FROG 미사일 20여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커드 미사일 및 170밀리 자주포 등 長射程 무기의 생산배치로 전략적 차원의 공세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걸프전쟁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던 스커드B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였다.

북한은 1976년부터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도입, 자체 개발하여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量産體制에 돌입한 후 현재는 연간 약 100여기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커드 B형의 개량형인 스커드 C형 미사일을 생산하여 휴전선 북방 약 50Km지역에 실전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이란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세계 미사일 수출국가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걸프전에서 사용되었던 스커드B 미사일의 성능보다 훨씬 우수한 스커드C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사정권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는 보다 사정거리가 긴 신형 지대지유도탄(로동 1호)을 개발, 시험중에 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FROG-5 및 FROG-7 로켓은 사정거리가 각기 50여Km 및 70Km에 달하는 長射程火器로서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발사할 때 수도권 및 춘천, 속초선을 연하는 지역까지 재래식 포탄 및 화학·전술핵탄의 운반이 가능하다.

북한의 화포 중 야포 48%, 방사포 52%는 자주화 또는 차량탑재식이어서 기갑부대에 대한 근접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사포는 다발집중능력과 20Km 이상의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여 전투지역 깊숙히 있는 표적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1,000여톤의 化學彈 공격에 적합한 투발수단으로도 평가되고 있다.²⁸⁾

28) 國防部 編, 앞의 책, pp.128-130. 參照.

대량의 수륙양용 차량(500여대)과 조립식 S형 부교(2,300여개)로 장비된 도하공병은 병력 및 장비의 強襲渡河作戰 支援能力을 갖추고 있다.

(나) 海上裝備

북한 해군은 총 710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투함 440여척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급과 R급 잠수함 24척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원함 250여척은 소해정, 상륙함, 공기부양정, 잠수정, 구조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舊型 함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형특성상 동·서함대로 분할하여 동해 400여척, 서해 300여척으로 분리·운영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있으며 소형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遠海作戰能力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추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의 對艦 기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도탄정은 사거리 25마일의 STYX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잠수함 및 잠수정을 다수 보유하여 남한 全海域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 隱密浸透 등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해안에 사거리 95Km에 달하는 SAM-LET 및 SILK WORM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 WORM은 서해의 仁川外港과 동해의 속초외항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한 해군은 지상군 1개 소대급의 무장병력을 목표지역에 기습착륙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주정인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70여척을 보유중이며, 이들 함정들을 동·서해에 각각 前進配置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기습공격 역량을 가일층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⁹⁾

29) 國防部 編, 앞의 책, pp.108-109. 및 pp.131-132.參照.

(다) 航空裝備

북한 공군은 전투기(SU-7/25, MIG-15/17/19/21/23/29) 약 760여대, 폭격기(IL-28) 80여대, 수송기(AN-2/24, IL-18/62, LI-2, TU-134/154) 480여대, 헬기(H-500, MI-2/4/8/17) 약 290여대 등 총 1,62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50년대에 생산된 구형 전투기인 MIG-15/17 전투기가 300여대로 보유 전술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전투기 중 MIG-21/23/29기 및 SU-7/25기는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기존의 MIG-15/17/19기는 수도권 공격이 가능하다.

북한의 최신예 전투기인 MIG-29기는 1988년초 소련에서 도입한 것으로 야간전투능력이 뛰어나며 한국의 주력기인 F-16기 보다 약간 빠르다. 한편 MIG-15/17 전투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쉽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서 全縱深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제한된 공중요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비해 숫적으로는 우세하나 대체로 공군 戰術機의 성능과 對地攻擊 능력면에서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 공군은 그들의 전력을 양적인 증가에서 속도, 항속거리, 武裝 및 電子戰 능력을 구비한 무기체계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MIG-23/29, SU-25기를 도입하는 등 질적인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MI-2헬기를 자체생산·배치함으로써 특수전부대 수송 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신형 레이더 도입·배치로 低·中高度 탐지 능력을 보장하였다.³⁰⁾

한편, 북한은 70여개의 항공기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트기지, 비제트기지, 비상활주로 등 20여개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

30) 國防部 編, 앞의 책, pp.110-111. 및 pp. 132-133. 參照.

• 배치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40%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어 공중기습전에서의 기동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참고로 英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IISS)가 1991년에 발표한 南北韓軍事力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 도표와 같다.

<南北韓 軍事力 比較>

| 구 분 | | 북 한 | 한 국 |
|------------------|---------------|-----------------------------|---|
| 인 | 구 | 23,275,600 | 44,338,200 |
| 정 | 규 군 | 1,111,000 | 750,000 |
| 육 | 군 | 1,000,000 | 650,000 |
| 기 갑 력 | 중 전 차 | 3,500 | 1,550 |
| | 경 전 차 | 650이상 | - |
| | 장 갑 차 | 4,340 | 2,080 |
| 포 | 건 인 포 | 2,500 | 4,000 |
| | 자 주 포 | 3,300 | 100이상 |
| | 다 발 로 켓 포 | 2,300 | 140 |
| | 지 대 지 미 사 일 | 69 | 12 |
| | 박 격 포 | 11,000 | 5,300 |
| 대 전 차 포 | 무 반 동 포 | 1,000 | ? |
| | 건 인 포 | ? | 8 |
| | 자 주 포 | 800 | 50 |
| | 대 전 차 유 도 무 기 | AT-1 Snapper AT-3 Sagger | TOW |
| 방 | 공 포 | 8,000(14,5mm ~ 100mm) | 600(20mm~40mm) |
| 지 | 대 공 미 사 일 | SA-7 | Javelin, Redeye, Sting- er, Hawk, Nike |
| 해 | 군 | 41,000 | 60,000(해 병 25,000포 함) |
| 잠 | 수 함 | 22 | 4 |
| 구 | 축 함 | - | 9 |
| 프 | 리 개 이 트 함 | 3 | 26 |

| | | | |
|-------------|-------------|----------------------|----------------------|
| 초 계 합 | 코 배 트 함 | 3 | 4 |
| | 미사일적재고속공격정 | 36 | 11 |
| | 어뢰적재고속공격정 | 173 | - |
| | 초 계 정 | 154 | 68 |
| 소 해 함 | | 20 | 9 |
| 지 원 함 | | 7 | 11 |
| 공 군 | | 70,000 | 40,000 |
| 전 투 기 | | 800 | 473 |
| 전 술 기 | 폭 격 기 | 80 | - |
| | 전 투 기 | 722 | 288 |
| 지 원 기 | 수 송 기 | 280 | 36 |
| | 헬 기 | 277 | 20 |
| | 훈 련 기 | 210이상 | 119 |
| 기 타 | 공 대 공 미 사 일 | AA-7Apex, AA-2 Atall | Side Winder, Sparrow |
| | 지 대 공 미 사 일 | 176 | — |

출처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London, 1991), pp.167-170.

나. 豫備戰力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全人民의 武裝化’에 따라 현재 600여만명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개인 火器로부터 공용화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年間 160시간 내지 500여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中共軍의 철수를 계기로 同年 1월 「勞農赤衛隊」를 창설하였으며 1962년에 「教導隊」를 조직하였고, 1970년 9월 「붉은靑年近衛隊」를 발족시켰다.

豫備軍의 指導體制은 人民武力部와 黨軍事部 系統으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人民武力部는 各 道別로 설치되어 있는 總10個의 地區 司令部를 통해 예비군의 핵심인 교도대를 지휘하고 黨軍事部는 民防衛 등 예비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를 관장토록 體系化하였다.³¹⁾

(1) 敎導隊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17세 이상 40세까지의 住民(女子: 17~30세)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단위의 지역과 직장규모에 따라 師團과 旅團으로 編成되어 있다.

교도대는 小火器 100%, 共用火器 70~80%가 지급되어 있으며 훈련시간도 年間 500시간에 달하여 현역에 준하는 훈련, 편성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戰爭 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後方防衛 및 豫備隊로 투입된다.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124만명이다.

(2) 勞農赤衛隊

노농적위대는 41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行政單位別 梯隊로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對空防衛를 基本任務로 하고 있다. 小火器는 100%, 共用火器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으며 훈련시간은 年間 160시간으로 노농적위대 隊員은 약 380만명이다.

(3) 붉은靑年近衛隊

高等中學校 5~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學校 單位別로 中隊 또는 大隊級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放學을 이용하여 7일간 붉은靑年近衛隊 야영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기

31) 柳仁澤, 앞의 책, p.p.225-226. 및 統一院 編, 「北韓概要」(統一院, 1990.12), pp.420-423. 參照.

도 한다.

주요임무는 ‘反革命的 要素’를 제거하여 북한 지배층을 死守하는 親衛隊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軍 下 級幹部 보완을 위한 後備隊, 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小火器는 100%, 共用火器는 일부가 지급되어 있는 붉은청년근위대는 年間 30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81만명의 隊員으로 조직되어 있다.

(4) 人民警備隊

軍에서 제대한 靑壯年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로 동원·조직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경비대의 하전사는 정규군 招募對象者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군관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의 正規教育을 이수해야 한다.

인민경비대는 社會安全部 5局(警備局)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小火器 및 共用火器를 모두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정규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人民警備隊의 規模는 약 14만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다. 核 및 化生戰 能力

북한은 1960년대 이후 原子力開發을 시도하여 1964년부터 平北 寧邊지역에 대규모의 原子力 研究團地를 조성하고, 우라늄鑛山과 정련 및 核燃料加工施設을 설비하였으며, 1965년 소련으로부터 시험용 원자로 1기를 도입,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축적한 결과 독자적으로 제2원자로를 개발·완공하여 현재 가동중이며 제3원자로도 1992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 1985년 제3원자로와 동시에

건설하기 시작한 핵연료 再處理施設도 1993년부터는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시설로부터 다량의 플루토늄을 抽出할 수 있어, 1990년대 중반기에는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³²⁾

그러나 유엔의 對이라크 핵사찰 결과 당초 서방측 정보판단보다 이라크의 핵개발수준이 훨씬 빨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폐쇄사회인 북한은 우리의 분석보다 핵개발 추진속도가 훨씬 빠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초미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핵무기는 이를 목표지점에 운송할 수 있는 투발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은 핵폭탄 투발이 가능한 MIG-21/23/29, SU-25, IL-28 및 FROG-5/7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커드B 미사일 이외에 사정거리 500Km인 스커드C 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해 놓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탄두중량에 따라 사정거리가 600~900Km에 달하는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이미 실전배치한 스커드C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500Km라고 하는 것은 휴전선으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남한 전지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권에 포함되게 되므로 이는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임은 물론이고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군비경쟁의 가속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化生武器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무기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가리워져 軍事爭點으로 크게 부각되

32) 國防部 編, 앞의 책, p.113.

지 않았을뿐 실제적인 군사위협은 오히려 化生武器가 개발중인 핵 무기보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 등 有毒가스를 대량 생산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세균무기인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작용제까지 培養, 생산하여 生體實驗을 한 바 있다.³³⁾

聯隊級까지 化學小隊를 편성하여 化生방 무기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대체로 總量 180톤 내지 250톤 정도의 化生放武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07mm 口徑 이상의 포와 로켓포, FROG-5, 스커드B, 항공기 등으로 운반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可恐할 化生放武器가 전진배치된 부대에 각 45~62톤씩 비축되고 있다는 사실로, 가히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된다.³⁴⁾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 국민이 느꼈던 '화생방'공포를 생각할 때 북한의 화생전무기는 핵위협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또 하나의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6. 結 言

以上에서 살펴본 북한의 군사력을 常備戰力만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 보더라도 북한은 奇襲攻擊能力을 높였고, 速度戰能力을 높였으며, 보다 상대방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軍事能力을 보유허게 되어 그 결과 단독으로라도 전투할 능력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³⁵⁾

33) 國防部 編, 앞의 책, p.114.

34) "CW : North Korea's Growing Capability", Jane's Defence Weekly(14 Jan. 1989), 白鍾天, 앞의 책, p.52. 再引用.

35) 白鍾天, 앞의 책, p.55.

北韓의 常備軍事力은 人口와 國土面積比率로 볼 때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第2位이며, 1991년도 현재 推計人口 2,300만명을 기준할 때 人口 1,000名當 43名이라는 軍人構成比率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최고율이었던 일본의 軍인구성비율과 맞먹는 것이다. 여기에 현역에 준하는 敎導隊를 비롯하여 勞農赤衛隊, 붉은靑年近衛隊 및 人民警備隊 등의 豫備兵力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이미 동원된 상태라고 간주해야 한다.³⁶⁾

북한 軍事力에 대해 주목할 사항은 공격위주의 편성과 장비이다. 북한은 韓國 軍事力에 비해 훨씬 강한 火力과 빠른 기동장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地上軍 正規兵力의 10%를 차지하는 10만여명의 特殊部隊와 함께 機械化, 輕量化, 機動化된 부대편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配合를 통해 항시 공세적 군사역량을 갖추겠다는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의미해 준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그들의 이른바 對南赤化統一戰略과 맞물려 停戰狀態下에 있는 韓半島에서 緊張과 戰爭의 근원이 될 수 있다. 現在 全般的인 國際情勢의 緊張緩和 및 平和指向趨勢 속에서 북한의 對南軍事的 冒險主義 追求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對南赤化革命路線이 포기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緊張狀態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는 계속 紛爭可能地域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또다시 戰爭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 樣相은 6·25 戰爭時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있을 전쟁의 樣相은 全韓半島가 同時 戰場化될 것이며, 아마도 在來式 戰爭의 類型으로는 가장 高級化된 무기가 많이 동원될 것이며 따라서 엄청난 戰禍가 수반되리라는 것은 그리

36) 白鍾天, 앞의 책, p.55.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6·25전쟁시보다 남북한 모두 兵力이 10倍 이상 늘었고 북한의 4大軍事路線과 우리의 國軍 現代化計劃에 의한 戰力增強은 6·25戰爭 當時의 8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戰力水準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991년 國防部가 펴낸 「國防白書」에 의하면 현재 자체방어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實戰配置되어 있는 現韓半島 狀況下에서 만약 전쟁이 또다시 발발한다면 1주일 이내에 240만명의 사상자, 한달 이상 계속될 경우 500만명 이상의 死傷者와 施設의 90%가 파괴될 것이라는 模擬戰爭實驗(War-game)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民族自滅을 초래하는 전쟁만은 결단코 막아야 함을 절감케 한다.

이제 南北關係는 더이상 敵對關係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南北間에 야기되는 問題들은 武力이나 暴力의 方法이 아니라 반드시 平和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國際的 關心의 對象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평화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이제 북한도 같은 民族으로서 共存共榮하면서 民族의 共同繁榮을 추구해 나가는 데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南北關係 改善 및 信賴構築을 통해 平和統一을 成就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民主統一論

— 北韓實態 — (통연 92-2-8)

1992年 2月 15日 印刷

1992年 2月 20日 發行

統一研究院

發行處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 73-13
電話 901-7123~4

印刷處 農園文化印刷(株)

